



『육상재난의 총괄! 대한민국 소방청!』

2018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

2018. 1.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

본 계획서는 소방청의 각 실·국별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일선 소방관서에서 부서별 소관업무 파악이 용이 하도록 편집되었습니다.

소방청의 정책목표별 주요업무계획은 별도로 작성·배포할 계획입니다.

Contents

1. 대변인실/	7
2. 119종합상황실/	13
3. 운영지원과/	17
4. 기획조정관/	25
5. 소방정책국/	53
6. 119구조구급국/	113
7. 중앙소방학교/	175
8. 중앙119구조본부/	185

1. 대변인실

Contents

1. 주요 소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	9
2. 소방현장으로 찾아가는 릴레이 홍보 /	10
3. 대학과 전문성과 스마트한 학생 아이디어 활용홍보 /	11
4.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맞춤형 소통 강화 /	12
5. 생활속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간접홍보 강화 /	13
6. 제13회「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적극 홍보 /	14

1 주요 소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정책
목표

소방청의 주요 정책 및 성과를 국민 눈 높이에 맞춰(알기 쉽고 바르게) 널리 알리기 위함 → 정책보도, 청·차장 기고, 정례브리핑 등

□ 주요정책 사전홍보로 언론관심 유도

- (일 시) 언론사에 보도(게재)해야 할 시점의 前주
- (내 용) 각 실·국의 주요정책(행사) 등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항
- (방 법) 보도 의뢰 전 반드시 대변인실에 검토 후 제출
 - 보도내용의 적정성 검토, 사전 계획되지 않은 경우 미보도

※ 홍보협의회 개최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6:00 ▶ 대 상 : 각 과 주무계장(15명)
▶ 내 용 : 월간 홍보계획 및 주간 보도 일정 확정, 주요 홍보과제 발굴 등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성과브리핑 정례화

- (일 시) 매 분기별(소방활동 실적), 수시(대형재난 및 주요정책)
- (발표자/장소) 각 실·국장 / 서울청사 브리핑룸
- (대 상) 신문, 방송, 통신사 등 소방청(행안부) 출입기자단, 소방전문지
- (내 용) 화재 및 구조구급 통계(분석), 법령 개정 등 주요 정책
 - ※ 화재<소방정책국>, 구조·구급<11구조구급국>, 법령 개정 등<해당 실·국>

□ 청·차장 기고문 게재

- (시 기) 각 실·국별 반기 1회 이상(청·차장 각 1회)
- (주 제) 시의성이나 영향성 등이 높은 소방청 주요 정책 등
- (대 상) 주요 일간지에 편중되지 않게 게재 협조(대변인실)

□ 추진일정

- 보도관련 홍보협의회 매월(수시)
- 정례 브리핑, 기고문 게재 매 분기별

2

소방현장으로 찾아가는 릴레이 홍보

정책 목표

소방정책 현장을 체감하며 새로운 도약과 위상을 재정립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변화된 소방대응 이미지를 언론에 노출 관리

□ 주요내용

- 방문대상 : 15개소 * 매월 1회 이상
 - (계절홍보) 계절별 이슈와 연계한 국민생활안전 현장 소방안전점검
 - 성탄.설.추석 명절, 봄.가을 행락철, 여름 휴가철 등
 - (밀착소통) 소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현장방문
 - 안전체험관, 문화재, 초등학교 등
 - (취약시설) 화재안전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 현장방문 점검
 - 양로원, 장애인시설, 쪽방 촌, 전통시장, 초고층건물 등
- 홍보방법
 - (오프라인) 현장 점검, 소통활동 등 보도자료 배포(사진, 영상)
 - (온라인) 휴머니즘+스토리+비주얼을 갖춘 콘텐츠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제작 및 이벤트 등 SNS 활용 홍보
- 추진방향
 - 소관부서 업무 추진일정과 병행하여 방문 일정 등 협의하여 추진
 - 정책 수혜자 및 이해 관계자 등에게 소방정책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소통될 수 있도록 방문자료 사전 준비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18.1월
- 업무소관 부서와 협조 추진 연중

3

대학과 전문성과 스마트한 학생 아이디어 활용·홍보

정책 목표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광고홍보의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환경변화에 맞는 홍보기법 개발 → 「젊은 감각의 홍보소재 발굴」

□ 광고·홍보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참신한 홍보소재 발굴

- (방법) 광고홍보학 전공자에게 한 학기 과제로 “소방홍보” 분야 부여
- (대상) 대학교 광고홍보학과
- (주제) 소방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 (평가) 팀별 과제 부여 등 담당교수 진행(디자인, 영상물, 광고 제작 등)
 - ※ 소방의 비전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홍보 콘텐츠·아이템 제출
- (시상)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가 평가, 우수 학생 시상
 - 우수작품 소방청장 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지급(추후 협의)

※ 학기 중 ‘소방청 젊음과 소통하다’ 특강 진행

- ▶ 일 시 : 4~5월중 / 대학 강의실
- ▶ 대 상 : 광고홍보학과 등 재학생
- ▶ 강 사 : 청·차장, 청내 소방홍보 전문가
- ▶ 내 용 : 소방의 이미지 재정립 방안 등

□ ‘대학교’ 광고·홍보 페스티벌 개최

- (일정/참가) ‘18. 3월 ~ 11월 / 해당 대학교 재학생 누구나
- (주제) 「**안전을 커다**(가제)」
 - ※ 기존 소방의 이미지를 넘어 효과적으로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 등
- (출품) 개인 또는 팀 단위 소재 제출(디자인, 영상물, 광고 제작 등)
- (평가) 별도의 전문위원 위촉(광고홍보학과 교수 등)
 - 우수작품 시상금 지급(산하단체 후원 등)

□ 추진일정

- 과정 개설 등 업무협의 ’18. 1~2월
- 소방전문가 특강 4월중
- 우수작품 시상 등 6월/11월

4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맞춤형 소통 강화

정책 목표

소방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18년 소셜미디어 계정 추가 맞춤형 홍보 강화

- (페이스북) 30~40대 주로 사용, 팔로워 88,337명
- (트위터) 30~50대 주로 사용, 팔로워 44,105명
- (블로그) 전 연령대에서 많이 사용, 월간 순 방문 64,789명
- (인스타그램) 10~30대 주로 사용, **2018년 계정 추가**
- (카카오톡플러스) 소방 주요 정책 및 이슈를 실시간 푸시 메시지로 국민에게 알림 역할, **2018년 계정 추가**

○ 최신 트렌드 및 계층에 맞춘 콘텐츠의 다양화

- 시리즈 웹툰 제작으로 재방문 유도하여 소방정책 홍보 극대화
- 웹트콤 영상 신규 제작으로 소방정책을 재미있게 풀어서 홍보
- 소방 현장활동 영상을 컷 편집 형태로 현장감 있는 영상 제공
- 소방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행 직원 등 미담사례 적극 발굴 홍보

○ 대국민 이벤트 강화로 소방청 팔로워 추가 확보

- 주요 정책 추진 전 대국민 이벤트를 통해 사전 분위기 조성
- 시즌별(소방청 출범 1주년, 소방의 날 등) 맞춤형 이벤트 실시
- 매월 1회 이벤트 진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추진일정

- 2018년 소셜미디어 계정 추가 및 추진계획 수립 '18. 1월
- 매월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보고 '18. 월별

5

생활속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간접홍보 강화

정책 목표

소방에 대한 인식을 국민 정서에 긍정적 요소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간접홍보를 강화

□ 주요내용

○ 세대 맞춤형 모바일 콘텐츠 개발

- 동요대회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소방동요작곡대회 개최
- 「1020랩퍼 119캠페인」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에게 안전교육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랩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 보급하여 생활속에 늘 만날 수 있는 소방이미지 제고

※ 일상생활이나 대화속에 감정을 소방이모티콘을 통해 표현하여 일상소방 추진

○ 예술 등 다양한 계층·시선을 통한 소방의 만남으로 소방가치 증폭

-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기획전 추진 예술속에 담긴 소방관과 소방
- 대규모 건설현장 펜스 디자인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소소심 등 생활소방 안전홍보로 활용
- 다양한 소방 홍보물품 제작으로 친근한 이미지와 장기적 상기 효과
- 카드사와 소방이미지 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적립포인트를 활용 화재피해주민지원을 추진하여 국민지원 이미지 강화

※ 소방을 주제로 한 기획전 및 공연과 소방서 벽화, 소방캐릭터 인형과 텀블러 등 제작

□ 추진일정

- 소방이모티콘 제작 협의 '18. 2~3월
- 소방이미지 카드 제작 협의 '18. 3~4월
- 고등랩퍼 모집 및 경진대회 개최 '18. 4~5월
- 소방이모티콘 카카오톡 보급 '18. 6월
- 우수 랩퍼와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공연 추진 '18. 9~11월

6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적극 홍보

정책 목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소방청 차원에서 적극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소방 국위가 선양되도록 함

□ 주요내용

○ 2018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 기간/지역 : '18. 9. 10.(월) ~ 9. 17.(월) / 충북 충주시 일원
- ※ 주최/주관 소방청·충정북도·충주시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참가규모 : 50개국 6천여명('10년 대구대회 48개국 외국인 1,218명)
- * 2018 충주대회 소방공무원 참가 확보인원 : 6,244명(국내 5,479, 해외 765) 해외 1,500명 목표

□ 홍보 전략

○ TV 및 영상매체 활용 및 언론사(기자)를 통한 홍보 실시

- 방송국 주요 프로그램 등에 홍보 지원 추진
- ※ 경기장면, 주요경기 등 자료를 방송사에 소개하고 방영 협의

○ 각 부처 보유 매체와 협업을 통한 홍보(홍보동영상 배포)

- 집중홍보기간 : '17. 7 ~ 8월(개막식 직전)
- ※ '18. 4월 중 매체협업홍보 신청(문체부와 협조)
- 홍보매체 : TV·라디오·전광판 등(38개 부처 358종), 간행물(33개 부처 144개종)

□ 향후계획

- 홍보 협조 기관 등 협조 문서 발송 '18. 1월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홍보물(포스터, 영상 등) 배포 '18. 2월
- 방송, 신문, 옥외 대형전광판 홍보, 온라인 등 홍보협조 요청 '18. 4월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18. 2월 ~ '18. 9. 17.

2. 119종합상황실

Contents

1. 중앙 및 시·도 119종합상황실 간 협업 강화 /-----	17
2. 상황시스템 첨단화에 대응한 상황실 운영 체계화 /-----	18

1 중앙 및 시·도 119종합상황실 간 협업 강화

정책 목표

중앙↔시·도 119종합상황실 간 유기적 협업체계의 강화 및 상황
관리 총괄 지휘·통제·조정 등 효율적인 상황대응 업무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상황관리 표준 및 대응 효율화를 위한 시·도 상황실 지도 감독
 - 시·도 상황실 순회 방문을 통한 상황보고 체계 및 운영 등 표준화
 - 국가기관 헬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상황관제 감독
- 중앙↔시·도 상황실간 1박2일 합동근무를 통한 보고체계 정립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1박2일 합동근무를 통한 상황관리 체계 이해
 -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대응 및 보고체계 등 상황실의 역할정립
- 중앙↔시·도 119종합상황실간 협업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 119상황관리 표준지침 개정(안)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 효율적·체계적인 협업강화를 위한 분임토의 및 토론회 개최
- 신속 상황대응 및 현안업무 공유를 위한 시·도 상황실장 영상회의 개최
 - 대형 재난상황 발생 대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 철저 당부
 - 상황관리 추진사항 및 현안업무에 대한 주제발굴 토론

□ 추진일정

- 시·도 상황실 순회방문 지도 감독 '18. 상반기
- 중앙↔시·도 상황실간 1박2일 소방청 합동근무 '18.상반기
- 중앙↔시·도 상황실간 협업강화 연찬회 개최 '18.하반기
- 시·도 상황실장 영상회의 개최 분기 1회

2 상황시스템 첨단화에 대응한 상황실 운영 체계화

정
책
목
표

상황대응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119종합상황실의 정보제공 역할
능력 강화 및 선제적 출동범위 확대에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 대형·주요재난 발생 시 재난 정보분석 제공 등 상황관리 능력 강화
 - 민원정보시스템, 위험물, 국가화재시스템 등* 활용 위험요인 분석 자료제공
 - * 재난 정보분석 전담자 운영 (4명/4교대*1명) - 2018년 수시직제 시 반영 추진
 - 재난현장 지휘를 위한 소방력 배치 및 작전도(PPT) 신속 공유
 - 재난현장 정보제공 불시훈련 실시(NDMS훈련연계 : 대상물 현황, 소방력 배치 등)
- 119종합상황실→중통단(지휘작전실)↔구급상황관리센터 상황관리 체계 역할정립
 - **(119종합상황실)** 재난 상황보고 일원화, 초기 상황 조치·보고 및 전파, 상황공유
 - **(중통단 지휘작전실)** 중통단 가동, 대응단계별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 **(구급상황관리센터)** 다수 사상자 발생시 사상자 통계관리 일원화 및 실시간 정보공유
-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응 및 선제적 상황조치 확행
 - 시·도→중앙 : 재난상황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중앙→BH등 전파 : 5분내

보고기준	⇒	시·도 상황실 → 재난상황 발생시 지체없이 상황보고 소방청 상황실 → BH 및 총리실 등 5분내 전파 원칙
-------------	---	------------------------------------------------------------------------------

 - 재난발생시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 4,화학구조센터 6)* 출동범위 확대
 - (현재) 대형 재난 → (개선) 주요 및 일반재난(화재,구급,산불) 초기 출동 확대
 - 육상재난 현장의 국가기관 헬기 출동시 관제 및 통제 등 주도적 역할수행

□ 추진일정

- 재난정보 분석 제공 전담자 수시직제 추진 상반기
- 재난상황 발생시 보고지연 및 누락 준수여부 점검 매 월

3. 운영지원과

Contents

1. 생산성 높은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 -----	21
2. 활기차고 역동적인 직장 만들기 / -----	22
3. 사람중심·공감하는 소방인사관리 / -----	23
4. 정부포상의 투명성과 영예성 제고 / -----	24
5.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이행 / -----	25
6. 전시대비 소방활동 극대화를 위한 비상대비 강화 -----	26

1 생산성 높은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정책 목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개인의 능력 발휘 및 업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조직문화 정착

□ 추진배경

- 2017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발표 결과, 중앙행정기관 종합 3위 달성
※ 조직문화, 업무지시 추진 등 내부 청렴도 14위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일하는 방식 개선과 부서간 소통으로 업무효율성·생산성 제고
 - 업무집중도를 향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 소통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 및 시행

【 중점 추진사항 】

- 집중 근무시간 활성화 ⇨ 09:00 ~ 11:30 업무 몰입, 사적 문자·카톡 자제 유도
- 소통과 공감의 광장 운영 ⇨ 과별, 직급별 크로스 미팅 정례화로 업무장벽 해소
- 스마트하게 일하기 ⇨ 스탠딩 회의, 온나라 메신저회의,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 등 활성화

○ 유익하고 참여하고 싶은 직장교육 실시

- 사람중심 경제, 정부혁신 등 국정철학 공유 및 이해의 기회로 활용
- 문화공연, 명사·화제의 인물 초청 특강을 통한 재충전(힐링) 기회 제공

【 중점 추진사항 】

- 격월제, 업무공백 부담 없는 시간 선정으로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운영
- 우수직원 시상 및 직원 선호도가 높거나 화제의 인물 위주로 강사 초빙
- 참석률 우수 부서 인센티브(영화 관람권) 부여 및 부서 성과평가 반영

□ 추진일정

-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18. 1월
- 추진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18. 분기별

2 활기차고 역동적인 직장 만들기

정책 목표

소방청 개청 원년의 해로 활기차고 화합된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역동적이고 자긍심 충만한 조직 만들기 추진

□ 주요내용

○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워라벨 분위기 조성*
- * 직장인의 우선순위 ⇨ Work & Life Balance

【 중점 추진사항 】

- 정시퇴근의 날 운영 ⇨ 현재 1회(금)에서 2회(수, 금) 운영, 불필요 초과근무 지양
- 연가 활성화 ⇨ 70% 사용(BH 시행), 봄·가을 여행기간과 징검다리 연휴 사용 독려
- 생일·출산 축하 상품권(3만원) 지급, 셋째 자녀 출산시 장려금 지급(예산 범위내)
- 건전한 회식문화 ⇨ 영화, 공연 등 문화회식 활성화
- 여성공무원 실 권리 지켜주기 ⇨ 출산·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 여가생활 지원 등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 만족도 향상

- 힐링할 수 있는 장소의 리조트, 호텔 등 휴양시설 이용 협약 체결
- 업무 우수 및 하위직 공무원 등 배낭여행 상·하반기 시행
- 학술연구, 스포츠, 음악·예술 모임 등 직장 동호회 활성화, 등산·족구 등 체육대회 정례 개최

【 중점 추진사항 】

- 휴양시설 ⇨ 충청권, 강원권, 영남(부산), 호남, 제주 등 권역별 협약 추진
- 배낭여행 ⇨ 동남아에 구조구급시스템 등 소개, 재난현장 방문 등 계획 수립
- 동호회 ⇨ 활동비 지원(30~50만원),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입상 격려금(1~3위) 지급
- 체육행사 ⇨ 봄·가을 전 직원 참석(등산·족구대회 등), 여름·겨울 실·국별 실시

□ 추진일정

- 휴양시설 이용 협약 체결 추진 '17.12~'18.1월
-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18.1월

3

사람중심 · 공감하는 소방인사관리

정책 목표

관행적인 인사운영 방식 탈피, 참신하고 균형적인 인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공감하는 조화·균형·배려인사 기반 조성

□ 주요내용

- 누구나 만족하는 “따뜻한 인사” 기반 마련
 - 1:1 맞춤형 인사고충 및 인사행정 소통위한 「인사고충 상담코너」 개설
 - 시·도 및 소속기관, 소수직렬·여성배려 위한 소통의 시간 운영(분기1회)
- 지휘부의 공정·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육상재난 총괄대응 지휘체계 확립
 - (간부직위 전보) 입직경로·지역균형(출신·전입지) 고려한 인사실천
 - (고위직 승진) 현장지휘역량 강화 위한 기관장 경험보직 우대
- 보직경로 중점 관리 및 능력위주의 인선
 - (소방정 전입) 「보직경로제」 도입, 업무의 연속성과 업무공백 최소화
 - ※ 중앙부처 파견 및 소속기관 근무경력 우선 선발
 - (소방령 이하 전입) 「직원 스카웃제」 운영, 자율과 책임성 강화
 - ※ 전입직원 선발·추천권한(2배수)과 직원의 근무희망부서 선택권(5지방) 반영
 - (소방령 이상 승진자) 다양한 직책경험을 위한 일선기관 전출 의무화
- 시·도 인사교류 확대 및 「파견 총량제」 운영
 - 정기인사 시기 확대(연1회→연2회) 및 중앙-시·도간 인사교류 통합 추진
 - 중앙부처 전입 시 파견기간 서열화로 투명·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 파견인력 사전검증·재평가 강화 및 정원(189명)외 15%線 유지
 - ※ 1년 단위 정기적 재평가 및 ‘전입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발탁

□ 추진일정

- 인사 혁신방안 의견수렴(소방청·시도)·시행 ‘18. 1월
- 관련규정 개정 및 인사고충 상담코너 운영 ‘18. 1월

4 정부포상의 투명성과 영예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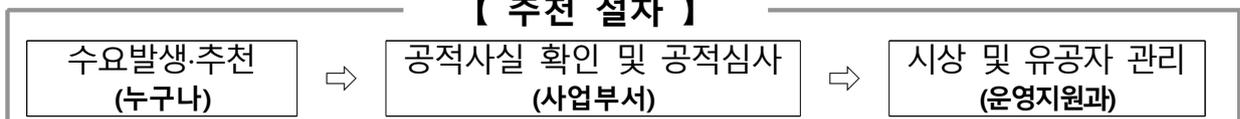
정책 목표

청장 표창의 계획성·예측성 확보와 관행적인 포상의 과감한 폐지를 통한 투명성과 영예성 확보

□ 주요내용

- 청장표창의 영예성 제고
 - 관·국·소속기관별 청장표창의 「기획포상제, Ceiling제」 정착
 - 유사·중복포상 방지 및 포상의 계획성과 예측성 확보
 - 심포지엄, 세미나, 전람회 등 이벤트성 포상은 가급적 지양
-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훈령)」 제정
 - (현행) 특별승진 등 포상제도 운영 시 별도규정 없이 각 국(과)별 개별 운영, 포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곤란
 - (개선)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훈령)」 제정, 포상의 정당성 확보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 포상 기회 확대
 - * 위원장(차장) 1인, 위원(각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5인으로 구성
- (가칭) ‘용감한 119賞’ 운영
 - (도입취지) 사회 곳곳에서 헌신한 공로자를 추천받아 포상함으로써 실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서로 도와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
 - (훈 격) 청장 표창 * 부상(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 (추천대상)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보호와 생명을 구한 의로운 개인 및 단체

【 추천 절차 】



□ 추진일정

- 2018년 청장표창 운영계획 수립·시행 '18. 1월
-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훈령)」 제정추진 '18. 1월~
- (가칭) ‘용감한 119賞’ 시행계획 수립·시행 '18. 1월
 - 명칭공모, 수여방법 및 홍보 세부방안 계획 반영

5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이행

정책 목표

사업별 계약 현황 및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이행 강화

□ 주요내용

- 계약과정에서 사고(범위반, 민원발생 등) 방지를 위한 계약관리 철저
 - 청렴 준수사항 및 특수조건(이행각서) 부여 등 청렴계약 이행
 - 계약 프로세스(계약 방법, 종류, 절차 등)에 대해 담당자 교육 강화(상, 하반기)
 - 계약 현황·업무추진비 등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홈페이지, 분기별)
- 중소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책임목표 설정* 및 '우선구매 지원관 지정'을 통한 책임성 강화
 - * 중소기업제품(총구매액의 50%),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중증장애인기업제품(총구매액의 1%)
 - 구매 추진실적 업무망 게시(분기별) 및 부서 담당자 교육(상, 하반기)
- 소방청 물품현황 전수조사(3월, 10월)를 통해 낭비요인 최소화
 - 정기재물조사보고서 및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출(조달청/ '18.1.31), 물품수급관리계획서(조달청/ '18.2.28)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회 대응
 - 예산집행 관련 설명자료,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

□ 추진일정

- 사업별 계약 업무담당자 자체교육 실시 1월, 10월
- 홈페이지에 계약 현황 등 실적 공개 분기별
- 중소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보고 분기별
- 소방청 보유 물품 등 재물조사 실시 3월, 10월
- 국회 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대응 2~8월

6

전시대비 소방활동 극대화를 위한 비상대비 강화

정책 목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소방청의 신속한
전시체제 전환 및 임무수행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완비

□ 주요내용

○ 2019년도 전시대비계획(총무3800 부록11, 총무6000, 총무9000) 수립

- 총무기본계획(총무 1100) 및 총무집행계획(총무 3800 부록11) 개정

※ 인력자원 및 물적 자원 변동 상황 등을 고려 기본계획안과 집행계획 작성

- 소방청 자체총무계획(총무6000) 수립(개정)·시행

※ (근거법령) 총무기본계획, 국가전쟁지도지침, 비상대비훈련예규

- 통일부 소관 총무 집행계획(총무9000) 제정*·시행

* 소방청 개청(2017.7.26.)과 관련, 총무9000 소방청 소관 분야** 집행계획 작성

** (총무9000 소방청 소관 분야)자유화지역 시·도 소방본부 및 시·군·구 소방서 편성계획 등

○ 2019년도 전시대비 동원자원조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추진

- (대상업체) 분말소화기(대동소방 등 3개 업체) 및 이산화탄소 소화기
(주, 동아화이어테크 등 2개 업체), 산하단체(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주요내용) 국방부(육군·공군)* 동원소요에 따른 업체 생산능력 검토

* 육군(ABC분말소화기(3.3KG) 40,481개), 공군(이산화탄소 소화기(6.8KG) 25,122개)

○ 내실 있는·국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 추진

- 전시전환절차 연습 : 전시직제 편성훈련, 전시종합상황실 설치 등
- 도상연습 : 실명제에 의한 사건계획 작성 및 교육 강화
- 실제훈련 : 인명 구조·구급 등 핵 및 화생방상황 하 훈련 실시(지역주민 참여)
- 전시현안과제 토의형 연습 : 총무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 선정, 심층토의
- 연습간 자체 강평·평가를 통한 연습 개선방안 도출

□ 추진일정

○ 동원자원조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추진 '18. 1~12월

○ 2019년도 전시대비계획 수립 추진 '18. 2~11월

○ 2018년도 을지연습 추진 '18. 2~9월

4.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Contents

1.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 원년” 개청 1주년 기념행사 /	29
2. 소방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활동 다각화 /	30
3. 지속발전 가능한 소방재정 및 예산 정책 추진 /	31
4. 중앙과 현장을 연결하는 5대 혁신 정책 시행 /	32
5. 아시아 소방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기여 /	33

1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 원년” 개청 1주년 기념행사

정 책 목 표

소방청 개청 1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초일류 안전강국 실현의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

□ 주요내용

- (행사방향) 개청 후 1년간의 성과와 반성 및 각오를 새롭게 하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량 결집을 위한 내실 있는 행사 추진
- (기념행사) 1부 : 기념식 / 2부 : 학술심포지엄
 - 기념식 : (가제) 『소방청 1년, 위대한 도약의 성과와 미래』
 - 성과보고, 정책방향 마스터플랜 발표,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
 - 학술심포지엄 : 소방환경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과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학·연 심포지엄 개최
 - 4차산업과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소방의 역할 증진
 - 대형·신종·복합재난 등에 대응한 소방의 역량 강화와 과제
 - 소방발전 『미래전략 2025계획』의 구체적 실현 방안 등
- (119 大공모전) 3개 부문 → 수기/영상/사진 * 대변인실 공동 추진
 -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대외적 위상 정립
 - 생생한 현장활동 경험의 보존·관리 및 교훈자료로 활용
 - 우수작 발표회 겸 시상식(단체 & 개인), 우수작 언론계재 등 추진

□ 추진일정

- 기념식 행사 기본계획 수립 '18. 4월
-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18. 7월
- 개청1주년 기념 119 大공모전 추진 '18. 4~9월

2

소방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활동 다각화

정책 목표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과제를 재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 발굴, 대안 탐색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다각화

□ 주요내용

-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 3개 분과(기획조정, 소방정책, 119구조구급)
 - 회의 시 보고와 자문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의 효율성 제고
 - 자문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SNS소통 등 활성화 방안** 시행
 - * 정책자료, 보도자료, 업무보고, 행사소식 등의 상시 제공으로 자문활동 활성화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현장방문을 겸한 회의 및 워크숍** 개최
 - * 자문위원에게 현장견학기회 등을 적극 제공하여 정책자문 활동의 효과 제고
 - 철도역사 회의실 등을 활용한 분과 및 소모임 회의 활성화
- (정책과제 발굴 및 관리 강화)
 -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의 외부지적·검토요구사항 등 관리 강화
 -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정책 환류
 - **문제해결형 토론회의** 집중 운영(실국별 정례 정책토론회/매월)
- (학술연구활동 참여) 소방관련 각종 외부 학술발표회 등 참여 확대
 - 초고령화 사회, 4차산업 혁명, 지방분권,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확대 등 소방정책과 밀접히 연관된 주제의 외부 학술활동 적극 참여
 - 중앙 및 시·도 간 학술활동 교류 및 공통주제 연구활동 확대

□ 추진일정

- 정책자문위원회 정례회의 분기별
- 정책과제 발굴 및 관리 매월
- 소방정책 관련 워크숍, 외부학술활동 참가 년중

3

지속발전 가능한 소방재정 및 예산 정책 추진

정책 목표

중앙과 지방 소방예산의 합리적인 조정과 새로운 자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 기반 구축

□ 필요성

- 국가직 전환에 대비한 중앙·지방 소방재정의 연계성 강화
- 합리적인 재정투자계획의 수립으로 예산 확보와 집행의 효율성 강화 및 역할분담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단기과제) '19년 예산(안) 편성에 국비 투자규모 점진적 확대
 - 지방인건비 부문의 지원규모·집행기준 등 시행계획 마련
 - 중앙과 지방재정사업의 집행실적과 유사성 분석을 통해 중복 투자 문제 사전 차단 및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중기재정투자(안)와 긴밀히 연계된 2019년 예산확보 추진
- (중기과제) 지방소방과 공동, 신규 자원 확보방안 정책 연구
 -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한 소방특별회계, 소방부담금 신설 검토
 - * 시도본부 공조체제(재정자문단 등) 운영으로 제도적 방안 강구
 - 소방안전교부세 취지에 맞게 교부권한 재정립 협의
- (협력강화) 시·도 예산부서와의 협력 및 연계 활동 강화
 - 중앙:지방, 지방:지방의 공동사업 추진 적극 논의(정례 워크숍 개최)

□ 추진일정

- 지방인건비 및 타 부처 소관 예산·기금 협의 '18. 8월
- 지방소방특별회계 신설 등 중기과제 추진 연중
- 소방예산 및 재정발전 워크숍 '18. 3/10월

4

중앙과 현장을 연결하는 5대 혁신 정책 시행

정책 목표

현장부서와 기획부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연계 및 공동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업무 및 정책혁신 추진

□ 주요내용

- (소방업무 혁신) 미래지향적 혁신과제 발굴·시행 및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개선 추진을 투트랙으로 병렬 추진
※ 10대 업무개선 및 발전과제 선정(상반기) → 전국 확대 시행(하반기)
- (전국지휘관 회의) 소방본부장·지휘관 회의 정례화
- 중앙과 현장의 유기적이고 일치된 행정시스템 강화
- (119하이웨이) 기획담당 조직 및 직원 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
- 신속하고 다양한 의견이 소통하는 '119하이웨이' 운영
-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정책실현의 원동력과 실효성 확보
- (119정책플랫폼) 중앙과 현장을 연결하는 마중물 공간 운영
- 보조·보좌 부서 간 조직 공동목표 추구형 업무협조시스템 강화
-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모범(성공) 정책과제 공유 추진
※ 우수정책 아이디어 및 성공사례를 지방과 공유하고 발전적으로 확산(워크숍 개최)
- (기록 및 학습문화) 정책 공유 및 연구를 위한 기록물 발간(시도협력)
- 2018소방행정백서(소방청 제1호) 및 한국소방행정사(제4판/소방청 초판) 발간

□ 추진일정

- 전국 현장지휘관 회의 분기 1회
- 119정책플랫폼 운영 개시 '18. 3월
- 기획 SNS 공유방(119하이웨이) 개설 '18. 2월
- 한국소방행정사 및 백서발간 '18. 7월

정책
목표

폭넓은 국제교류와 적극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소방의 위상을 제고할 아시아 소방협의회 창설 등 주도

□ 주요내용

- 아시아 소방통계 협의체(가칭 AFSA*) 설립 추진
 - * Asia Fire Statistics Association
 - 한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소방통계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외국 소방 기관과의 MOU 재정비 및 협력 활동 특성화 전략 시행
 - 개도국 소방시스템 구축 등 적극 지원(소방청 네트워크, KOICA 등과 협력)
 - 주한 외교공관 대상 한국 소방 홍보 및 협력프로그램 설명 정례화
 - 특수한 외국의 소방정책 중점 연구('18년 : 소방특성화고등학교 운영)
- 국외출장을 3개 분야*로 구분·통합관리하여 출장의 효과성 제고
 - ❶ 벤치마킹 ❷ 국제회의 및 MOU ❸ 교육 및 훈련으로 분류, 2회 심사
- 한국 소방과 밀접한 외국 소방정보를 다양하게 수집·전파
 - * 연간 수집분석 정보를 분류하여 『WORLD FIRE SERVICE』지 발간
- 한국 소방을 널리 알리고 위상을 표현할 기념품 제작·활용
 - 대한민국 소방 역사 기념물품(First Korean Fire Heritage) 개발
 - 유구한 한국 소방역사에 대한 정체성 제고로 조직결합력 증진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시 한국소방 상징 기념물 전시·판매

□ 추진일정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18. 1월
- AFSA 설립 추진 기반 구축 '18년 상반기
- 해외동향 정보지 발간 '18년 10월
- 한국소방 상징 기념물 개발 '18. 3월

행정법무감사담당관

Contents

1. 육상재난대응 총괄기능 정착을 위한 조직개편 /	37
2.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성 높은 조직 재설계/	38
3. 내실있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 /	39
4.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도약 /	40
5. 성과중심의 투명한 조직운영체계 구축 /	41
6.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감사감찰기능 강화 /	42
7. 법무규제행정의 효율성 제고 /	43

1 육상재난대응 총괄기능 정착을 위한 조직개편

정책 목표

소방청 신설('17.7.26.) 및 소방국가직화에 따른 대국민 소방서비스
기대 충족과 효율적 업무여건 조성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 주요내용

- 소방장비관리법 제정과 연계, 「장비항공국*」 신설
 -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장비(930종)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소방장비·항공·통신의 체계화·표준화 필요
 - * 장비기획과, 장비관리과, 소방항공과, 정보통신과로 편제
- 육상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긴급대응총괄과」 신설
 - (재난시) 긴급구조현장 총괄·분석 등 모든 육상재난 지휘·통제·조정
 - (평상시) 대응계획 수립·운영, 통제단 훈련·평가, 유관기관 교육 훈련 및 협업체계 구축 등
 - ※ (VIP 지시사항) 모든 육상재난의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청에 부여
-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비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단」 신설
 - 공항, 항만, 석유비축시설 등 국가기반시설(3,415개소)을 조사단에서 직접 조사
- 중앙소방학교 공주 이전과 연계하여 「중앙소방교육원」으로 개편
 - 첨단 실전훈련시설 운영 및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조직인력 보강
 - 교육과정 책임 운영을 위한 전담식 학과제(12개)로 전환 운영
 - 신규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천안부지 운영 인력 증원(19명)
-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청 직속 「소방연구소」로 기능 강화
 - 소방정책개발, 보건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 정비
 - 화재안전기준 마련 및 한국형 재난대응기술 개발 기능 보강

□ 추진일정

- '18년 수시직제 추진 '18. 3월까지
- '19년 소요정원 협의·확정 '18. 4~9월
- '19년도 소요정원분 반영 직제개편 '18. 12월부터

2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성 높은 조직 재설계

정책 목표

소방청 신설(17.7.26.) 및 소방국가직화에 따른 효율적 조직설계 기준 및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중장기 조직모델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추진

□ 추진목표 및 지향점(방향)

- 소방 국가직화 대비, 육상재난 총괄 대응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설계기준 및 미래재난 대응 등 중장기 조직 모델마련
- 소방청 개청 이후 부서별·개인별 업무분석을 통한 인력·사무 재배치로 인력운영 및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적정성 제고

□ 추진내용

- 진단기간 : '18. 1 ~ 6월 ※ 소요예산 : 1억원(정책연구용역비)
- 진단대상 : 소방청 및 소속기관
- 진단내용
 - 기능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한 적정 조직규모 산정
 - 육상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위한 소방청 조직개편(안) 도출
- 진단방법
 - 개인별(계·담당별)·과별 업무내용 분석
 - 국·관 분석은 과(課) 단위 분석내용을 비교, 업무별 우선순위 분석
- 진단결과 활용
 - 개인별, 과별, 국관간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인력재배치 방안 마련
 - 각 부처 협의자료 활용 및 소방청의 중장기 조직개편에 활용

□ 추진일정

- '18년 조직진단 계획 및 용역추진 '18.1월까지
- 조직진단 추진 '18.2~6월(5개월)

3

내실있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

정책 목표

적극적이고 철저한 국정과제 추진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 지원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및 정책 수용도 제고

□ 추진방향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개선 등 선제적 화재예방
- 소방 국가직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

□ 2018년 주요 국정과제 추진일정

국정과제	주요 추진사항	시기	비고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행안부) 55-5. 선제적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안전기준 개발 및 평가 전담기관 설치계획 수립 - 한국화재안전기준센터 설치계획 수립 	4월	연구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 맞춤형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거주 가구 대상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현장 안전점검인력 보강 - 조사반 1개조 7명 -> 2개조 14명 운영시스템 구축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반시설 등 대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안전점검 실시 - 전통시장, 공항 등 국가주요시설 222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6월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행안부) 56-2. 소방청 독립 및 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인력 확충(계속) - `18년 현장인력 보강 : 3,557명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추진 • 1/4분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조사결과 산출 : `18. 10월 경)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 및 유족급여 확대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인사혁신처)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역량강화센터 건립 추진(~`21년) - 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 기본계획 작성(6월) - 지휘역량 강화 시뮬레이션시설 건립 설치대상 결정(11월)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재난 안전훈련센터 건립 추진(~`21년) - 훈련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1월) - 행안부 투자심사 의뢰 및 예산확보(3월)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구급 수요분석 및 119구급대 배치(~`22년) - 95개대 711명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소방헬기(2대) 구매 	연중	

4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도약

정책 목표

전략적 대응으로 출범 2년차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풍토 조성을 위해 평가와 성과의 연계 강화

□ 주요내용

○ 평가지표 개선 및 적극적인 실적관리

(주요정책과제) 평가에 적합한 국민체감형 과제로 재편

현행 (내부·외부과제 혼재) '소방장비 확충' 등 조직 내부과제 다수	⇒	개선 (외부과제 중심) '심폐소생술 시행율 향상' 등 국민체감과제 중심 재편
-------------------------------------------	---	-----------------------------------------------

* 국무조정실 '18년 4월경 성과지표 수정·보완 작업시 반영

(규제개혁) '안전 최우선' '소방특성화 규제개혁 모델' 정립

- 현행 : 소방업무가 규제 유지 또는 강화 성격임에도 일반 부처와 동일한 방식의 규제업무 수행(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규제완화 중심)
 - 개선 : 단순 규제완화 방식 → 적정 안전기준 제시(더 좋은 규제)
(소방 특성화 규제개혁 모델 : 적정한 안전기준 제시 → 국민안전 확보기능 강화)
- * 적정 안전기준 제시와 일자리창출 연계(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 인력수요 창출)

(일자리창출) 중앙·지방의 협업 강화로 일자리창출 외연 확대

- 현행 : 일자리창출 과제 중 '소방인력 확충' 비중이 커 우수평가에 한계
 - 개선 : 중앙·지방의 협업 실적 발굴(퇴직소방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 시·도 추진 퇴직소방관 재난안전민간강사 프로그램 등을 중앙과 연계

○ 평가대응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기관과 정책소통 강화

- 우수부처 평가담당 과장 초청, '평가 대비 노하우' 특강 실시
- 평가담당자 워크숍 및 사내대학 결성 등을 통해 평가업무 역량 강화
- 국조실과 정책 소통 정례화 및 현안사항, 부정보도 등 적극대응

□ 추진일정

- '17년 특정평가결과 분석 및 '18년 대응계획 수립 추진 '18.3월
- 평가담당자 워크숍 및 사내대학 결성 '18.4월

5

성과중심의 투명한 조직운영체제 구축

정
책
목
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조직문화 정립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으로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 및 조직성과 향상

□ 주요내용

- 부서 성과평가와 정부업무평가실적 연계 강화 → 책임성 확보
 - (현행) 부서 성과평가 실적에 -1 ~ +2점 반영
 - (개선) 부서 성과평가 실적에 -1 ~ +4점으로 상향 조정(+2점)
- 신규 평가항목(평가분야) 개발·추가 → 업무혁신 유도·참여 촉진
 -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표 개발(타 기관 벤치마킹, 외부전문가 자문 등)
 - * 타 중앙 부처 성과평가 세부항목 등 종합 검토, 청에 맞게 도입·적용
 - (현행) 업무성과(업무실적, 자체평가) + 정책수행 개선(정책홍보) + 청장 가점
 - (추가) 청렴활동, 고객만족도, 정보보안, 정책수행노력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17년 평가분야		
업무 성과	업무실적 평가	
	자체 평가	성과관리시행계획 과제 평가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등 평가
	정부업무평가 결과 가감점	
열린혁신 추진		
홍보	정책 홍보	
가점	청장 가점	
정책 수행 개선		
고객 관리		



'18년 변경계획(안)		
업무 성과	업무실적 평가	
	자체 평가	성과관리시행계획 과제 평가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등 평가
	정부업무평가 결과 가감점	
열린혁신 추진		
홍보	정책 홍보	
가점	청장 가점	
정책 수행 개선	정책수행 노력도 일하는 방식 개선	
고객 관리	정보 보안	
	고객 만족도	
	청렴 활동	

□ 추진일정

- 타 기관 성과관리 운영실태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분석 ... '18.2월
- '18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잠정안('17.12.) 및 최종안 수립 '18.4월

6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감사·감찰기능 강화

정책
목표

엄정한 감사·감찰로 직무 책임성 확보, 신설청으로서 실정에 맞는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개발,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업무 정상화

□ 추진방향

- 감사·감찰업무의 안정적 추진으로 직무 책임성 및 자정능력 제고
- 실정에 맞는 청렴대책 추진 및 공직윤리업무 기능 정상화

□ 주요내용

- 엄정한 감사·감찰업무 추진으로 비위 사전예방, 취약분야 개선
 - (기관운영감사) 본청,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감사 실시 (2년 주기-공감법)
 - (정부합동감사) 소방업무 전 분야 직무감독 관리강화 ('18년 대상: 4개 시·도)
- ※ 감사·감찰 대상 : 소방청, 소속기관 2, 산하기관 6, 시·도 15(제주, 서울 제외)

- (2018년도) 청렴도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실정에 맞는 대책 추진
 - '17년도 평가 결과 분석,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종합대책 시행

구 분		소방청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
청 렴 도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청렴공감대 확산 : 청렴서약서, 청렴자율실천 프로그램 등 • 자체 비위제보 시스템 구축,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청렴도 평가결과 지표별 취약분야 개선 * 평가대상(내·외부)별 개선방안 구체화 → '18년 계획반영
	교육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른 청렴교육 강화 추진 * 청탁금지 및 부패방지법(연 2시간 이상) → 월례조회, 교육 등 병행
	성과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우수부서 및 대상자 표창 등
부 패 방 지	평가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계획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B실행 :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청렴문화 정착 • C성과,확산 :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 등

- 소방환경에 맞는 반부패 대책 발굴

- (권익위) 기관별 반부패 대책 추진, 평가대비 개선과제 발굴

※ 소방공무원 성범죄 방지대책 추진 : 시·도 소방여성정책협의회를 통한 모니터링

□ 추진일정

- 2018년 감사, 감찰업무 추진 기본계획 수립 '18.1월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및 소속 공무원 재산등록.....연중

7 법무·규제행정의 효율성 제고

정책 목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령 제·개정 지원, 안전과 편익이 병행하는 합리적 규제개혁 과제발굴, 신속한 규제심사 지원

□ 추진방향

- 연중 체계적인 법령 제·개정 지원으로 소방정책 안정화
- 소방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개혁으로 국민안전 확보

□ 주요내용

- 신설청으로서 법령 제·개정을 통한 조직 일체성 확보
 - 소방업무, 조직 전반에 대한 소방청(장)의 지휘, 감독 근거규정 마련
 - (18년도) 입법 지원계획 수립으로 주요법안 우선 제·개정 지원
 - * '18년도 소방청 정부입법계획 7건(별첨), → 법제처 제출

○ 국회 계류법안 입법절차 조기 진행

- 현재, 총 12개 법률 39개 법안 계류 중 (세부현황 : "별첨")

	행안위 회부	행안위 상정	행안위 소위 심사
'18년	- 6개 법률 11개 법안	- 11개 법률 27개 법안	- 1개 법률 1개 법안

* 주요법안(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등)은 '18년 국회일정을 고려 상반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

○ "소방규제는 안전이다" 라는 규제개혁 신 모델 제시

- 안전, 국민편익, 일자리창출을 병행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 * 소방산업진입장벽 완화, 신기술 소방용품 검사기준 마련 등

○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과제 발굴

- 규제신문고 건의, 현장규제애로개선 의견수렴, 현장점검 등

□ 추진일정

- 법령 제·개정 절차 지원 및 국회 법안심사 대응 연중
- 규제개혁 과제발굴(연중) 및 심의회 개최..... 분기 1회 및 수시

정보통계담당관

Contents

1. 지능정보기술 기반 소방 정보화 추진체계 확립 /	47
2.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정보보안 관리 강화 /	48
3. 업무포털·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협업 및 정책홍보 /	49

1 지능정보기술 기반 소방 정보화 추진체계 확립

정책 목표

신설 소방청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화 정책 추진으로 원활한 현장 대응 및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소방 환경에 적극 대처

□ 주요내용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소방 정보화 중·장기 계획('18~'22)」 수립

-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대국민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 방안
- 소방청 소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보화 지원 방안

* 국정과제 55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

- 소방장비의 통합관리체계를 위한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으로서의 소방업무 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수립 추진('19. 예산 확보)

* 소방환경변화에 따른 제로베이스에서의 업무재설계 및 소방청 정보화 추진방향 설정

○ 소방청 및 소속기관 정보화 예산(안) 사전 검토·조정기능 강화

- 중기사업계획('18~'22년) 세부사업 및 '19년도 정보화 예산(안) 사업별 조정
- * 현장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화사업 우선 추진

○ 소방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을 통한 시스템 재구축, 재개발, 고도화 등 운영 개선방안 강구

□ 추진일정

- 소방청 정보화 예산(안) 사전 검토·조정 '18.1~4월
- 소방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18. 6월
-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및 개선방안 추진 '18.6월,12월

2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정보보안 관리 강화

정책 목표

핵심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주체 및 소속 직원의 권리보호

□ 주요 내용

- 「소방청 단독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 사업비/기간 : 602백만원 / '17.12. ~ '18.1.(2개월)
 - 스위치, 방화벽, DDos 대응, 침입방지 등 장비 도입 및 네트워크 구성
- 사이버위협 탐지·대응을 위한 「소방청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 사업비/기간 : 400백만원 / '17.12. ~ '18.1.(2개월)
 -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통신망 보호 및 모니터링을 통한 보안취약점 분석·개선 ※ 보안관리 전담인력(3명) 확보 추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의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청, 소속기관 「합동 이행점검단」 을 통한 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18.4~6월)
 - 유지보수 용역업체 및 정보화사업담당자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 개인정보파일 및 전 직원 PC 개인정보 일제정비 추진('18.5~6월)

□ 추진일정

-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18.1월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18.1월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자체평가 실시 '18.4~6월
-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 '18.6월, 11월

3

업무포털·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협업 및 정책홍보

정책 목표

업무포털을 기반으로 업무 능력, 소통을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소방정책 홍보 및 국민소통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주요 내용

○ 조직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청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 사업비/기간 : 금309,572천원 / '17.12. ~ '18. 4.(4개월)

- 업무포털 內 주요 업무시스템(국가화재정보, 구조구급, 소방장비 등) 간 연계
- 내부직원 간 온라인 소통·협업·공유 기능 개발
- 설문조사, 인사고충 상담실, 동호회 게시판, 직원 간 업무자료 공유 등

○ 개인 및 부서 업무평가체계 등 「성과관리 표준시스템」 개발

○ 소방청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 참여·편의 기능 강화

◆ 사업기간 : '17. 12. ~ '18. 4. / 소요예산 : 371백만원

◆ 사업범위 : 소방청 대표 홈페이지 개발, 검색엔진·게시판 솔루션 구축 등

- '소방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정책 홍보자료를 방문자의 SNS로 연동하여 제공, 모바일(mobile) 기기를 통한 서비스 제공, 국민관심분야 e-메일 등록 시 신규 콘텐츠 등 알림

○ 소방안전정보 제공 및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국민 소통 강화

- 화재·구조·구급 통계, 소방시설업·위험물정보, 특정소방대상물관리, 방염성능검사관리, 다매체신고통계 등

□ 추진일정

- 소방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정 ~'18.2월
-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추진 ~'18.4월
-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의견 수렴 '18.7월
-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및 보안취약점·호환성 점검 분기별
- '19년 유지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18.10~12월

국가직 T/F / 미래전략기획팀

Contents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	53
2. 소방 미래비전 및 전략계획 수립 /	54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정책 목표

재난대응 지휘체계 단일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시도별 차별없는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

□ 추진경과

- 국가직화 정부안 발표 ('17.10.26. 대통령 - 시·도지사 간담회)
- 소방 국가직 전환 관련 부처 실국장 T/F회의('17.11월~12월, 3회)

□ 주요내용

-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환
 - 지역간 소방 투자격차 해소 및 첨단·고가장비 공동활용 방안 추진
 - 소방 현장 부족인력 20,000명 차질없이 확충(5년간)
-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 인사권 및 지휘통솔권 유지
 -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본부장, 학교장 제외)
- 소방특별회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의 예산부담 부분 규정
 - (국가) 소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 (지방) 지역자원시설세, 자체재원 등
- 재난현장 소방대응체계 강화 및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 추진
 - 재난현장 지휘·통제력 강화를 위한 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조정
 -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선조치 후보고 권한” 부여
 - 복합치유센터, 수련원 설치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신설 추진

□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 '17. 12월말
- 소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정부안 확정 및 법안상정 …… '18. 1~2월
- 소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국회심의 완료 …………… '18. 6월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시행 …………… '19. 1. 1.

2

소방 미래비전 및 전략계획 수립

정책 목표

조직의 단기적·중장기적 미래이슈와 리스크 요인을 사전 발굴 대응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소방의 미래상과 비전을 단계적으로 정립

□ 추진배경

-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으로 소방임무를 재정립하고 이에 걸맞는 분야별 단기·중장기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법, 제도 개정 로드맵 도출
- 아울러 미래 변화에 부합하는 소방조직, 기능 및 작동체계 등 통합적 관점에서의 고도화 추진전략 개발이 시급

□ 주요내용

- 심도있는 분석과 사회 각계의 참여를 활용하여 소방의 비전, 핵심 가치, 미래전략을 도출하고 조직내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
- 특히, 국가직 전환의 핵심동인(Key)이자 미래전략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現 소방재정 확보에 대한 연구는 필요시 전문기관 용역 추진
 - ※ 소방사무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금 신설에 대한 정책연구
- 소방의 미래전략을 4개 분야 100대 과제로 설정, 중장기 미래전략 과제는 신규 발굴하고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착수('18년)
 - ※ 1차적 단위과제 발굴(208개), 중점과제 및 일반과제로 우선순위 결정

< 중점과제(안) >

- 대상물 소방안전종합판정시스템 도입
- 119안전한류상품 개발 및 수출
- 소방서장 긴급구조통제단장 인사보임
- 빅데이터 기반 소방 DB분석센터 설립

< 일반과제(안) >

- 119소년단 활성화, 소방 특성화고 설립
- 소방전용 SNS개발 및 활용
- 소방학교 커리큘럼 및 교재 표준화
- 소방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 문화콘텐츠 개발

□ 추진일정

- (초안작성) 부서별 실무협의 후 작성 → 현장정책자문단 설명회 ... '18.1월
- (중간보고)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상 공청회 '18.2월
- (최종보고) 조직 구성원들과의 공감대 형성 → 전략과제 확정 ... '18.3월

5.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Contents

1. 현장 소방인력 확충 및 소방력 배치 효율화 추진 / (국정과제, 정부평가)	57
2.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적체 해소 및 교육 강화 /	58
3. 현장활동 안전관리 체계 확립 /	59
4. 상시 교육·훈련 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	60
5. 소방공무원 복지 프로그램 강화 /	61
6. 여성소방공무원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개발·시행 /	62
7. 소방공무원 건강복지 인프라 조성 /	63
8. 소방공무원 자살 예방 및 저감 대책 추진 /	64
9. 소방 복합치유센터 설립 추진 / (국정과제)	65
10. 소방 심신건강수련원(제주) 건립 추진 / (국정과제)	66
11.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및 예우 강화 /	67
12. 중앙·지방 간 주요 소방정책안 사전협의제 운영 /	68
13.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및 소통 활성화 / (국정과제)	69
14.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 추진 /	70
15. 소방보조인력 운영 활성화 /	71

1 현장 소방인력 확충 및 소방력 배치 효율화

정책
목표

법정기준 대비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의 확충 및 소방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현장안전사고 저감

□ 주요내용

- (추진배경) 법정기준(51,714명) 대비 현장활동 부족인력 17,174명(33%)으로 현장대응력 약화 및 공상·순직 등 현장안전사고로 인한 소방력 손실 초래

* 최근 10년간 위험직무순직 56명, 공상 3,391명 발생, '17. 9.17. 강릉 석란정 화재 2명 순직

⇒ (국정과제) 현장 부족인력 20,000명을 '17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충원

- (추진방안) 연도별 현장부족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인력 충원 및 소방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로 현장대응역량 강화

- '18년 소방인력 충원 규모: 총 4,000명(현장부족인력 3,557명, 관서신설 397명, 교관요원 46명) * 현장출동(화재·구조·구급)대별 최소단위 인력 우선 충원

계	현장 부족인력 충원					관서신설 (소방서 4 센터 27 예정)	특수소요 (현장교관)	비고
	소계	현장대응	소방특별 조사	안전교육 (체험관)	공사상 지원			
4,000명	3,557명	2,848명	382명	176명	151명	397명	46명	상반기 채용 하반기 교육·배치

- 관계법령* 개정으로 소방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소방력 배치기준 정립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 세부 개편 방안 》

- 소방관서 및 차량 배치에 따른 인력 산정에서 소방수요·특성을 반영(등급화), 기준 개선
 - 대원 안전이 확보되는 최소 전술단위 인력 확보 및 소방서, 출동대 등급별 인력 산정
- 현장중심 대응조직으로의 기구 개편(상황실, 체험관 등 직속기관화) 및 현장인력 개념 확대
- 중앙-지방소방조직 업무연계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표준조직모델(안) 제시

□ 추진일정

- '18년 기준인건비 반영 현장 소방인력 충원 추진 '18. 연중
- 시·도 소방본부 연차별 소방력 확충 계획 의견수렴 '18. 상반기
- 소방력 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소방력 재배치 추진 '18. 하반기

2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적체 해소 및 교육 강화

정책 목표

신규 채용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 교육 적체 해소방안 마련과 소방
관서 실습 등 현장교육 강화를 통한 현장배치로 소방대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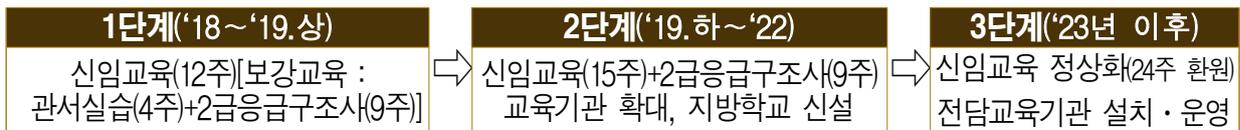
□ 주요내용

- (추진배경) 중앙·지방소방학교(경남교육대 포함) 신입교육 수용한계 초과
 - 향후 5년간 교육 수요는 연간 5천여 명*, 수용능력은 4,680명**
 - 신입교육 15주 운영 시 매년 300여명 교육 적체 지속 발생 전망
 - * 연간 5천명 ('18~'22년) = (순증 18,500명 + 결원보충·관서신설 6,500명) ÷ 5년
 - ** 교육기관 수용능력 4,680명은 신입과정을 집합교육 15주(연 3회)로 운영 기준

- (조기 채용) 신규채용 일정을 앞당겨(1개월) 연내 교육횟수·인원 증대

구분	원서접수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합격발표	단축	비고
'17년	3.7~3.9.	4.8	5.8~5.16.	6.26~7.7.	7.19.	▲약28일	6월 중 교육입교로 연내 2기수 수료·임용
'18년	2.1~2.7	3.24.	4.24~27.	5.26~6.1.	6.21.		

- (교육운영 개선) 집합교육기간 일시단축 + 보강교육 추가 운영
 - (관서실습* 교육) 집합교육(12주 운영시 연 4회 최대 5,860명 수용) + 관서실습(4주)
 - * 관서실습제도(OUT; On-the-Job-Training): 현장배치 전 직무적응훈련(화재, 구조, 구급 등 4주)
 - (응급구조사과정) 신입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인 2급응급구조사 과정(9주)을
신입교육 수료 후 별도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 (시설·인력확충) 신입교육 훈련시설 확대 및 현장교관요원 보강
 - ('18~'19. 상반기) 전남·제주교육대 추가(300명↑), ('19. 하반기) 천안학교 이전
시설 활용(780명↑), ('20년 대구·'22년 전북) 소방학교 신설(각 360명↑)
 - 소방학교·교육대 시설 확충(소방안전교부세) 및 현장교관 충원(추가정원 46명 확보)



□ 향후계획

- (천안) 중앙학교 부지·시설 계속 사용 협의 및 신입교육 전담기관 설치 추진

3

현장활동 안전관리 체계 확립

정책 목표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순직·공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사고 저감 종합대책」 추진
 -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3대 분야, 13개 세부과제, 46개 이행과제** 마련 (순직·공상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 **과제별 총괄부서**(청 소관부서, 세부과제 관리) 지정 및 **과제관리카드** 작성 (과제목표·추진기관·추진일정 설정) ⇨ 12월 중 전국시행 예정
- **(분야 1) 현장 안전관리 및 위험평가 체계 확립**
 - 위험평가 전 진입 금지원칙(先판단 後활동), 현장 안전관리 평가 공유 활성화
 - 위험·화학물질, 노후건축물 등 **위험정보 출동시스템 탑재**, 출동대 사전 정보안내
- **(분야 2) 소방 현장활동 안전관리 지원 강화**
 - 안전관리 **전담부서**(소방서 보건안전계) 설치 및 **인력보강*** (현장안전점검관 등)
* 소방공무원 20,000명 확충(국정과제)과 연계하여 현장안전점검관 639명 보강
 - **현장안전사고 분석·연구*기능 강화**(소방연구소) 및 **사례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 순직·공상 사고 조사체계(전담팀구성 4명) 구축 및 조사결과 R&D 연구과제 연계 수행
- **(분야 3) 심신 건강관리 강화 및 소통 활성화**
 - 보상법률 지원강화(공상치료비 선 지원 등), 공상입증 국가책임강화 추진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및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추진

□ 추진일정

- 시·도 소방관서 즉시이행과제 추진 '18.1월
- 세부과제 별 추진상황 점검 '18.3·9월

4

상시 교육·훈련 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정책 목표

화재,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상시 직장교육·훈련 체계 확립 및 현장 중심의 소방공무원 근무일과 마련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 주요내용

○ (기본 충실) 상시 직장교육·훈련 체계 확립

-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등 분야별 필수 교육·훈련종목 선정, 반복·숙달 훈련 실시 및 훈련성과 평가* 체계 확립

* (훈련평가) ① <개인평가> 선정된 교육훈련 종목으로 직장훈련평가 실시
 ② <관서평가> 상시 직장 교육·훈련 성과 단계별 평가체계 확립

구분	시기	방법	평가결과 반영
센터평가 (소방서→센터)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쏘센터 평가	▶ 최상위 센터 서장표창 수여 ▶ 최하위 센터 재평가 ▶ 성과급, 근무성적 평정 반영
소방서평가 (본부→소방서)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평가대상 센터 추천	▶ 최상위 소방서 시·도지사 표창 수여 ▶ 하위 20% 소방서 재평가 ▶ 시·도 자체 소방(관)서 평가 반영 ▶ 서장 인사 및 성과급 근무성적 평정 반영
본부평가 (소방청→본부)	연 1회 (하반기)	▶ 평가대상 소방서 (센터) 추천	▶ 최상위 본부 장관·청장표창 수여 ▶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반영

○ (현장 중심) 근무일과(표) 개선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 훈령)

- 필수 훈련시간 확보* 및 교대점검 및 훈련시간, 식사·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일과 통·폐합으로 훈련시간 준수기반 마련

* 필수 훈련시간 : 주간 3시간<실기·실습 위주>, 야간 2시간<이론 위주>

○ (출동태세 확립) 교대점검 체계화

- 시·도별 자체 운영중인 교대점검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완·개선된 교대점검 표준 매뉴얼 마련·시행

□ 추진일정

- 시·도별 1개 소방서 지정 시범운영 '18.1월
- 훈련 분야별 국민행복평가 평가지표 신설 '18.1월
- 훈련 분야별 세부 평가계획 시달 '18.2월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개정 및 전국 확대·시행 '17.4월

5

소방공무원 복지 프로그램 강화

정책 목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높은 헌신성, 책임감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시책 추진을 통한 활기찬 근무 여건 마련

□ 주요내용

○ (가정복지) 일 가정 양립 촉진 시책 추진

- 소방관서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現 서장 → 소방서 과장, 센터장)
* 일선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업무수당” 대상 전환 추진(초과근무수당 미지급)
- 육아부담 부부공무원 희망관서(부서) 배치 적극 배려, 여성 보건휴가 자동승인
* 출동수요, 대민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장이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아빠 휴가(출산, 육아)” 사용 촉진,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장복지) 복지포털 개발·운영, 복제 개선, 민간지원 사업 확대

- 복지포인트·휴양·건강 등 토털 웹사이트*, “소방복지앱(App)**”(가칭) 개발
* 소방청, 대한소방공제회, 이지웰페어(주) 공동 제작, 업무협약 예정('17.12월)
** 휴양시설 예약·이용, 복지정보 실시간 제공 등 소방공무원 복지 요구 충족
- 저금리 주거지원, 유자녀 기숙사, 상조사업 등 공제회 사업 확대 추진
- 공상·불승인자, 투병자 등 민간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축(D/B화)
※ '17년 민간지원 현황 : 총 19개 개인·단체 1,160명, 약 23.6억

○ (미래설계 복지) 퇴직 소방공무원 지원 인프라 및 일자리 확대

- 퇴직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퇴직자 교육·취업 컨설팅 등 시범사업 운영
- 조직 내 일자리 연계,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추진
※ '17년 200명 운영<학교안전지도관(중앙 22명), 의용소방대 지도관 및 자문위원(시도 약178명)>

□ 추진일정

- 설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8. 1.~3.
- 소방복지법 등 관련규정 제·개정 '18. 4.~6.
- 복지포털 등 전방위적 인프라 구축 '18.7.~12.

6

여성소방공무원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개발·시행

정책 목표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고 맞춤형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직무에 전념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 맞벌이·여성 소방관이 보육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토록 보육지원 체계 구축
 -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 지자체별 수요조사 후 민간위탁예산 지원 등(만12세 이하 자녀)
- 영유아 자녀 양육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조직 문화 확산
 - 비상소집 응소 제외자 지정·운영,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 임신(신)부, 부부소방공무원(동일관서 근무), 한부모 가정 등
- 소방청사 內 여성 편의시설 확충으로 근무여건 개선
 - 별도 휴게·대기실, 샤워실, 전용주차 등 여성 전용공간 개선
 - 노후청사 리모델링 또는 신청사 건립 시 설치되도록 표준안 마련
- 「엄마 소방관 응원의 날」 제정·운영
 - 분야별 여성 최고소방관 표창, 여성 소방관 직업체험, 기념행사 등
 - * (경찰) 7월 1일 여경의 날, (군인) 9월 6일 여군의 날 운영
- 현장대원 맞춤형 보직관리를 통한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 공상승인자·가임희망직원 등 보직조정, 보건휴가 의무 시행(자동 승인)
- 시·도별 여성복지정책협의회(가칭) 구성·운영으로 여성만의 소통창구 마련
 - 고충상담·처리,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동호회 등 소통 촉진

□ 향후일정

- 시·도 직원 의견수렴 및 추진계획 수립 '18.1.~3.
- 관련 규정 제·개정 '18.4.~8.

7

소방공무원 건강복지 인프라 조성

정책 목표

소방공무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복지환경을 조성하여 소방
활동 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에 강한 소방력 유지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건강정보 통합관리시스템”(가칭) 개발·운영
 - 재난현장 유해인자 노출(출동)이력 D/B 전산관리
 - 신규임용부터 퇴직까지의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결과 전산관리
 - 온라인 정신건강 설문조사 도입 및 상담채널 다양화(화상상담 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
 - 소방공무원 주요 질병*에 대응하는 특수건강진단 항목 재설계*
* 난청, 심혈관계·순환기계·근골격계 질환 및 희귀암 등
 - 의료인에 준하는 감염병 예방 및 추적관리 체계 마련
 - 내·외근 동일한 특수건강진단(정기건강진단) 실시* 추진
* 현행 : 외근 → 1년 1회(총 27항목), 내근 2년 1회(총 6개항목) 실시 중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및 치유 체계 고도화
 - 소방전문치료센터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 상담사 역량 강화, 소방관서 전담상담사 지정, 상담실 운영기간 확대 등
 - “심리안정프로그램”의 운영방법 다양화*
* PTSD 관리프로그램·수면장애 극복 프로그램, 여성소방공무원 힐링프로그램 등
 - 심신건강 지원사업간 상호 연계 방안 연구 및 효과성 측정 모델 개발
 - 정신건강 상담·검사·치료비 신청 및 지급절차의 전산화

□ 추진일정

- 건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8. 1월 ~ 9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개정 '18. 하반기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사업 고도화 '18. 연중

8

소방공무원 자살 예방 및 저감 대책 추진

정책 목표

소방공무원 자살 원인 분석 및 심신건강사업 효율화를 통해 소방공무원 자살 예방대책 마련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자살 원인조사* 실시
 - 유족 등 심층 인터뷰 추진, 원인조사 결과를 반영한 예방대책 수립
 - * 최근 5년 46명 원인조사 실시(중앙심리부검센터 협업)
 - ※ (자살자 추이) '13년 7명 → '14년 7명 → '15년 12명 → '16년 6명 → '17년 현재 14명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사업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심신건강사업*의 효과 및 장·단점 분석 후 개선 방안 마련
 -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21억), 진료·상담비 지원(4억), 심리안정프로그램(9.3억)
- 상시 소통·상담 가능한 직장 내 심리적 지지 환경 조성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확대* 운영(現 연중 4개월 → 10개월 확대)
 - 긴급 심리 지원체계* 구축 운영(건강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 * 참혹한 현장 목격 등 긴급 지원 요청 시 전문상담사 상담(병원 98, 상담센터151)
 - 직장 내 심신안정실 설치 확대·운영(現 전국 229개소 → 268개, 39개 ↑)
 - ※ 시·도 소방안전교부세 재량사업으로 '18년 약 20억 예산 편성(1개소 53백만원)
- 직무 스트레스와 연관(추정)된 자살 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방안 마련
 - 순직 인정을 위한 공상 신청(소송 포함) 단계부터 시도 담당자 및 소방과학연구소 연구원 1:1 지원체계 구축
 - 원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순직자에 준하는 민간지원 혜택 제공
 - ※ 자살자 유족 자녀 장학금, 양육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미취학 자녀)

□ 추진일정

- 소방공무원 자살자(최근 46명) 원인조사 '18. 상반기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사업 효율화 연구용역 '18. 상반기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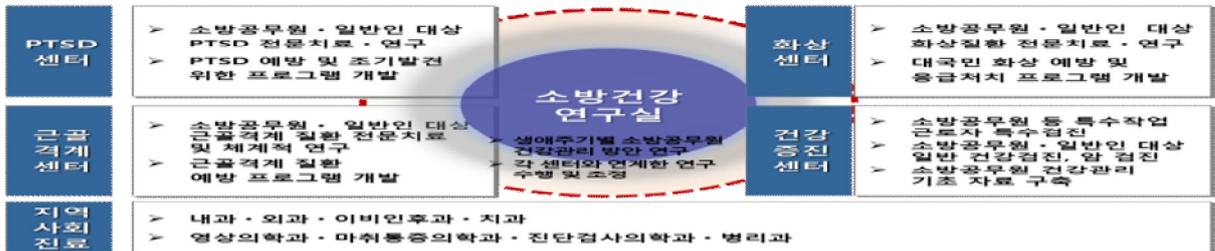
소방 복합치유센터 설립 추진

정책 목표

소방공무원의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안정까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소방 복합치유센터를 2022년까지 설립·운영

□ 주요내용

- 소방직무 특성상 처참한 현장에 상시 노출됨에 따른 PTSD 등 정신적 장애* 와 재난현장에서의 부상위험** 에 대비 전문치료기관 필요
 - * 소방공무원의 39%가 PTSD, 알콜성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중 한 가지 이상 경험('14년 전수조사)
 - ** 최근 5년 순직·공상 1,746명('12년 292, '13년 294, '14년 332, '15년 378, '16년 450)
-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에 따른 특수진료 중심의 특화된 서비스 (PTSD·화상·근골격계·건강증진센터, 소방건강연구실 / 4센터, 1연구실) 수행
 - ⇒ 선택과 집중,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 (소요예산) 1,182억원 (부지매입 64, 설계비 36, 건축비 974, 운영비 108)



- 전국 69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원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지속강화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연 20억원), 심리안정프로그램(연 9억원) 등 기존 사업과 연계수행으로 수익성 및 전문성 강화
- 국가기관으로부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관료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운영

□ 추진일정

- 예비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연구용역 추진 '18.1월 ~ 4월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대응 '18.4월 ~ 12월
- 차기년도('20년) 예산반영 추진 '19.1월

정책
목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 안정·회복의 場 역할을 수행할 심신건강 수련원을 제주도에 2021년까지 건립·운영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은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참혹한 현장에 빈번히 노출, 일반인 보다 심리질환 유병률이 약 4~10배* 높으나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심신건강 증진시설 전무

* 이화여자대학교,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전문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연구

※ 유사직군 수련원 현황

▶ 전국적으로 軍 68개소(직영6, 민영62), 경찰 8개소, 해경 3개소 건립·운영 중

-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을 위한 멘탈케어시설과 회복목적의 복지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 (멘탈케어) 심리상담실(상담사 상시근무), 건강증진실(건강측정, 치유장비체험) 심리치료 정원(향기치유정원, 맨발치유정원), 水치유실(족욕장, 바데풀)

- (복지시설) 숙박시설(90실), 컨퍼런스홀(250석), 휘트니스센터 등

※ 소요예산 : 294억원 (설계비 13, 감리비 15, 건축비 261, 시설부대비 5)

- 천혜의 자연환경* 을 보유한 제주도는 심신건강 증진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장소, 소방 심신건강수련원 입지로서 최적

* 세계7대자연경관, UNESCO 3관왕(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 (예정부지)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 427-8 외 1필지 (35,013㎡ / 약10,600평)

※ 예정부지는 현재 제주도 소유 도유지, 제주도에 위치한 유휴국유지와 교환 추진(기재부 협의 요)

- (입지여건) 제주 공항에서 대중교통 등 접근성 용이, 주변에 만장굴(세계 자연유산), 김녕해수욕장, 올레코스 등 인접 자연환경 조건 좋음

□ 추진일정

- 예정부지(도유지) 국유지 교환 추진(기재부협의) …… ‘18. 1월 ~ 2월
- ‘19년도 사업예산 요구 및 대응 …… ‘18. 4월 ~ 11월

11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및 예우 강화

정책 목표

순직 유가족 및 공상자에 대한 국가 및 시도 차원의 재해보상·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순직 유가족 보상제도 개선

- (순직범위 확대) 화재·구조 → 구급·소방지원·생활안전·훈련
- (유족급여 현실화) 재직기간별 차등보상 폐지, 최저 보상기준 마련 등
- (유가족 복지혜택) 휴양시설, 제휴서비스 등 현직과 동일 혜택 제공

○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확대

- (업적 재조명) 추모식*, 업적 기록부 발간 교육, 유가족 위로 행사 정착 등
* 위패 봉안식(6.6./중앙학교),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식('15년~/10월 4째주/현충원)
- (추모 조형물 건립) 흉상 및 기념비 등 표준안, 예산지원 방안 마련
* 사례 : 경기도 故 이병곤(흉상)·故 박재석(흉상), 故 윤재희(입체벽화) 등

○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체계 강화

- (신청 절차 간소화) 연금공단 시스템 연계를 통한 초과증빙 생략 등
- (경제적 부담 경감) 소방복지법에 법률근거 마련, 민간지원 확대 추진
- (법률지원 체계 구축) 공무상 요양승인(순직 포함) 행정소송 지원

- (구성) 소방정책과(소방정책과, 소방과학연구실)+시·도+학계+대한변협, 로펌 등
- (지원 내용) 시·도 신청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학문적 : 관련 의학 및 논문자료 제공, 논리 개발, 사례 분석 등
 - 법률적 : 무료 소송 대리, 법률적 자문, 행정소송 절차 정보 제공 등
 - 행정적 : 공무원연금공단 대응, 제도개선, 증빙자료 제공 등

□ 추진일정

- 재해보상 강화 및 민간지원 사업 효율화 '18. 상반기
- 공상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18. 연중

12 중앙-지방 간 주요 소방정책안 사전협의제 운영

정책 목표

시·도 주요 소방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참신하고 독창적 정책 공유를 위한 중앙-시·도간 소통·협력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시·도 소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정책 사전협의제**」 운영
 - 시·도의 새로운 정책수립 시 파급력이 높은 주요정책에 대해 정책의 타당성, 적법성, 부작용 등을 사전 검토하여 정책의 실효성 증진

< 주요 협의대상(예시) >

- 소방청 주요 정책방향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시·도의 특수시책
- 근무체계 변경 및 후생복지 등 직원들이 관심이 많은 특수시책
-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우수 정책(외부 제안, 내부 발굴 등)
- 기타 새로운 시책 시행으로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될 수 있는 특수시책

- 주요 소방정책 소통·공감을 위한 「**함께하는 정책소통 채널**」 운영
 - 주기적 시·도 **현장 방문·소통***을 통한 주요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 주요 소방정책에 대한 시·도 의견수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 정책소통팀 : 소방정책과 + (시·도 특수시책 관련) 소관부서로 구성 <안전별 상이>
- 지방의 **우수정책 발굴·확산**을 위한 소방청의 「**정책 징검다리**」 운영
 - 주요정책 사전협의제 및 정책소통 채널 등을 통한 시·도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책 발굴, 소관부서의 검토 후 시·도 적극 공유

□ 추진일정

- 「주요정책 사전협의제」 운영 '18. 연중
- 「함께하는 정책소통 채널」 운영 분기별 1회
- 「정책 징검다리」 운영 '18. 연중

정책
목표

중앙·지방간, 계급 상·하간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확산으로 구성원의 자존감 회복과 소방조직의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상호 존중·배려하는 “두드림” 운영을 통한 중앙·지방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계급 상·하간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일선 현장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주요 소방정책의 공감대 형성
 - ※ (두드림) 자유토론, 개선 건의, (사·도 및 소방서) 두드림 운영 지원, 건의사항 검토 등
 - 법령 제·개정 등 중앙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별 검토결과 및 향후 정책반영 일정을 해당 시·도에 통보

< 안건 예시 >

- 본인, 동료 직원의 고충·애로사항, 근무환경 개선 등 소방복지정책에 대한 사항
- 중앙 및 시·도의 주요 현안, 정책 제언, 효율적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건의 사항 등

-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으로 일선 현장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대한 법적 소통창구 마련
 - *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계류 중(소방경 이하 가입)
 - 기관장이 4급(소방정)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 가능(자율 설립)
 - * 230개 소방기관 : 소방청 1, 중앙119구조본부 5, 소방서 215, 소방학교 9 (17.12월말 기준)
-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배상처리 지원·소통체계 구축
 - 중앙·지방 소방관서별 업무처리 전담요원 지정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 보상·배상업무 사각지대 해소, 직원 부담 경감 등 조직분위기 쇄신

□ 추진일정

- 소통·화합을 위한 ‘두드림’ 운영 ’18. 연중
-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법안통과 이후
- 소방활동 피해 보상·배상처리 지원·소통체계 구축·운영 ’18. 연중

14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 추진

정책 목표

현장 대원들의 복제 개선 의견을 수렴, 소방제복의 품위 고양과 품질 개선을 통해 소방활동 현장성 및 상징성 제고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15년 국정감사 지적* 및 일선 소방공무원 개선요구**
 - * 기동복 : 활동성 저하, 땀 배출 안되어 소방관 80% 반대
 - ** 근무복 : 정장스타일 폐지, 셔츠에 계급장 등 부착 스타일

<복제개선 연구용역 / 300일('17. 2. 14 ~ 12. 11) / 141백만원>

- 한국섬유개발연구원(참여율 80%), 주식회사 지구(참여율 20%)

*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안 제시 및 시제품 제작 등

□ 용역결과 *주된 제복

- 기동복 : 재질(활동성·통기성) 중심으로, 형상 및 색상 개선
 - (재질) 재료의 혼용율과 직조·가공방법 등으로 활동성 및 통기성 개선
 - (색상) [1안] 시인성 제고를 위한 상·하의 오렌지색
[2안] 상의 오렌지색, 오염민감도를 감안한 하의 진청색
- 근무복 : 소방공무원 개선요구사항이 반영된 스타일로 개선
 - (재질) 구김이 적고, 부드러우며 물세탁이 가능한 재질로 제시
 - (색상) 상의는 의미와 특색 있는 연한 흙색, 하의는 기존 검회색 제시

□ 추진계획

- (시범착용) 용역결과 반영한 기동복 및 근무복 3개월 정도 의견수렴
- (규격작성) 개선의견 적용, 규격 및 검사기준 작성 후 공인검사기관 검증
- (법령개정) 소방공무원 복제규칙(행안부령) 및 복제세칙(소방청훈령) 개정

□ 향후일정

- 시제품 시범착용 '18.1.~3.
- 규격 작성 및 법령정비 '18.4.~8.

15 소방보조인력 운영 활성화

정책 목표

소방보조인력(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의 근무방식을 개선하고
개인별 전문능력 개발 및 특성화로 자긍심 고취와 업무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소방보조인력 특기 개발 및 자격증 취득으로 소방에 필요한 인력 만들기
 - (인적자원구축) 단순 현장보조업무에서 적성(특기), 보유 자격증 등을 고려 각 분야에서 활동 가능하도록 의무소방대 관련 규정 개정
 - (근무개선) 시·도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무교대방식 개선
 - 근무여건(인원)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재량권 부여, 탄력적으로 운영
 - ※ 근무교대 방식 개선 및 근무일지(을지) 등 표준화
- 업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을 통해 능동적·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 (교육훈련) 화재진압 및 생활안전구조 등 전문교육기관(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등) 위탁교육(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추진
 - (장비보강) 현장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지급 추진
 - 소방청 및 시·도 예산 반영 등 지급가능 여부 추진
- 소방보조인력 건강·복지 강화
 - (건강한복무) 현장활동 보조시 PTSD 노출정도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증액 등 예산정책 자료로 수집·활용
 - (활기찬생활) 소방보조인력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 개최(본부단위 연 1회 이상)
 - 주요내용: 모범대원 포상, 복무관서 소개, 병영체험 등
 - (휴 가) 정월 15%내에서 휴가실시 기준을 개선(삭제 또는 30%로 확대)

□ 추진일정

- 소방보조인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18. 1월
- 소방보조인력 운영 실태 점검 및 담당자 워크숍 개최 상·하반기 각 1회

화재예방과

Contents

1. 화재 인명피해 10% 저감 5개년 종합계획 추진 / (정부평가)	75
2. 재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 지원 /	76
3. 소방예방민원 종합포털사이트(안전터) 구축 /	77
4. 주거시설 인명피해저감 종합대책 추진 /	78
5. 어린이 등 안전약자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 (국정과제)	79
6.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고도화 / (국정과제)	80
7. 자동차 등 화재취약대상 소방시설 기준 정비 /	81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82
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역량 고도화 /	83
10.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가칭) 』 설립 추진 / (국정과제)	84
1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재정비 /	85
1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국정과제)	86
13. 발전적·정책환류형 민간 시상제도 시행 /	87
14.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성 제고 및 관리사 책임윤리 강화 /	88
15.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 설립 추진 /	89

1 화재 인명피해 10% 저감 5개년 종합대책 추진

정책
목표

2016년 화재사망 306명 기준, 향후 5년간('17~'21) 평균 사망자 수를 10% 이상 저감하여 OECD 국가 중 화재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자리매김

□ 주요내용

◆ 화재사망 저감목표 : 5년('17~'21년) 평균 **10% 저감**

☞ 2016년 306명 대비, 5년 평균 275명으로 저감(평균 31명 ↓)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 국가목표(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 화재)」와 연계 추진

- 안전의식 제고, 법·제도 정비, 화재대응역량 강화, 첨단기술 도입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추진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방활동)

- ①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률 획기적 저감
- ② 화재취약 장소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 ③ 피난약자 거주시설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선제적인 화재
대비·대응역량 강화
(대비·대응)

- ① 출동인력 및 현장활동 프로세스 기반 강화
- ② 화재현장 지휘체계 확립
- ③ 특수화재 대응시스템 고도화
- ④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이송체계 확립
- ⑤ 현장출동 장비 보강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안전의식)

- ① 맞춤형 화재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 확대
- ② 국민 참여 안전문화운동 전개

- 최근 5년간 사망자 다수 발생 및 화재취약 장소 특별대책 수립·추진

※ 최근 5년간('12~'16년) 장소별 화재사망자 발생 순위

- ① 주거시설(64%) - ② 자동차 화재(7.3%) - ③ 산업시설(6.5%) - ④ 생활서비스*(4.5%) - ⑤ 판매, 업무시설(4.2%) 順

* 생활서비스 :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오락시설, 음식점, 독서실, 고시원 등 일반서비스 시설

- * ①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 ② 자동차 화재저감 종합대책, ③ 전통시장 화재저감 종합대책, ④ 고층건축물 화재저감 종합대책 ⑤ 안전약자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 등

□ 추진일정

- 화재 인명피해 10% 저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18.1월
- 화재사망자 다수발생 장소별 세부대책 수립 '18.2월

2

재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 지원

정책 목표

재난피해지역의 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조사, 복구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화 도모

□ 현실태 및 문제점

-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가스·전기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피해규모 조사 및 조기복구 체계 미 구축
 - '16년 경주지진, '17년 포항지진 발생시 중앙소방 특별조사단과 피해 복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한 바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 ↳ 체계적이고 신속한 피해조사·복구를 위해 훈령 및 매뉴얼 제정 필요

□ 주요내용

- 「재난지역 중앙소방 특별조사단·복구지원단 운영 규정(훈령)」 제정
 - “중앙소방 특별조사단” : 구성 시기(재난대응 완료 시점부터 1일 이내), 점검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구성 절차·방법, 주요 점검내용 등
 - “중앙소방 복구지원단” : 참여 유관기관·단체 선정기준, 복구 필요 물품 조달방안, 복구지원단 운영기간 등
- 중앙소방 특별조사단·복구지원단 운영 매뉴얼 마련
 - 인원구성, 필요인력 및 물품 동원, 운영절차, 비상연락망 등 특별조사단 및 복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추진일정

- 중앙소방 특별조사단 및 복구지원단 운영규정 제정 '18.2월
- 중앙소방 특별조사단 및 복구지원단 운영 매뉴얼 마련 '18.9월

3

소방예방민원 종합 포털사이트(안전터) 구축

정책 목표

예방분야 민원(질의)과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처리·획득할 수 있는
종합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국민불편 최소화

□ 추진배경

- 화재예방 분야 민원* 중 단순 법령·기준 안내, 유사질의, 지침·해설서 자료 요구 등이 다수를 차지

* 2016년 기준 민원처리 건수 : 국민신문고 5,600건, 전화·서면·방문 등 다수

⇒ 민원건수 증가로 직원 업무가중 및 답변 충실도·신속성 저하

- 예방 관련 민원(질의)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과 공간(포털사이트, 앱 등) 부재로 국민 불편 야기

□ 주요내용

- 민원인, 전문가, 내부직원들이 손쉽게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획득·활용할 수 있도록 예방민원 포털사이트 가칭 ‘소방청 안전터’ 구축



□ 추진일정

- 기존 민원에 대한 답변자료 수집, 전문가 풀 구성 '18. 상반기
- 가칭 ‘소방청 안전터’ 사이트 구축 '18. 상반기

4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 추진

정책 목표

화재발생 및 화재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으로 주거시설의 화재사망 저감

□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12~’16년) 주거시설이 화재발생 건수와 화재사망을 모두 1위 차지

- 화재발생 : 주거시설 25.8% - 자동차 12% - 음식점 6.1% - 공장 6.0% - 창고 2.7% 순
- 화재사망 : 주거시설 64% - 자동차 7.3% - 공장 6.5% - 음식점 4.5% - 업무시설 4.2% 순

- 주거시설 화재발생 : 지속적인 증가추세 (’12년 24.7% → ’16년 26.6%)

- 주거시설 화재사망 : 전체 화재사망자의 2/3 차지(평균 64%)

구 분	평 균	2012	2013	2014	2015	2016
주거시설 화재발생 비율(%)	25.8	24.7	25.9	25.8	26.1	26.6
주거시설 화재사망 비율(%)	64.0	68.9	65.8	57.5	66.0	63.1

□ 주요내용

◆ 주거시설 화재사망 저감목표 : 5년(’17~’21년) 평균 12% 저감

☞ 2016년 193명 대비, 5년 평균 171명으로 저감(평균 22명 ↓)

- 홀몸노인 등 피난약자 거주시설에 초기 진화를 위한 상수도 연결방식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합성수지 배관 등 활용, 최저비용으로 설치)
- 관계부처(산업부)와 협업, 전기 및 가스화재 위험요인 사전제거
 - * (전기) 일반주택 전자기기 발열량 측정, 지역아동센터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 * (가스) 홀몸노인 주거시설 등에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등
- 주택 화재경보기 보급·설치 촉진 (지속적인 홍보 및 무상보급 확대)
 -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17.2월)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 설치 확인 강화

□ 추진일정

- 피난약자 거주시설 상수도연결 간이 SP 설치 추진 ’18.6월
- 관계부처(산업부)와 협업, 각종 위험요인 사전제거 연중
- 주택 화재경보기 보급·설치 촉진 연중

5

어린이 등 안전약자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정책 목표

안전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개선 및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약자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 주요내용

- 안전약자(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 강화
 - 병설유치원·산후조리원에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 (현) 병설유치원·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 (개선) 노유자시설로 분류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유치원(2층 이상) 인가 시 소방시설 적법성에 대한 소방관서장 확인 의무화(「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 ※ 400㎡ 미만의 유치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 피난기구는 미끄럼대만 설치
- 노후 건축물·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한 시·도지사의 화재 안전정비사업 예산지원 근거 마련(「소방기본법」 제13조 개정)
 - ※ 지원대상 : 화재경계지구 123, 쪽방촌 29지구 441개소, 전통시장 1,577개소(등록시장)
- 교육부·복지부·여성부와 화재안전 협력체계 구축
 - 학교시설법, 의료법, 영유아복지법 제·개정 시 소방청과 사전협의 시스템 구축
 - ※ (사전협의) 안전약자 시설의 설치 층, 경계벽 재질, 경사로 설치 등에 대해 지문 검토의견 컨설팅

□ 추진일정

- 소방관계법령 개정 '18. 7월
- 학교시설관계법령 개정 협의 '18. 7월
- 관계 부처 화재안전 협력체계 구축 연중

6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고도화

정책 목표

화재발생 시 대규모 피해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소방 안전대책 추진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대형피해 발생 사전 차단

□ 주요내용

- 전통시장 화재위험등급 분류제 도입, 화재안전관리 강화
 - (등급/기준) A~E급 5개 등급/소방, 건축, 전기, 가스, 안전관리
 - * 총 1,720개소(등록 1,577, 미등록 143) 중 등급분류 1,671개소 미분류 49개소(노점시장 등)
 - (관리) D~E급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우선 보강·개선추진(중기부와 협업),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점검 강화 (E급 연 1회 이상)

등 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관리상태	우수	양호	미흡(개선가능)	기준미달(개선필요)	심각
개소(1,671개)	212	744	551	122	42
점검주관	소방서			시·도 소방본부	중앙
점검주기	(2년 1회)	(1년 1회)			

- 대규모 전통시장(대형 ^{점포 1,000개 이상} 20, 중대형 ^{점포 500 이상 - 1,000 미만} 36) 중점 겨울철 합동안전점검
 - 소방,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 전통시장 화재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중기부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IoT(사물 인터넷)기반 화재안전 감시시설 설치 전 관할 소방서장 소방시설법령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추진일정

- 전통시장 겨울철 합동안전점검 '18. 1월
- 전통시장관련 소방시설법령 개정 '18. 6월
- 화재안전감시시설 설치 전 관서장 확인 연중

7 자동차 등 화재취약대상 소방시설 기준 정비

정책 목표

자동차 등 화재취약 대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하여 정비 ※ 연구용역 결과 및 규제개선사항 반영

□ 주요내용

-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소방시설법」 제8조의2 신설)
 - (현행) 7인승 이상 → (개선)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추진
 -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
 - *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이관) 소방시설법
 - ※ (연구용역) 자동차 화재하중에 따른 소화 적응성에 관한 연구('17.8.10.~'18.1.6.)
- 축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 (현행) 3,000㎡ 이상의 축사에는 옥내소화전 설치 → (개선) 옥내 소화전 설치를 제외하고 옥외소화전 설치
 - (사유) 축사 내 옥내소화전 누전으로 가축 감전 및 낙태현상 발생
 - ※ (한국낙농육우협회) 개방형 축사에 옥내소화전 설치 제외 건의('17. 3. 31.)
-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확인제 도입(「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대수선 등 건축물 내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 시 소방 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안전조치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뽀로로파크) 화재('17.2.4.) 후속대책

□ 추진일정

- 자동차 소화기 비치에 관한 법령이관 및 개정 '18. 상반기
- 축사 및 공사장 소방시설 기준 개선 '18. 상반기
-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확인제 도입 '18. 7월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정책 목표

총괄재난관리자 권한 강화 및 초고층 건축물 안전점검 제도신설 등 안전관리기준 개선으로 선제적 재난안전사고 예방시스템 마련

□ 주요내용

-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대응체계 실태점검 강화
 - (중앙) 쏘 대상의 10% → 20% 이상(표본점검·소방특별조사 등)
 - (시·군·구) 반기별 1회 이상 전수 점검
- 총괄재난관리자 권한 강화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신설
 - 법령위반 사항 발견 시 관리주체에 필요한 조치 요구 및 행정기관 통보
 -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의무사항 정비
- 피난안전구역 안전기준 강화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부적합 시 보완 등 필요한 조치 명령권 및 처벌조항 신설 ※ 필요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300만원) 부과
 - 피난안전구역에 심장충격기, 방독면 또는 화생방 마스크 비치 의무화
-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근거 마련
 - 소방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명령권 신설
- 초고층건축물 「사전재난영향성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 심의위원선정 및 심의절차·기준·내용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 ※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추진일정

-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발 연구용역 '18. 2월
- 초고층재난관리법령 개정 '18. 3월
-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대응체계 실태점검 연중

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역량 고도화

정책 목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안전약자를 위한 피난시설 설치 및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장애인 등 안전약자를 고려한 피난시설 설치기준 강화
 -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적용업종 확대 (7개*→23개 소업종)
*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 감상실,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 확대(4종→6종*)
* (기존) 완강기,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 (추가)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 조정
 - 대인사망 1억원 → 1억5천만원, 대물보상 1억원 → 10억원으로 상향
 - ※ (타 법 사례) 화보법, 자배법, 재난관리법 사망 1억 → 1억5천, 대물 1억 → 10억
 - 보험료 할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험사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 소방청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를 보험사로 제공 : 연 1회 → 상시 (가입·갱신 시)
- 다중이용업소 화재저감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교육청 시스템(나이스)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연계, 학원허가 정보 공유
 - 자유신고업종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국세청 정보시스템과 연계 추진
- 방 탈출 카페 등 신종 유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방안 마련
 - 다중이용업의 개념 재정립 및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신종 유사 다중이용업의 제도권으로 편입
 - 소관부처가 없는 경우 소방관서에서 직접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조치

□ 추진일정

- 신종 유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방안 연구용역 '18. 2월
- 교육청 및 국세청 정보 시스템과 연계 '18. 4월
-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 법령개정 '18. 5월

10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가칭)』 설립 추진

**정책
목표**

신기술 적용을 위한 소방시설 안정성 평가와 화재안전기준 제·개정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국가화재안전기준의 탄력성과 신뢰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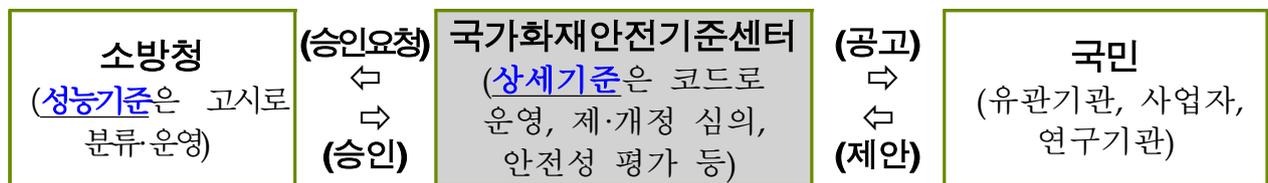
□ 추진배경

- 현행 화재안전기준에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 성능(기능)기준*과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가변적인 상세기준**이 혼재되어 탄력적 제·개정 애로
 - * 설치대상·장소, 기본성능 등 (예 : 비상전원회로는 내화배선으로 구성)
 - ** 성능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법·수단·사양 등 (예 : 내화배선의 전선종류 및 공사방법)
- 신기술 적용을 위한 소방시설 안전성 평가, 화재안전기준 연구 전문기관不在
 - ↳ 화재안전성 입증을 위한 케이스별 기준·방법에 대한 전문가 합의 시스템 필요

□ 주요내용

- 現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 국가코드(Code)化 추진
 - ※ 상세기준 제·개정 기간 단축, 불명확·불합리한 기준 제거로 국민 혼란 해소 및 업무 담당자 부담 경감 (화재안전기준 관련 연간 질의답변 평균 2,800여 건)
-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가칭)」 설립 추진
 - 상세기준 제·개정, 新 소방시설 및 국제기준 수용 검토, 안전성 평가 등 수행
 - ※ 유사기관 : 국가건설기준센터(국토부), 가스안전기술기준 사무처(산자부)

<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가칭)」 운영체계 >



□ 추진일정

-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가칭)」 설립 관련 공청회 '18.1월
- 사업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 관련 연구용역 추진 '18.2월

1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재정비

정책 목표

2016. 1월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시행 이후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설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을 반영한 新 설계기준 마련

□ 추진배경

- 경주('16), 포항('17) 지진 발생으로 인한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심 증가
 - 현장점검 결과 소화수조 파손, 스프링클러 헤드 손상 등 이상 현상 다수 발생
- 내진설계 관련 상세 기준 미비로 관련 단체들의 민원* 및 질의** 빈발
 - * 한국내진안전기술원, 한국소방시설 내진산업협회 등 기준 개정 지속적 요구
 - ** 국민신문고 소방시설 내진관련 질의 134건('17. 1. 1. ~ '17. 11월 현재)

□ 주요내용

- (내진설계 적용설비 추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기존 설비* 외에 국제기준 및 유사설비 여부 등을 검토해 내진적용 대상 설비** 추가
 -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SP), 물분무 등 ** 간이 SP, 화재조기진압용 SP 등
- (내진설계 상세기준 정비) 현행 기준 및 해설서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모호한 기준과 실제 시공현장에서 혼란이 많은 규정 정비
 - 소화수조 자체 내진 기준, 포소화설비 상세 설치기준 등 추가
 - '흔들림방지버팀대' 등 논란이 많은 개별장치의 설치장소기준 정비

⇒ 내진설계 상세기준 명확화로 민원 및 문제소지 가능성 사전 차단
- (관계부처 협의) 『건축구조기준(국토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안부)』 등 내진 관련 타 기준의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의
 - * 지역별 설계지진 세기, 내진성능수준 등 시설별 공통 적용사항 명시('18년까지 적용 의무화)

⇒ 지역별 환경과 건축구조에 적합한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

□ 추진일정

- 전문가회의, 개정(안) 마련 '18. 상반기
- 의견조회,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18. 상반기

1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정책 목표

철도, 공항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및 중앙특별조사단 역량강화로 대형사고 예방

□ 주요내용

- 철도, 공항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안전컨설팅 → 2년 1회 / 중앙특별조사* 실시

계 (개소)	공항 항만	철도 지하철	원자력	금융 요액 의 혈	산업 단지	전력 지하구	통신 전산망	석유 (생산비축)	가스 공급	정부 청사	전통 시장
234	21	8	24	48	10	36	24	14	3	4	42

* 대상별 세부계획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에서 별도계획 수립·시행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범위 재조정(「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의2)
 - 국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전통시장의 범위 조정 등(대형, 중대형)
-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인력 보강 및 역량 강화('18년 국정과제)
 - (인력) 現 2명(1개조) → 4명 확대(경1, 경2, 위1 / 2개조 운영)
 - * '18년 상반기 수시직제 요청 / 단기적으로 시·도 파견인력 활용
 - (조사단) 現 20명(소방 2, 전문가 18) → 임기 연장 및 34명 확대*
 - * 중앙특별조사단 2개조 운영을 위한 임기 연장 및 외부전문가 인력풀 확대
↳ 제1기 외부위원 위촉기간 연장(1년→2년), 외부전문가(18명→30명)
 - ※ 향후 청장 직속기관으로 별도 독립 기반 마련 (총원 16명, 4개 권역별 운영)
 - (역량강화) 조사단 워크숍 개최(연1회), 세미나 참석, 조사백서 발간 등

□ 추진일정

- 특별관리시설물 중앙소방특별조사 실시 연중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범위 조정 '18.6월
- 워크숍 개최 및 조사백서 발간 '18.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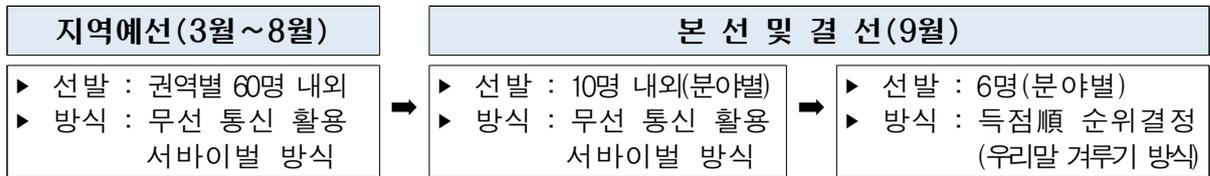
정책
목표

예방 분야 경연대회 및 시상을 통해 관계인의 화재예방·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자율 안전문화 저변확대

□ 주요내용

○ 제2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경연대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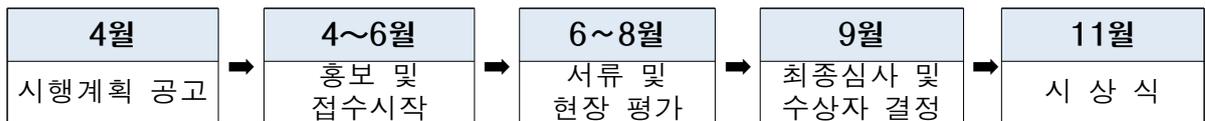
- (주최/주관) 소방청 / 한국소방안전협회
- (목적) 화재예방분야 우수인력 발굴·시상으로 안전의식과 관심 제고
- (경연절차) 권역별* 지역 예선 후 본선·결선을 통해 수상자 결정
* 8개 권역 :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부산·울산·창원, 제주



- (인센티브 개선) 시상금(300→500만원) 및 훈격(청장→대통령상) 상향
※ 정부분야 1위 소방공무원 1계급 특진 추진(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제1항제2호)

○ 제17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추진

- (주최/주관) 소방청·경향신문사 / 안전인증원·소방산업기술원·소방안전협회
- (목적) 안전관리 우수기업 표창, 안전중심의 기업경영 문화 확대
- (심사절차) 1차서류심사·2차현장심사·3차최종심사로 수상자 결정



- (인센티브 개선) 안전대상 우수기업 부문 종합정밀점검 면제, 특별상 수상 소방공무원 1계급 특진 추진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18. 2월
- 소방과학·기술경연대회 지역예선 '18. 3~ 8월
- 대한민국 안전대상 서류 및 현장심사 '18. 6~ 8월
- 최종 수상자 결정 '18. 9월/11월

정책
목표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관리업과 일반관리업으로 구분하고 관리자 행정처분제도를 개선하여 부실점검 방지 및 전문성 제고

□ 현 실태 및 문제점

- 기술인력·보유장비 등 점검능력과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점검 난이도 구분 없이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인만 갖추면 모든 건축물 점검 가능
 - 소규모 업체의 경우 폐업 등에 따른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과도하게 단가를 낮춰, 부실점검의 위험성 증가 및 시장 교란의 원인 제공
 - ※ 등록기준 : 주된 기술인력 → 관리자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등 2인 이상
 - 현재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감리업의 경우 전문과 일반으로 업종을 구분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의 중요도에 따른 부실점검의 경중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 기준*으로 처분하고 있어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야기
 - *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취소

□ 주요내용

-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소방시설관리업으로 구분(소방시설법령 개정)
-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별점제” 도입(소방시설법령 개정)
 - 위반내용의 중요도별 별점 차등부과, 누적별점에 따라 ‘자격정지’ 등 처분
 - ※ 예) 유도등 점등불량 개수별 1점, SP 습식밸브 작동불량 5점, 수신반 차단 20점 등

□ 추진계획

- 소방시설관리업 전문화 방안 등 연구용역 ’18.2 ~ 10월
- 소방시설법령 개정 ’18.12월

15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 설립 추진

정책 목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 소방안전협회의 공익성 제고 및 국가의 지도·감독 강화

□ 추진배경

- 국가의 소방안전 정책 추진 용이성 확보를 위해 現 소방안전협회의 공익성 高揚
 - 협회에 대한 소방 및 안전관리 기술향상·홍보 등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공익법인에 적합한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 설립 필요

□ 법령개정

-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 설립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 완료
 - * 개정발의('16.11.11) → 법사위의결('17.12. 5) → 본회의결('17.12. 8) → 공포('17.12.26.예정)

□ 추진 내용(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소방청	한국소방안전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방안전원 설립허가 ○ 한국소방안전원 정관 승인 ○ 원장·비상임 감사·비상임 이사 임명 ○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법률 위임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해산·안전원 설립 총회 의결 및 설립허가 신청 ○ 한국소방안전원 정관 제정 및 승인신청 ○ 임원 구성 및 임명제청 ○ 협회 규정, 등기부, 시설물, CI 등 정비

□ 추진일정

- (재)한국소방안전원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17. 12 ~ '18. 6월
- 정관 제정, 협회 해산 및 안전원 설립 총회의결 : '18. 2.
- 소방기본법시행령 개정 : '18. 3.
- 안전원 설립 허가 신청 : '18. 3.
- 원장, 비상임 감사·이사 임명 추진(운영지원과) : '18. 3.
- 설립등기, 부동산 공부 변경, 협회 제 규정 정비 : '18. 5. ~ 6월

화재대응조사과

Contents

1. 대형·특수화재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역량 강화 /	93
2. 국가중요시설 등 자체소방대 운영기준 마련 / (국정과제)	94
3. 재난·안전 약자를 위한 화재대응 대책 선진화 /	95
4. 소방자동차 신속출동 인프라 강화 / (국정과제)	96
5. 국가화재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97
6. 화재 원인규명을 제고를 위한 화재조사 역량 고도화 / (국정과제)	98
7. 위험물 안전관리 및 GHS 국가주관기관 역할 제고 /	99
8. 의용소방대 재난대응역량 강화 /	100
9.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능력 향상 /	101

1 대형·특수화재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역량 강화

정책 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원전, 초고층,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등 대형·특수화재에 대한 대응역량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원전, 초고층 등 대형·특수화재 위험특성 기반 대응기술 연구개발 추진
 - 현장지휘관,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하는 연구·개발체계 구축
 - 대상물별 위험특성, 특수화재 사례 분석 등을 통한 대응기술 개발
 - *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 대응기술 연구발표대회 병행 추진(5월)
 -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의 지원근거 등 마련(소방기본법령 개정)

< 소방기본법령 개정 내용 >

- [자료조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
- [연구개발] 대형·특수화재 대응기술 연구·개발사항 의무화, 비용 국가지원 근거 마련
- [계획·훈련] 대형·특수화재에 대비한 대응계획 수립·시행, 훈련실시 근거 신설

-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형·특수화재 대응훈련 실시
 - 거주자 피난, 자위소방대 대응, 소방력 투입 등 실질적 대응역량 강화
 - 토론 기반 및 실행 기반 훈련의 병행으로 현장 적용성 강화
- 현장대원의 팀단위 소방전술 운용능력 제고
 - 현장대원 임무수행 기준 체계화, 교육·훈련 강화(9월, 기술경연대회)
 -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대응능력 자격인증 시험」 운영(연중)
- 대형·특수화재 발생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운영
 - (대응지원) 대응과정 자문 및 정책 반영(청 정책자문위원 등 활용)
 - (법률지원) 대응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자체 변호사 및 대한변협 활용)

□ 추진일정

- 대형·특수화재 대응기술 연구·개발 추진 '18. 2~12월
-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 대응기술 연구발표대회 개최 '18. 5월
- 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 '18.9월/연중
- 대형·특수화재 대비·대응 등 지원체계 구축 '18. 3월

2 국가중요시설 등 자체소방대 운영기준 마련

정책 목표

공항,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자체소방대 편성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주요내용

- 국가중요시설 등에 자체소방대 설치의무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운영상황 관리·감독 근거 마련
 - 국가중요시설 : 공항, 발전소(화력, 원자력), 석유비축기지, LNG인수기지
 - 특수시설 : 철도터널(길이 30km이상) , 도로터널(길이 5km이상)
- 자체소방대의 인력·장비 확보, 대원의 자격 등 운영기준 제도화
 - 소방대의 인력·장비 확보 및 교육훈련 기준에 대한 근거와 소방대 종류별로 세부기준 마련
 - ※ 자체소방대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이 자체소방대 설치할 경우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
- 자체소방대의 긴급통행, 강제처분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공설 소방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체소방대 운영현황>

대상수	설치근거		운영방식			인원			소방차량
	법정	비법정	직영	전부위탁	부분위탁	총원	자체직원	용역	
311	93	218	250	35	26	10,251	9,026	1,338	646

□ 추진일정

- 법률 제정안 마련 및 공청회 등 제도도입 기반 조성 '18. 6월
- (가칭)자체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8. 12월

3

재난·안전 약자를 위한 화재대응 대책 선진화

정책 목표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지원, 화재대응 매뉴얼·화재통계 관리 개선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 주요내용

- 복지시설 종사자 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
 - 소방대상물 자체소방훈련 지원센터 설치(215개 소방서), 훈련 지원체계 구축
 - 훈련 시나리오 작성 컨설팅(무각본 소방훈련 등), 훈련지도 및 합동훈련 실시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안전취약계층 피난 유도 등 관련사항 검토하여 미비점 개선·보완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대처 사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에 반영
 - ※ 민·관합동 소방훈련 등을 통해 매뉴얼 개선, 훈련 및 환류
-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국가화재정보통계 관리
 - 국가화재정보통계 내 장애의 유형(지체, 시각장애 등 15종) 및 장애 수준(1~6급) 반영, 화재예방 정책수립시 기초자료 제공
 -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서식3의8(소방청 훈령) 개정

□ 추진일정

- 복지시설 종사자 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 '18. 연중
-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사항 검토 및 수정·보완 '18. 연중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서식 개정 '18. 6월

4

소방자동차 신속출동 인프라 강화

정책 목표

소방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현장 신속출동 기반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 주요내용

- 긴급차량 우선 교통시스템(충북 시행) 확대 운영(경찰청 협업)
 - 소방차 출동 시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 연계
 - < 시도본부 119종합상황실 ↔ 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



- 교통 신호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시스템 구축
 -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를 통한 출동시간 단축
 - ※ 現 479개 → 5년간 139개 추가 설치('18년 54, '19년 28, '20년 20, '21년 21, '22년 16)
 - 긴급차량 우선 신호 기술 표준화 마련(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협업)
 - ※ 차량 단말기와 교차로 신호제어기 간 연동을 위한 통신 표준 마련
- 소방차 진입장애 구간 내비게이션 정보 제공 추진
 -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 소방차 진입장애 구간 정보 제공
 - ※ (청) 진입장애 구간 정보제공 → (내비업체) 진입장애 구간시 내비 음성 등으로 안내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 및 캠페인 지속 추진
 - 국민 참여 훈련 실시(분기 1회), 출동로 확보 캠페인 등 홍보 강화(월 1회)

□ 추진일정

-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연계 추진 '18. 12월
- 소방관서 신호제어시스템 확대 등 교통신호시스템 개선 '18. 연중
- 소방차 진입장애지역 내비게이션 정보 제공 '18. 12월
- 소방차 길 터주기 범국민 훈련 및 캠페인 '18. 연중

5 국가화재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정책
목표

화재조사 데이터의 다양한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자율화재예방 기반 조성

□ 주요내용

- PC, tablet PC, mobile 등 호환 가능한 화재분석프로그램 개발
 - (분석기능 강화) 화면, 메뉴, 구성 등을 그래픽화하여 접근성 개선
 - (활용편의성 제공) SNS소셜 공유, 다양한 문서변환 및 다운로드 기능 지원
 - (빅데이터정보 공유) 기간별, 행정구역별 화재관련 취약정보 제공
 - (홍보기능 강화) 화재예방 및 대처방법 등 동영상 콘텐츠 제공
- 대국민용 화재위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전국, 시·도(17개), 시·군·구(226개), 소방서별 화재·행정정보에 대한 그래픽 지도 및 차트 등 다양한 정보를 이미지화 제공



- 대·내외 기관 및 시스템간의 연계 모듈(Open API)¹⁾ 개발
 - 화재통계정보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연계시스템 구축
 - 전국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 공유를 위한 표준API 개발 및 배포

□ 추진일정

- 중복성 심사 등 사전협의(행정안전부 등) '18. 2월
- 구축사업 조달의뢰(조달청 등) '18. 4월
- 위험정보시스템 정식 운영(대국민 및 유관기관 등) '18. 12월

1)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6

화재 원인규명을 제고를 위한 화재조사 역량 고도화

정책 목표

화재조사 전문능력을 강화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를 정확히 규명하고 소방정책에 환류함으로써 국민의 화재피해 최소화 도모

□ 주요내용

- 화재감식기법 향상을 위한 **화재실험연구 및 학술활동 전개**
 - 과학적 화재분석을 위한 재연실험 실시(연중), 전국 화재조사 학술 경연대회 개최(4월), **실물화재 감식경연대회*** 개최(11월)
- **화재사고 중앙합동조사단 운영**(연중) ⇒ 화재안전정책 발굴 기여
 - (구성) 분야별(전기, 가스, 위험물 등) 민·관 전문가 20명 내외
 - (내용) 화재원인, 소방시설작동, 피해분석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
 - ※ 서문시장, 소래포구어시장 등 화재 시 운영 ⇒ 자동화재속보기, 방수천막 설치 등 예방정책 반영
- 화재감식 등 **선진 화재감식기법 연수 실시**(상반기)
 - 화재분류 및 운영체계, 감식기법, 관련 법체계 등 선진시스템 도입
- 시도 **광역화재조사팀, 서 합동조사팀 운영 등 전문 조사대응시스템 확대 추진**
 - 시도 단위 광역화재조사팀 설치·운영 ⇒ 신속한 화재조사지원체계 마련
 - 서 합동조사팀(전기, 가스 등) 구성·운영 ⇒ 과학적 화재조사기반 마련
- **소방과학연구실 연계,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 박사급 전문연구원과 합동감식·감정기술, 전문장비 사용법 습득
- **국내·국제 자격증 동시보유 전문 화재조사관 양성**
 - **국내**(화재조사관), **국제**(미국화재폭발조사관) 자격시험 실시(중앙소방학교, 11월)

□ 추진일정

- 업무계획(학술 및 감식 경연대회 운영 등) 수립 '18.1월
- 화재사고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18. 연중
- 전문 조사대응시스템 개편 '18. 연중
- 소방과학연구실 연계,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18. 연중

7

위험물 안전관리 및 GHS 국가주관기관 역할 제고

정책 목표

위험물 안전관리 취약 대상에 대한 단속 및 검사 강화로 사고를 예방하고 유엔국제기준(GHS)²⁾ 국가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주요내용

○ 위험물 운반 자격 및 교육 강화

- 위험물 운반자*자격제** 도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위험물법령 개정)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및 교육 이수자

○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정례화

- 위험물 표시 차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 가두검사

* 분기별 1회 이상 국토부,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의 합동 단속

- 소방특사경 지정 확대하여 위험물 단속업무 집행력 제고

* 위험물 운송·운반 및 무허가위험물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신속 조치

○ 국가안전대진단 대량위험물 제조소등 민관합동 안전진단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중 표본 130여개소 합동검사

○ 위험물질 분류·표지 국제기준(GHS) 국가주관기관 역할 제고

- 정부합동위원회 운영(연 2회), 국제회의 참석(연 2회, 제네바)

- GHS 통합표준안* 마련 및 소위원회** 구성

* GHS 통합고시 추진을 위한 6개 부처의 화학물질 분류·표지기준 통일

** 관련부처 및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GHS 정부합동위원회 실무 작업반

□ 추진일정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 '18. 12월
- 대량위험물제조소등 민관합동검사 '18. 2~4월
- 위험물 업무 담당자 소방특사경 지정 '18. 6월
- 유엔 GHS 국제회의 참석 '18. 6 / 12월
- GHS 통합표준안 마련 '18. 6월

2)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화학물질 분류 표지 국제 기준)

**정책
목표**

의용소방대 장비 확충, 전담의소대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와 생활안전·심리상담사 등 전문교육 확대를 통한 의용소방대 위상 제고

□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 장비 확충을 통한 재난현장 지원 역량 강화
 - (화재진화차량) 도서·산간지역 소방사각지대 선제적 대비·대응
 - (개인보호장비) 대원 안전사고 예방으로 초기 대응역량 강화
 - ※ 소방안전교부세 현황('15년 80억, '16년 64억, '17년 25억)
- 전담의용소방대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
 - (복무관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법제도 정비
 - ※ 관할센터 주1회, 관할 소방서 주2회, 시·도 본부 불시 점검 실시
 - (출동태세) 소방장비 기능 최적화와 전담의소대원 역량 강화
 - (교육훈련) 장비운용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 교육훈련 강화
- 전문화교육을 통한 지역안전문화 조성, 생활안전 현장활동 지원
 - 심폐소생술·생활안전강사 대원 활용한 생활안전 교육실시
 - ※ '17.11.30.기준 자격보유 9,902명(심폐소생술 7,287명, 생활안전 2,615명)
 - 심리상담사 위탁교육을 통한 재난피해 주민 심리지원 활성화
 - ※ '17.11.30.기준 자격보유 569명('17년 실적 40명)
 - 별집제거·동물구조 등 비긴급분야 생활안전에 대해 의용소방대 확대 운영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현실화
 - 4시간 → 8시간 상향, 전담의소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8시간 초과 지급

□ 추진일정

- 화재진압차량·개인안전장비 등 소요장비 지원 '18. 1 ~ 12월
- 전담의용소방대 복무관리 등에 관한 법령 정비 '18. 상반기
-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상시 관리감독체계 마련 '18. 2월
- 전문교육 한국소방안전협회 위탁실시 '18. 6 ~ 11월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현실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18. 6월

9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능력 향상

정책 목표

소방법령 위반과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신속엄정 법집행
소방특사경의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위상제고

□ 주요내용

○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

- (환경) 소방대원 폭언·폭행·폭언 지속적인 발생
* 최근 3년간 폭행관련 사법처리 528건, 연평균 15% 증가추세

구분	계(건)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28	131	198	199
소방 수사	193	40	66	87
경찰 수사	335	91	132	112

- (대응) 소방특사경 자체수사 비율 확대로 관련법률 엄격 적용
※ ('17.9월 기준) 폭행사범 102명(소방수사 67% 68건, 경찰수사 33% 34건)

○ 소방특사경 담당자 간담회를 통한 소송사례 및 정보공유

-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소방특사경 업무능력 향상

○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설치 확대로 소방특사경 기반 강화

- 시·도 소방본부 전담부서 설치·운영 추진(현재 10개 시·도 운영)
-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소방특별조사팀과 합동 조사

○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

- 신규 특사경 지명업무 담당자 수사실무입문 교육과정 운영
- 수사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화과정 법무연수원 위탁교육

□ 추진일정

- 소방특사경 수사실무 사례집 발간 '18. 상반기
- 소방특사경 소송사례 공유 간담회 '18. 상반기
-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설치 확대 '18. 연중
- 전문교육과정 운영(법무연수원 위탁) '18. 10 ~ 11월

소방산업과

Contents

1. 소방산업 진흥 및 전문인재 육성 강화 / (정부평가)	105
2. 제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	106
3. 소방산업 해외진출 기반조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107
4. 소방분야 4차 산업기술 육성 및 R&D 강화 /	108
5. 소방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109
6. 견실시공 확립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조성 /	110
7. 소방용품 검.인증제도 선진화 /	111
8. 소방신제품 발굴 및 소방용품 유통관리 강화 /	112
9. 화재경보시스템 비화재보 개선대책 마련 /	113

1 소방산업 진흥 및 전문인재 육성

정책 목표

소방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개발
민·관·학 협력을 통한 미래 소방산업 선도 전문 인재 육성

□ 주요내용

-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 운영 내실화
 - 소방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 선도
 - 창조기술 융합으로 국내시장 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
 - 소방산업 기술 선진화 및 R/D 역량 강화
- 신 시장 창출을 위한 소방산업 지원강화
 - 소방관련 특허획득경비 등 산업재산권 확보 지원체제 구축
 - 신기술 연구개발 및 신규·영세업체 지원대책 강구
 - 창의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 소방기술 전문교육과정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현재 소방공무원에 한정된 교육을 기업, 대학생 등으로 확대
 -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 및 교육효과 제고
 - 소방기관·단체, 기업 등에 대한 견학 및 현장실습 기회 마련
- 소방산업정보시스템 개편 및 통합시스템 구축
 - 통계·수요조사 등 시계열 분석을 통한 소방산업 추세 정보 제공
 - 소방산업 진흥전략 및 신규과제 발굴 등 진흥정책 심의위원회 활성화

□ 추진일정

-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 추진 연중
- 특허지원 사업 등 소방산업 지원체제 운영 연중
- 소방기술 전문교육과정 운영(1회 50명) '18. 하반기
- 통계·수요조사결과 정보제공 및 위원회 운영 연중

2

제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정책 목표

신기술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기술교류의 장과 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선도

□ 주요내용

- 품격 있고 빈틈없는 '개막식'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의 장으로 구성
 - 주빈·해외인사 영접, 식전행사, 본 행사, 식후행사 등 단계별 준비만전
- '고객이 편하고 재미있는' 전시관 구성 및 부대행사 진행
 - 제품 종류와 성격을 고려한 부스매치 검토
 - 내실 있는 특별전시관 운영(정책홍보관*, 취업설명회장 등)
 - * 4차산업, 소방산업 R/D를 접목한 정책홍보관 편성
 - 게릴라 소방안전퀴즈대회, 심폐소생술 경연, 안전체험관 등 운영
- 시기별, 대상별, 단계별 타겟 홍보
 - 인터넷(SNS, 유튜브 등), 언론매체 등 전 방위 사전홍보 추진
 - 국제전시협회, KOTRA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집중홍보 실시
-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해외 소방기관 등 유치 확대
 - 소방관련 국내거주 글로벌 기업*, 해외소방검정인증기관** 참여 확대
 - * 한국하니웰(미국), 한국지멘스(독일), **UL(미국) 코리아, FM(미국) 중국지사, Vds(독일) 중국지사
- 냉정한 성과분석을 통한 정책반영
 - 행사종료 후 전반사항 피드백,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 마련

□ 추진일정 ※ 제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 '18. 4. 25 ~ 4. 27(대구 EXCO)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18. 1월
- 해외 주요인사 초청 및 종합계획 수립 '18. 2 ~ 4월
- 박람회 결과분석 및 성과보고 '18. 5월

3

소방산업 해외진출 기반 및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목표

내용연수 경과 소방차량 개발도상국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단 추진,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술연수로 국내소방산업체 국제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소방산업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 내용연수 경과 소방차량 개발도상국 무상지원 추진 (20여대)
 - 소방차 무상지원사업과 연계한 ‘소방장비기술지원단’ 운영
 - ※ 소방차량 정비 및 기술이전, 화재·구조·구급교육 등 병행
- 소방산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제 마련
 - 해외시장개척단(동남아시아 2개국 16개사), 해외전시회(미국, 베트남)
 -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및 전시회 참가기회 부여
 -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실질적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조치
- 소방산업체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소방·안전관련 해외인증 획득 업체 소요비용 지원(400만원~1000만원)
 - 소방산업 특허 활성화를 위한 PCT(특허협력조약) 가입경비 지원
 - 아시아 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회원국 간 기술교류 확대
- 민·관 네트워크 체제구축을 통한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
 - KOTRA, 대구EXCO, 소방산업기술원 등 협업을 통한 지원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을 활용한 해외전시회 확대 운영

□ 추진일정

- 소방차량 무상지원 사업추진 '18. 3월 ~ 4월
- 소방장비기술지원단 운영 '18. 12월
- 해외인증획득 등 소방산업체 지원사업 연 중

4

소방분야 4차 산업기술 육성 및 R&D 강화

정책 목표

4차 산업혁명기술(빅데이터/인공지능/IOT/VR·AR) 연계형 R&D
발굴·적극 지원 및 현장적용 강화

□ 주요내용

○ 4차 산업 연계 소방 R&D 강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활용 의사판단형 훈련체계 구축
- VR·AR 기반 소방대원 훈련과 첨단소방장비 조작 훈련체계 개발
- 소방 R&D 사업, 4차 산업 과제 적극 발굴 수행

○ 4차 산업 지원체계 강화

- 국제소방박람회를 통한 4차 산업 특별전시관 집중 운영(ICT,드론,로봇 등)
- 「소방 4차 산업 발전 Work Shop」 개최(ETRI 등 4차산업 국내연구기관 초청)
- 4차 산업 소방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시·도 의견 청취(일선직원)

* 신기술, 4차산업 특히 우선지원, 창업전문가·각종계약(법률) 자문 등 기업 지원

○ IoT 소방제품 적용을 위한 신속한 기준정비 등 지원

- 전통시장, 대형 공장 등 설치가능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
- IoT 기반 화재경보설비 실용화 연구 및 IoT 제품 확대 검토
- 소방 IoT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소방학과, 기술자 실무교육)

□ 추진일정

- 소방산업체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추진 '18.연중
- R&D 연구기관 선정·수행 '18.연중
- 소방산업 과제 발굴 및 지원 '18.연중
- IoT 소방제품 기준정비 등 지원 '18.연중

5

소방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 목표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공정경쟁기반 구축 및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소방시설업의 자생적·자활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기적 의견수렴
 -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
 - 반기별로 시·도 본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공정경쟁기반 기반구축을 위한 법령개정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
 - ⇒ 방염공사 수요자에 대한 적정정보제공으로 부실업체 퇴출 유도 및 선택권 보장
 - 공사실적증명서 발행자 범위 확대(발주자→수급인)
 - ⇒ 견실 업체정보 제공을 통한 수요자 선택권 보장 및 공정경쟁질서 구축
- 소방시설업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 개정 및 시·도 조례 제정추진
 - ⇒ 개정안 의원발의 중 17개 시·도 중 부진한 시·도 조례 제정 독려(서울, 제주)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합리화(하도급 계약서 상 연면적에 따라 기술자 배치)
 - ⇒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활성화 및 고용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소방시설 착공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시스템 상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제외)
 -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방시설업 운영부담 완화

□ 추진일정

-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반기별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 등 법령개정 '18. 12월

6

견실시공 확립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조성

정책 목표

소방공사 감리현장 및 소방시설업의 관리·감독 강화
소방시설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정경쟁 환경 마련

□ 주요내용

- 소방공사 감리현장 불시점검 및 소방시설업체 지도·감독
 - 부실시공·감리 및 불법하도급 등 공사현장 위반사항 단속
 - 소방시설업자(설계·시공·감리·방염업) 기술인력(자격) 등 관리실태 점검
- 소방시설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정경쟁 기반구축
 - 소방공사의 합리적 원가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품셈 품량산정*
 - * 소방공사 세부 공종·품셈별 품량측정
 - 소방공사 감리 PQ제도 민간부분 로드맵 마련(공공부분 '17.1.28. 시행)
 - 공정한 입찰경쟁을 위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 실태 점검
 - *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행정처분 대상업체 입력
- 기술력 향상 및 공사품질 신뢰를 위한 소방기술자 교육 강화
 - (법정교육) 현장 실무교육 중점으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8시간)
 - (전문교육) 소방기술자 맞춤형 권역별(수도, 영남, 호남, 충청) 기술교육

□ 추진일정

- 감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지도·감독 '18. 6 ~ 10월
- 표준품셈 품량산정 및 행정처분 관리시스템 점검 '18. 12월

7

소방용품 검·인증제도 선진화

정책 목표

소방용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을 높이고, 현실여건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검·인증기준 정비

□ 주요내용

- 소방용품 품질향상을 위해 형식승인과 우수품질기준을 통합
 - 31개 품목을 기술수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점진적 추진
 - ※ 시험항목별 국내 기술수준 검토 및 시험기기 등 소요비용·구축기간 분석
 - 제조업체 간담회 및 전문가회의 개최 등 의견수렴 반영
- 현실여건·환경변화에 따른 실효성 없는 기준 및 조항 정비
 - 인증기준 제정 후 취득현황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기준 폐지
 - ※ 인증취득 및 최근 2년간 제품검사 실적이 없는 9개 성능인증품목 검토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등 기술기준 개선 검토
 - 무전기에 반응하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기술기준 개정
 - ※ 무전기 오동작시험 및 최대사용풍압 조건에서 댐퍼개폐 작동성능시험 도입
- 소방용품 부정기시험 및 방염성능제도 개선안 마련
 - 부정기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된 불량제품의 사후대책 검토
 -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방염대상물품 재분류

□ 추진일정

- 형식승인과 우수품질인증 통합안 마련 '18.1~10월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기술기준 개정 '18.1~6월
- 인증분석 및 실효성 없는 기술기준 폐지 '18.하반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기술기준 개선안 마련 '18.하반기
- 부정기시험 및 방염성능제도 개선안 마련 '18.하반기

정책
목표

우수한 소방제품 발굴 및 제도권 도입을 지원하고, 기준에 미달한 저급 소방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유통관리 점검 강화

□ 주요내용

- 신제품 발굴 및 도입을 위한 소방신제품 설명회 개최(연 4회)
 - 리플릿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업체 확대
 - 채택된 제품에 대하여 기준마련 등 제도권 도입 지원
- 불량 소방용품 유통방지를 위한 소방용품 수집검사 추진(연 2회)
 - 품목선정 시 시도 의견, 언론보도, 민원 등 다양한 목소리 반영
 - 공사현장 방문, 도소매상 직접구매 등 수집경로 다양화
 - ※ 언론보도 등 이슈사항은 수시검사 실시('17년 자동차압·과압조절형담퍼)
- 청정소화기 명칭사용 금지 및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 인터넷포털에서 청정소화기 명칭 사용금지 지도단속(연중)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명칭 개정(소방시설법·화재안전기준)
 - 내용연수 10년경과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
-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흔들림방지버팀대 기술기준 제정
 - 기술원 자체기준인 흔들림방지버팀대의 제도권 도입 검토

□ 추진일정

- 소방신제품 설명회 개최 '18.3~12월
- 유통 중인 소방용품 수집검사 '18.4~12월
- '청정소화기' 명칭 사용 단속 및 소화기 교체 홍보 '18.연중
- 소방시설법·화재안전기준 개정 '18.상반기
- 흔들림방지버팀대 성능인증기준 제정 검토 '18.상반기

정책
목표

신뢰성 높은 화재경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안정적 성능유지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소방력 낭비요인을 제거

1차 오작동 사례
선행연구

⇒

2차 현장확인
통계확보

⇒

3차 전문가 개선
방안토론

⇒

4차 정책방향
도출

□ 추진배경

- 화재경보시설은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도 화재로 인식되는 비화재보 사례 발생
- 소방시설 신뢰도 저하 및 잦은 소방력 출동 등 문제점 해결 필요

□ 주요내용

- 국·내외 비화재보 관련 선행 연구조사
 - 화재감지 시스템의 오작동 실태 및 문제점 등 조사
 - 화재 경보시설 오작동에 대한 주요정책 동향
- 소방대 현장출동을 통한 오작동 원인조사(출동분대)
 - 접수된 비화재보 대상물 현장조사
 - ※ 비화재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 의뢰(기술원)
- 유관기관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분기별, 소방·기술원·전문가 등)
 - 화재와 비화재보의 특성 분석 및 해결방안 등 논의
- 비화재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제품 기술 분야, 설계·시공·감리 분야, 설비 유지관리 분야
 - ※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보급

□ 추진일정

- 1단계 : 비화재보 사례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18. 3월
- 2단계 : 현장확인을 통한 실태조사 및 분석 '18. 2~9월
- 3단계 : 비화재보 개선 종합대책 수립 '18. 12월

6.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

Contents

1. 육상재난대응 총괄 지휘권 확립 / (국정과제)	117
2. 재난대비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 (국정과제)	118
3.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구축·운영 /	119
4. 국가단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 (국정과제)	120
5. 화생방·대테러 특수사고 대응역량 강화 /	121
6.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소방안전대책 추진 /	122
7. 국제구조대 정예대원 양성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	124
8. 긴급구조 현장대응 드론도입 기반 내실화 /	125
9. 전문인명구조사 자격도입 등 구조서비스 인프라 강화 /	126
10. 현장 적용성 연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시행 /	127
11. 시기·계절 맞춤형 구조대책으로 대국민 안전 확보 /	128
12. 119의 활력으로서 구조대원 사기진작 /	129
13. 구조구급활동 정보시스템 전면 확대 개편 /	130

1 육상재난대응 총괄 지휘권 확립

정책 목표

육상에서의 재난현장 지휘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공공분야가 일사
분란하게 이행토록 추진(VIP지시 / 7.27)

□ 주요내용

- 시·도, 시·군·구 (가칭) 「재난대응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 (배 경) 현행 긴급구조지원기관 등과의 재난관련 업무협의를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 재난발생 시 기관간 실질적 협조 미흡
 - (구 성)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장을 협의회원으로 구성
 - (기 능) 재난발생시 기관별 역할정립 및 원활한 지원협조 강화

재난현장에서 기관별 대응활동 및 역할 정립, 재난대비 훈련 등 정책 협의, 재난전문평가단 운영, 심폐소생술 등 대국민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

-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상 평가제도 개선(평가기준 개선, 결과공개)
 - (목 적) 매년 형식적으로 시행된 재난안전법 상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평가(제53조)와 대응능력평가(제55조의2) 실효성 확보
 - (내 용) 평가기준을 개선(현행 : 자료조사 → 개선 : 평가 중심)하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개(지침개정)

* 중앙 : 환경부 등 26개 / 시·도, 시·군·구 : 2,613개 기관·단체

- 국가단위 재난대비·대응 업무 총괄 및 신속한 현장통제·지휘를 위한 재난총괄전담부서 설치 및 재난관련법령 정비 병행 추진

□ 추진일정

- 재난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8. 4월
-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제도 개선 '18. 1월
- 재난총괄부서 설치·관련법령 정비 '18. 2월~12월

2 재난대비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정책 목표

복잡·대형화 하는 재난대비·대응역량 강화 및 체계적 대응역량 조기
구축 추진(VIP지시 / 11.3)

□ 주요내용

- 현장지휘관 능력배양을 위한 권역별 「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
 - (목 적) 첨단 재난유형별 시뮬레이션 이용,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의 지휘 역량 배양(소교세 '19년 소방청 신규사업 및 지방학교 중점사업으로 추진)
 - (설 치) 소방학교를 운영중인 시·도 중심으로 전국 8개 권역*에 설치
 - * 수도권 2개소(서울·인천), 부산권, 경기권, 경상권,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역량(긴급구조훈련) 평가 개선
 - (현 행) 평가자 전문성·객관성 결여*, 정성적 평가** 위주
 - * 평가전담자 없이 임의지정 운영, ** 평가항목 중 주관적 요소 비율이 높게 책정
 - (개 선) 평가기준 객관화, 전담인력 운영, 통제단장 역량 중심 평가
- ※ 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포상,시상금 등), 미흡기관 패널티 부여(주의,경고,재훈련 등)
- 부족인력 충원 및 장비보강계획 연계 구조대원 충원 및 장비 보강
 - 법정기준(5,469명)대비 부족 구조대원 5년간 2,053명 충원
 - 구조장비 중 필수장비* 포함 276종에 대한 노후율 및 보유율 개선
 -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의 노후·부족구조장비 노후율 0%, 보유율 100% 유지

□ 추진일정

- 지휘역량센터 기본계획 수립(6월), 대상사업지역 결정 .. '18. 11월
- 긴급구조통제단장 평가기준 개선 '18. 1월
- 부족인력 충원 및 장비보강 '18. 3월~12월

3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구축·운영

정책 목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운영으로 육상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강화 및 현장지휘권 확립

□ 주요내용

- (근 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행안부령)
 - 상시 운영체제를 갖춘 「재난통합지휘조정센터」 기능 수행
- (주요기능) 상황분석, 지휘작전 등 중앙차원의 지휘·조정·통제(3C*)
 - * 3C : 긴급구조관련기관 출동지시(지휘 Command),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 유지(조정 Coordination),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지휘본부 상호간 통신연락(통제 Control)
- (운영방안) 상황보강인력 등 활용 → 직제반영 상시운영체계 전환
 - 단기 : 기존 상황실 보강근무 및 당직근무 통합운영
 - 중앙↔시·도 간 소방작전 상황의 공유 및 상황판단 등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영상작전회의시스템 운영

구분	평일	주말 및 휴일
근무인력	·(주간)2명(상황근무 1, 시스템운영 1) ·(야간)3명(상황근무*2, 시스템운영 1) * 기존 상황실 보강근무(2명)와 당직근무(1명) 통합	· 3명(상황근무 2, 시스템운영 1) · 휴일간부 근무자(6명) 상황대기
주요업무	(평 시) 일일상황보고, 상황분석 및 판단회의, 소방지휘관영상회의(수시) (재난시) 상황분석 및 지휘작전판단회의, 통제단 부·반별 조직 가동(3C)	

- 장기 : '18년 수시직제에 반영하여 운영팀 상시근무(7명×3교대 = 21명)

□ 추진일정

- 지휘작전실 운영 2018. 1월
 - * 준공식 및 시연회('17.12.27), 시범운영(준공 ~ '17.12.31)
- 작전실 연계 전국단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훈련 .. 2018. 5월, 11월

4

국가단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정책 목표

초광역 재난 국가단위 훈련으로 실전중심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민참여 훈련으로 재난대응 공감대 형성

□ 주요내용

- 국가단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실시(소방청 참여)
 - (시행)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연 2회(종합, 불시) 시행
 - (장소) 시·도별 경계지역 우선 실시(시·도 자체 대응 불가 상황 가정)
 - (참가) 권역별 2개이상 시·도, 중앙119구조본부, 유관기관 등
 - ※ 훈련참가 시·도는 당해연도 긴급구조훈련 면제 등 인센티브 검토
 - (내용) 재난발생 →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장) 가동 → 시·도통제단(소방본부장) 가동 → 중앙통제단*(소방청장) 가동
 - * 소방청(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인력이 현장출동 후 지휘권 이양 등 훈련
- 지역특성(재난유형)을 반영한 국민참여형 긴급구조훈련 실시
 - 화재발생 대피 훈련, 응급처치 등 지역주민, 관계자 참여 유도
- 형식적 훈련 탈피, 실전위주의 교육·훈련 방식 개선
 - 일상교육훈련(근무일과표 정비), 응급처치^(10%)·소방전술^(10%)·인명구조^(80%) 편성*
으로 실전위주의 반복·숙달훈련 실시
 - * 소방정책과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일과 개선 계획」 병행 추진

□ 추진일정

- 중앙통제단 훈련계획 수립(1월) 및 시행 '18. 상·하반기 1회
- 시·군·구, 시·도 긴급구조훈련 실시(연 2회) '18. 5·11월

5

화생방·대테러 특수사고 대응역량 강화

정책 목표

화생방 특수사고 초동대응 기관으로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 및 특수소방장비 확충 등 특수구조대 역량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대테러 전담부서 신설 및 테러대응구조대 조직 보강

- (소방청) '119테러대응과' 신설, 대테러 예방·대비·대응 업무 전문성 강화
- (시·도) 테러대응구조대를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소속으로 일원화* 추진

* 現 직할 테러대응구조대 16개, 소방서 지정 구조대 8개('17년 대전·강원·충북·전남·경남 직할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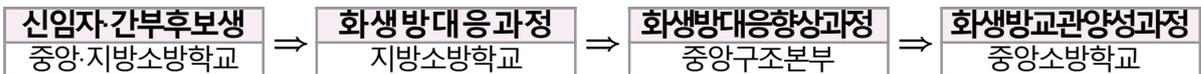
⇒ 향후계획 : '21년 전북본부·세종본부, '22년 제주본부·창원본부 추진

※ 테러대응구조대는 「구조장비보유기준」에 따라 대테러장비 확충 및 관련 전문교육 우선 입교

○ 전문인력 확충* 및 화생방 전문교육 확대

* '18년 화생방 특기자 38명 채용 예정(화학 30, 생물 2, 방사능 6)

- 간부후보생 초임교육*부터 화생방사고대응 교과목 필수 편성
- 교육훈련 기관별 과정의 차별화로 화생방 전문교육체계 확립



○ 화생방 분석차 등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확충

- '18년 소방안전교부세 315억 투입 51종 3,125점 보강

○ 화학사고 등 대비한 특수재난 안전훈련센터 건립(~'21)

- 화생방 및 석유화학플랜트 등 4개 분야 10여종 훈련시설

※ 위치/면적: 울산 등 주요산업단지 인근 / 4만여㎡, 소요예산: 400억원(전액 국비 또는 국고보조사업)

○ 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정보공유협의회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강화로 테러징후 신속포착 및 공조체계 구축

□ 추진일정

- 대테러 전담부서 및 테러대응구조대 보강 '18. 1 ~ 12월
- 화생방 전문인력 경력채용 및 대테러장비 확충 '18. 1 ~ 12월
- 훈련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18. 상반기

6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소방안전대책 추진

정책 목표

평창동계올림픽의 빈틈없는 대테러·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대회 안전확보를 통한 국가중요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 대회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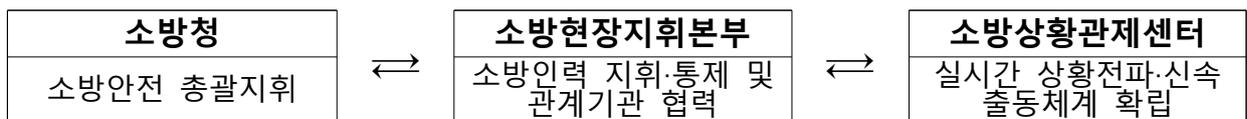
- 대회기간 : (올림픽) '18. 2. 9. ~ 2. 25(17일간), (패럴림픽) '18. 3. 9 ~ 3. 18(10일간)
- 장 소 : 평창 정선(설상경기), 강릉(빙상경기) ※ 주요시설 : 경기장 12, 훈련장 3, 지원시설 7
- 참가규모 : (올림픽) 약 95개국 5만여명, (패럴림픽) 약 45개국 2만 5천여명

□ 소방안전대책 추진개요

- (중점추진) 3개 분야 / 9개 과제

- | | | | | |
|-------|---|-----------------|------------------|---------------|
| ① 예 방 | → | ① 숙박시설 전수점검 | ② 올림픽 시설 중점 안전관리 | ③ 경기장 소방안전관리 |
| ② 대 비 | → | ① 장비보강 등 인프라 구축 | ② 소방훈련 | ③ 현장대응매뉴얼 |
| ③ 대 응 | → | ① 현장지휘본부 운영 | ② 소방력 전진배치 | ③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

- (기획단 운영) 대테러·소방안전대책 총괄 조정지원, 단계별 추진계획 실행
 - 소방청 : 7명(안전기획팀·예방팀·상황대응팀 운영)
 - 소방청 작전실에서 영상지휘시스템 활용 현장지휘 및 현장상황통제관 파견
 - 강원소방본부 기획단 : 21명(기획·설상팀·빙상팀·조직위·파견)
- (현장지휘) 재난상황 발생시 실시간 상황전파 및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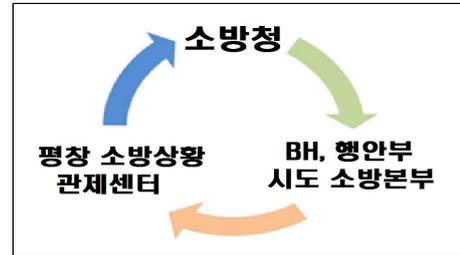
□ 주요내용

- (예 방) 올림픽 직·간접 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실시(개최도시 및 배후도시 / 11월 완료)
 - * 조사대상 : 20,758개소 (올림픽시설, 강원도내 전역 숙박·다중이용시설 등)
- (대 비) 올림픽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
 - 올림픽 소방상황관제센터 구축 및 구조·구급 특수장비 확충
 - ※ 상황관제센터(3.4억), 대형 구급차(7대, 14억원), 다목적구조차(3대, 21억원)
 - 폭설, 터널사고, 지진, 다수인명사고 대응 소방안전 매뉴얼 제작

- 경기장 등 주요시설(22개소)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합동소방훈련 실시
- ※ 경기장 12, 선수촌 2, 미디어촌 1, 본부호텔 4, IBC 1, MPC 1, 올림픽플라자 1

○ **(대 응) 대회기간 근무강화, 올림픽 경기 안전·의료 인력 배치**

- 올림픽 「소방상황관제센터」 운영
(‘17.11월 완공, ‘18.1.9.부터 운영)
- ※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작전 공유 및
상황판단을 위한 영상지휘시스템 운영



- 올림픽지휘본부*(2), 임시119안전센터**(2), 소방CP*** (18) 운영
- * (평창) 총괄지휘본부 : 올림픽플라자 5층 / (강릉) 방면지휘본부 : 올림픽파크 1층
- ** 평창올림픽플라자(18명, 7대) 강릉올림픽파크(15명, 5대)
- *** 경기시설 11, 지원시설 7 (IBC, MPC, 선수촌2, 미디어촌2, 본부호텔)
- 강원도내 쏘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 테러발생시 즉각 대응체계 확립 »

- (평시) 대테러센터·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협력체계 유지
- (테러발생시) 테러대응구조대(중구본·강원본부) 즉각 현장투입 인명구조 실시
- ※ 현장지휘 :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내일반 테러시 경찰관서장이 관계조직을 지휘·통제

- **(유관기관 협력)** 대테러 및 현장 상황관리를 위한 소방청 인력 현장파견*
* 경호처 1명, 대테러센터 24명, 조직위 지원 165명 → 시도본부 인력 파견받아 현장배치
- **(상황관리)** 소방청 상황관리관 현장배치 및 올림픽 소방활동사항 총괄관리
※ 대테러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활동 및 소방활동 주요사항 매일 취합 → 소방청 보고
- **(동원소방력)** 1일 최대 484명, 91대(연인원 12,983명 / 2,536대 동원)

구 분	계	지휘	CP	방재	상황	순찰	FoP	구급	SKI	진압	구조	화학	항공	고가
소방공무원	484	20	53	15	15	162	24	94	11	39	13	24	10	4
장 비	91	3	18					47		13	4	2	2	2

- ※ 테러대응구조대 전진배치로 화생방·테러 대응력 강화
- 중앙구조본부* 1개대(수도권대·서산화학센터) 및 강원소방본부 1개대(특수구조단)
- * 중구본부 : 15명, 4대(다목적제독차, 헬기 등) / 강원본부 : 8명, 3대(탐색구조차, 헬기 등)

□ **추진일정**

-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소방지휘본부 운영 '18. 2 ~ 3월

7 국제구조대 정예대원 양성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정책 목표

UN INSARAG Heavy등급에 걸맞는 정예 국제구조대원 양성 및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강화로 아시아 국가들 중 선도적 역할 수행

□ 추진배경

- UN OCHA³⁾ 및 OSOCC⁴⁾과의 국제구조 업무협력 전문가 부족
- '17년 국제구조대 선발 인력 POOL(202명)* 체계적인 관리 필요
 - * 중앙구조본부 87, 시·도 115 ⇒ 2년마다 갱신 관리
 - ※ 국제구조대 인력 및 장비관리의 전문성을 고려 국제업무의 장기보직 필요

□ 주요내용

- UN INSARAG 주관 운영회의 등 적극 참여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2018 INSARAG 운영위원회 및 UNDAC 자문단회의(2월/스위스)
 -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및 지진대응훈련(9월/일본) / USAR 팀 리더 회의(10월)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재난구호 회의 기간 중 참석(4월)
 - * ASEAN Regional Forum : 아세안 및 주변 관계국(27개국) 외무장관 정치·안보·안전 협의체
- 국제구조대원 교육훈련 강화로 인력풀 대원 정예화 추진
 - 국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C*: USAR Coordination Cell) 양성
 - * 국제기준에 Heavy등급 구조대는 UCC 이수자 2~4명 이상 필수(現 중구본 1명 이수)
 - 유관기관 합동 국제출동훈련 참가(외교부, 국방부, 복지부 등)
 - 인력풀 대상 특별교육* 및 도시탐색구조(USAR) 전문과정(중구본) 운영
 - * INSARAG 가이드라인 및 탐색구조기법 등 교육(구조과 주관/ 권역별 실시)
- 중구본부 국제업무 전담자 지정 및 장기보직화 추진(중구본 협의)
 - 국제구조대 인력풀(중앙· 시도) 운영 및 체계적인 출동장비 관리의 연속성 확보

□ 추진일정

- 국제구조대원 전문(특별)교육 운영 '18. 상·하반기
- INSARAG 국제회의 및 훈련 참가 연중

3)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인도주의업무조정국)

4) On-Site Operations Coordination Center(현장지휘본부)

8 긴급구조 현장대응 드론도입 기반 내실화

정책
목표

소방 긴급구조 현장 환경에 적합한 드론개발과 현장대응 활동
정보지원을 위한 관리요원 전문화 등 무인기 도입 기반 내실화
※ 보유현황 : 112대(현장임무용 44대, 교육용 68대)

□ 주요내용

- (기능향상) 재난유형별로 긴급구조 현장대응에 적합한 임무장비 개발
 - 드론에 설치되는 일반·적외선 카메라, 센스 등 장비기능 고도화(R&D*)
 - *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기술개발(다부처사업, 중앙학교 참여)/'17~'20년
- (활용분야) 공중인명수색, 재난지휘 등 활용분야별로 장비 구체화

활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수색구조(산악, 수난사고 등 조난자 수색) ■ 화재진압(소화, 재난현장 통신지휘) ■ CBRNE*탐지(특수재난 시 위험물질 탐지) ■ 소방훈련·현장지휘(도상훈련, 긴급구조훈련 등) ■ 소방장비 및 구조물 안전진단(특장차량 정밀 점검 등)
----------	--------------------------------------------------------------------------------------------------------------------------------------------------------------------------------------------------------------

* 화학(Chemical), 생물(Biological), 방사능(Radiological), 핵(Nuclear), 고성능 폭발(Explosive)

필요 성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수색구조(고화질 줌기능, 고화질·열상카메라) ■ 화재진압(소화탄 투척, 영상전송 중계기능) ■ CBRNE탐지(탐지키트, 내화학·부식성 등) ■ 소방훈련·현장지휘(방송스피커, 도상훈련용 3D 영상지원) ■ 소방장비 및 구조물 안전진단(비파괴 검사기능 등)
----------	-----------------------------------------------------------------------------------------------------------------------------------------------------------------------------------------------------------------------

- (요원양성) 조종 등 관리요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 국토교통부 협의 전문교육기관(중앙소방학교)지정을 통한 조종자격자 양성
 - 전문교육과정 확대로 관리자격자 지속 확보(기초운영→전술운용→특화과정)
- (관리체계) 긴급구조 현장대응 소방드론 표준운용 매뉴얼* 마련, 시도 활용
 - 재난현장 활용유형 및 기체 성능기준별 운용·관리 등 표준운영지침 개발
 - * 중앙소방학교「사용자 참여형 연구(소방드론 현장운용 기술개발)」과 연계 추진
 - ⇒ 장기적으로 '20년까지 R&D를 통한 고도화,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배치

□ 추진일정

- 시·도 운영요원 및 전문가 연찬회 실시 '18. 2월한
- 관리요원 양성 전문기관 지정 협의 '18. 4월한
- 소방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MOU체결 '18. 6월한
- 운용 매뉴얼, 활성화 운용자 인센티브 방안 마련 '18. 상반기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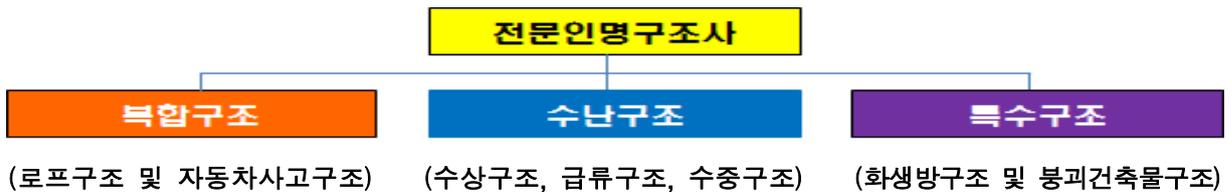
전문인명구조사 자격 도입 등 구조서비스 인프라 강화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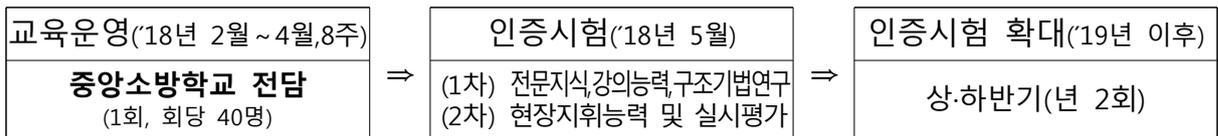
인명구조사 등급 시행 **현행 1·2급에서 전문인명구조사까지 확대 시행을 통해 긴급구조 전문가를 양성하고 대국민 구조품질 제공**

□ 주요내용

- **(자격확대)** 현행 인명구조사 1·2급에서 전문인명구조사 등급 확대 시행



< 전문인명구조사 교육·인증 일정 >



- **(자격취득)** 1·2급 자격 취득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확대
 - 2급 지방학교(교육대), 1급 지방학교 확대(3~5개소), 전문 중앙학교 전담

< 인명구조사 취득확대 및 인센티브 >

- [자격현황] 3,583명(인명구조사 1급 230명, 2급 3,353명, 전문* 0명) *18년 첫 시행
- [취득확대] 2급 현재 80% → '18년 85%, 1급 4.4% → '18년 6% 취득 목표, '19년까지 전 구조대 자격자 배치
- [인센티브]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 기 반영(**2급 0.2%, 1급 0.3%, 전문 0.5%**)

- **(보수교육)** 연2회 보수교육 확대 새로운 구조기술 전수로 자질 함양
 ※ 교육기관 1급 중앙학교, 2급 모든 지방학교 및 교육대
- **(보직경로)** 인명구조사를 구조업무 분야로 보직경로*를 특화하여 전문가 양성
 * 구조대원 → 구조대장 → 소방서 및 소방본부 구조계장에 우선 보직 부여 추진

□ 추진일정

- 인명구조사 1급 교육기관 지정 및 확대 '18. 1월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18. 1월)
- 제1회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 시행 '18. 5월
- 자격자 보수교육(1급 중앙, 2급 지방) '18. 6·11월

10 현장 적용성 연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시행

**정책
목표**

순위결정을 위한 경기방식에서 재난현장에 언제든지 적용 가능한
실전위주의 경기종목 발굴 시행으로 현장재난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종목개선) 구조·구급분야별 최소출동대 단위의 팀 전술경기로 전환

개 선(안)		세 부 추 진(안)
공통	① 최강 소방관 / 개인전(현행 유지)	① 국제 대회 경기규칙 적용 (특수방화복 상·하 + 공기호흡기 착용)
구조 (변경)	② 인명구조 팀전술 / 단체전(4인)	② 3종목 설계(화재구조+로프복합구조+수난구조) - 3개 종목에 대한 경기방법 설계 후 최종 확정('18.6월) ⇒ 선수 5명 구성(위 이상 1, 장 이하 3+예비 1)
구급 (변경)	③ 응급처치 팀전술 / 단체전(3인)	③ 구급강사 경연대회 경기규칙 개선 적용 - 중증환자 다중출동체계 개념 도입 ⇒ (현장전문소생술) 선착대 3+예비 1

※ 화재진압분야 현행 유지(화재진압전술*, 속도방수) * 화재진압전술 2017년 신규 도입

- (선수선발) 전술평가가 가능하도록 최소출동대별 선수 선발 추진

현 행	개 선(안)
▶ 시·도 자체적으로 우수선수 선발	▶ 최소 출동 단위별(진압대, 구조대, 구급대)로 선수를 구성하여 선발 ⇒ 단계별 추진

- (시기조정) 현행 10월에서 '19년부터 5월로 조정 운영의 내실화 추진

- 5월 가정의 달 지역문화·축제행사와 연계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 시행

※ '18년도는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기간('18.9.10~9.17.) 중 전국기술경연대회 개최

- (장소개선) 중앙 주도 행사에서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순회 대회 운영

* '18년에 '19~'20년 대회 개최지 선정, 개최 시·도가 중심이 되는 행사 개최

□ 추진일정

- 팀 전술 경기 평가 및 개최지 선정 기준 마련 '18. 2월
- 개최 종목 확정·보완(의견조회 등) '18. 5월
- 확정 종목 시연 '18. 6월

11

시·군·구·시·군·구 계절 맞춤형 구조대책으로 대국민 안전 확보

정책 목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등산과 물놀이 등 여가활동과 관련된 산악 및 수난구조 대책을 적기에 시행 대국민 안전 조성

□ 주요내용

- 주요등산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 봄철 4~5월, 가을 9~10월 ※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8:00
- 매일 등산하는 등산객·인근 주민 구성 시민산악구조봉사대 운영
 - 소방본부별 산악사고 다발지역 1개 선정 시범 실시
 - ※ 44개대 1,037명 (서울 1, 부산 5, 대구 2, 인천 1, 광주 1, 대전 5, 울산 5, 세종 1, 경기 1, 강원 1, 충북 2, 전북 1, 전남 2, 경북 1, 경남 9, 제주 4, 창원 2)
- 산악·수난구조 전문역량 강화 교육과정 확대 및 신규 개설
 - 국립공원관리공단 초·중급 산악인명구조교육 확대(연6회 → 10회)
 - 고급산악인명구조 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신규과정 개설
 - 급류구조 전문교육과정 신설 중앙학교 및 지방학교 시행
-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등 구조대원 직무교육·훈련 시간 준수
 - * 연간 40시간 교육이수, 소방청 주관 입체적 산악사고 합동훈련(4월 설악산) 실시

□ 추진일정

-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18. 상·하반기
- 유관기관 합동 산악훈련 '18. 4월
- 전문교육 등 구조대원 역량 강화 '18. 연중

정책
목표

국제 및 국내행사의 내실있는 추진과 모범 구조대원 선발 사기진작으로 신명하고 일 잘하는 강한 구조대원 양성

□ 주요내용

○ 2018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구조대원 참여 확대

- 기간/지역 : '18. 9. 10.(월) ~ 9. 17.(월) / 충북 충주시 일원

※ 주최/주관 소방청·충청북도·충주시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참가규모 : 50개국 6천여명('10년 대구대회 48개국 외국인 1,218명)

* 2018 충주대회 소방공무원 참가 확보인원 : 2,033명(참가예산 2,039백만원)

○ KBS 주관 소방청 후원 제23회 「KBS119상」 시상식 개최

- 시기/장소 : '18. 4. 17.(화) 예정 / KBS 공개홀(방송녹화)

- 시상규모 : 4개 분야 25점(대상·본상 21, 봉사상 1, 공로상 1, 특별상2)

※ 수상자 특전 : 1계급 특진, 상금 - 대상 1천만원, 수상자 부부 해외연수

< 달라지는 2018년도 KBS119상 >

- | | |
|----------------------|------------------------|
| ① 시·도별 3배수 추천 | ② 시상식 수상자 및 배우자 동반 수상, |
| ③ 수상자 119 상징 기념메달 수여 | ④ 수상자 격려 리셉션 등 부대행사 |

○ 모범 구조대원 해외 단기 연수 추진

- 시기/지역 : '18. 5월 / 북유럽지역 교량·장대터널 인명구조 연수

- 참여대상 : 시·도 전년도 구조 활동 유공자 선발자(20명 정도)

○ 중앙과 현장간의 상생협업의 한마당 토론회 개최(연2회 워크숍)

□ 추진일정

○ KBS119상 추천 및 선발, 시상식 '18. 4월

○ 모범 구조대원 선진지 단기 연수 '18. 5월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 '18. 9월

정책
목표

구조와 생활안전활동 정보를 다양한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구조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재의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활동실적, 통계관리)로는 4차 산업 시대에서 요구하는 빅데이터 자료 분석과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소방기본법에 화재·구조·구급 업무에서 생활안전활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구조와 생활안전활동 통계관리 분류가 불명확하여 정립 필요
- ※ 2015. 통계항목(분류체계) 개편 추진 : 명칭수정, 항목추가 및 통계집계 틀 마련

□ 추진사항

- (단기과제)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현행 분류체계 지속적 보완

구분	대분류	중분류		구분	대분류	중분류
'16	(장소별)	17	➡	'17	(장소별)	19 (+2)
	(원인별)	22			(원인별)	22 (유지)
		67			121 (+54)	
		113			150 (+37)	

- (장기과제)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으로 전면 확장 개편
 - 시스템 분류체계 개선 : 현재 2단계(대→중분류) ⇨ 4단계(대→중→세→세세분류)
- (추진내용)
 - 분류체계 ‘세분화 및 체계화’를 위한 정책연구 계획 수립
 -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 추진일정

- 통계 분류체계 시·도 의견조회 및 실무회의 ‘18. 1월
-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 ‘18. 4월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8. 6월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구조활동일지) ‘18. 9월
- ※ 장기적 과제 : 시스템 구축 추진 (‘19. 6월) / 시스템 고도화 추진(‘19~20년)

119구급과

Contents

1. 보람과 긍지의 119구급대원 직무환경 조성 /-----	133
2. 단단한 119구급서비스 기반 마련 / (국정과제) -----	134
3. 스마트폰 활용 응급처치안내 및 의료지도 활성화/-----	135
4. 중증 외상환자처치 교육프로그램 개발/-----	136
5. 초고령 사회대비 119안심콜 서비스 확산/-----	137
6. 중앙 및 사·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 정착 /-----	138
7. 구급출동 및 이송체계 고도화 /-----	139
8.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확대 추진 /-----	140
9. 구급강사에 의한 구급대원 OJT 활성화/-----	141
10. 대형재난현장 구급활동 대응시스템 강화/-----	142
11. 현장활동 구급대원 안전 확보 /-----	143

1

보람과 긍지의 119구급대원 직무환경 조성

정책 목표

소방활동 건의 약 80%를 감당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기양양 정책 개발·추진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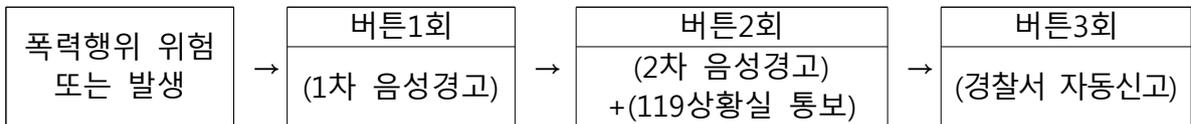
○ 구급대원 특별승진 기회 확대

-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 팀원 수 조정(2명 → 4명)
- 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승진 상(賞) 신설
* 하트세이버 등 업무성과 및 구급대원 근무경력 등 대한 객관적 정량 평가 중심

○ 우수 업무성과 명예 표시장 운영

- 하트세이버(심정지 소생)·브레인세이버(뇌손상 방지)·베슬세이버(외상손상 방지)* 명예 표시장 개발 및 제복부착 기준 마련
* 부문별 세이버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수상 누적 횟수별 명예 표시장 부여

○ 구급대원 폭력행위 자동 경고·신고시스템 구축



- 자동경고·신고버튼(구급차내)설치, 휴대폰 앱(구급차外) 개발

○ 하트(Heart)세이버 운영 개선 및 브레인(Brain)·베슬(Vessel)세이버 신설

- ✓ **Brain Saver** : 급성뇌졸중환자를 응급처치 및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여 회복에 기여한 사람
브레인세이버
- ✓ **Vessel Saver** :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처치 및 외상센터로 이송하여 회복에 기여한 사람
베슬(혈관)세이버

- 중증응급환자 회복에 기여한 우수 구급대원 추천(전문병원 → 소방서)
※ 복수의 전문의 공동 심사 추천 소견서 및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 연 2회(상·하반기) 우수 구급대원 선정 추천(소방서 → 소방본부)

□ 추진일정

- 하트·브레인·베슬세이버 제도 운영계획 수립 '18년 1월
- 폭력행위 자동 경고·신고시스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18년 2월

2

단단한 119구급서비스 기반 마련

정책 목표

고품질 119구급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도적·물리적 기반을 강화하여 119구급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 충족

□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 119구급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력(711명)	177	177	178	179
차량(95대)	23	23	24	25

○ 노후 구급차량(5년 경과 또는 12만km 이상 주행) 교체 및 신규보강

- '18년도 298대 교체(327억원, 응급의료기금 50% 지방비 50%) 추진
- 국산 15인승 승합차 기반 대형구급차로 교체(소방서별 1대 이상)

○ 3인 탑승을 향상을 위한 전문 구급인력(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확충

- 2017~2022년 총 2,228명(연평균 약 400명)

○ 119구급대(장)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및 119구급대장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선
- 현지실사를 통한 공감대 형성, 만족도조사, 장애요인 해결

○ 구급차 및 구급창고 내 장비·비품·약품 적재 표준화

- 품목별 코드 부여 및 인터넷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 * 입고 등록, 재고 부족시 경고, 여유 소방관서 알림 등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전자책(앱, 검색기능 포함)개발·보급

- 개인·업무용 휴대전화 및 구급단말기 탑재·활용

□ 추진일정

- 1급 응급구조사 채용공고 및 '19년도 기금 협의 '18. 1.~
- '18년도 응급의료기금 배정 '18. 4월

3

스마트폰 활용 응급처치 안내 및 의료지도 활성화

정책 목표

스마트폰 등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신고자에게 응급처치 안내 및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 강화로 심정지환자 소생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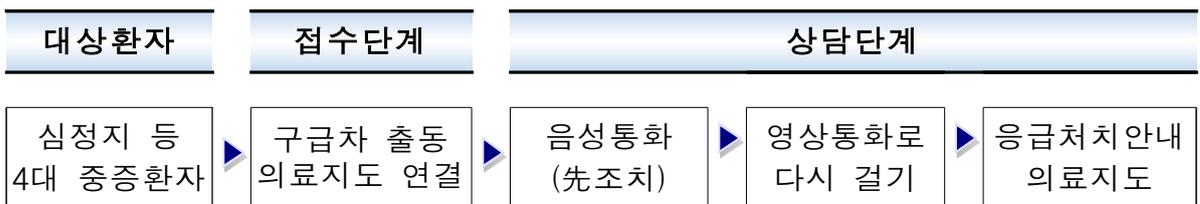
□ 주요내용

- 119 신고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응급환자의 상태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정확히 안내

* 휴대전화 119 신고접수 현황 : ('15년) 71.3% → ('16년) 80.2%



- 구급대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도의사에게 응급환자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지도 유도
- (시범운영) 구급상황관리센터에 테블릿PC 비치('17.1월 / 4개 시·도)



- (확대운영) 119상황실 다매체시스템 보강사업 후 확대('18.3월~)

□ 추진일정

-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운영효과 분석 '18년 1월
- 시범운영 '18년 1월~
- 확대운영 '18년 7월

4

중증 외상환자처치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책 목표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술기 능력을 요구하는 중증외상 응급 환자에 대한 구급대원의 종합적 대처능력 제고

□ 추진배경

-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이 분야별로 모듈화되어 있고 구급활동에 대한 지휘 및 의료지도가 융합된 종합훈련과정 부재
- 외상환자 발생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의 전문 교육프로그램(공통 교재·교안) 및 교관요원 확보 미흡

□ 주요내용

- **(목표)** 최고 난도의 중증외상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훈련을 통해서 종합적 처치능력 및 개별적 술기 역량 제고
- **(내용)** 2급응급구조사(운전원)·1급응급구조사(간호사)·구급대장·지도의사·구급상황관리센터별 임무 및 임무수행 절차, 외상환자 증세별 전문술기, 장비 및 약품, 예상 변수(돌발상황)별 대응 등
- **(개발)** 양성된 구급강사 및 의사(응급의학, 외상의학)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과대학 또는 관련 학술단체에 용역 발주
- **(활용)** 구급강사 직장교육, 소방학교 교육과정 등에 활용

* 교재 및 교안, 강의진행 매뉴얼 등으로 구성

□ 소요예산 : 60백만원(응급의료기금)

□ 추진일정

-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추진 '18. 4 ~ 9월
- 개발 산출물 활용 구급강사 사전교육 '18. 10 ~ 11월
-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도본부 및 소방학교 배포 '18.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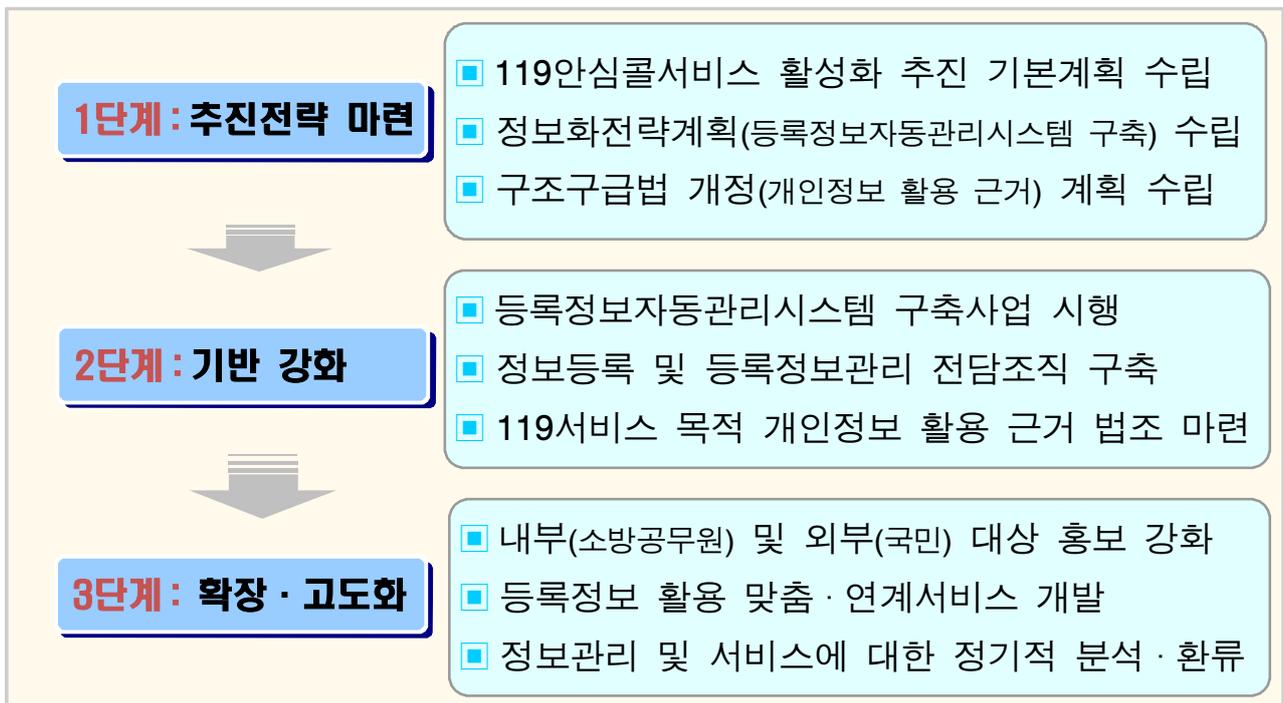
5 초고령 사회대비 119안심콜 서비스 확산

정책 목표

더 많은 고령자·만성질환자 등에게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급대원들에게는 정보등록·등록정보관리업무 부담 해소

▶ 대통령 지시(소방의 날 기념사, '17. 11. 3.) "어르신들께 안심콜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 소요예산 : 약 32억원

-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 정보화사업 예산(1억원) 활용
 - 정보자동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약 31억원
- * 약 15억원(일반회계), 약 3억원(응급의료기금), 약 1억원(연계 사업자 부담)

□ 추진일정

- 관련 기관·단체의 정보시스템 연계 협의 '18.1월 ~
- ISP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18.1월 ~
- 내·외부 홍보 추진계획 수립 '18.12월

6

중앙 및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 정착

정책 목표

응급의료 상담, 구급활동 지휘·조정, 전원 업무 등에 대한 중앙 및 지방의 컨트롤타워로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확립

□ 주요내용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 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
 - (중앙) 전문경력직 채용, (지방) 권역별 순번제 근무 확대·강화
- **응급의료 정보의 품질 제고**
 - NEDIS를 통한 이송환자의 병원단계 진단·예후 정보 획득
 - 병상·진료능력, 헬리패드 등 응급의료정보의 지속적 현행화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직제 설치 독려**
 -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직제설치 10개 시·도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배치 기준 마련 및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를 2급응급구조사 이상 자격자로 배치하도록 유도**
 - *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2급응급구조사 이상 자격자 비율 : 57.3%('17년)
- **이관인력(구급상황관리사)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지속 추진**
 - * 채용현황 : '15년 9명, '16년 34명, '17년 14명, '18년 24명(예정)
-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료 상담체계 구축**
 - 「신고자 ↔ 영사콜센터 ↔ 중앙구급상황센터」 3자통화시스템 구축
 - 원양어선 및 상선 근무 선원 대상 영상 응급처치 안내 및 상담
 - 해외 응급의료기관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

- 전원조정업무 강화 위한 협의체 운영 '18. 1월, 7월
- 구급상황관리사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18. 2월
-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료상담 창구 일원화 추진 '18. 2월

7 구급출동 및 이송체계 고도화

정책 목표

119 수보, 출동 조치, 상담, 이송, 전원 등 중증 응급환자의 흐름 전반에 대한 효율화로 예방가능사망을 저감

□ 주요내용

- **119수보단계 인지·분류·안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평가 강화**
 - 상황실 자체 평가·교육 및 소방학교 전문교육 실시
- **전문구급차 운영 개선**
 - 전문구급대원(1급, 간호사) 2인 이상 탑승('17년 298대) 구급차 확대 및 국산 15인승 승합차량 기반 대형 구급차(별도 규격 마련)로 전환
- **펌블런스[펌프차+앰블런스/1,208대('17년)] 확대 운영 및 다중출동**
(펌블런스, 전문구급차, 일반구급차) 체계 정립
 - 펌블런스 근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구조구급수당 지급 권고
- **119닥터헬기* 운영 및 외상센터 등에 119구급차 전진배치 추진**
 - *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운영 업무를 이관 받아 소방헬기와 통합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쏘외상센터에 Heli-EMS 전용 헬기 전진배치
- **병원 前단계 응급환자 중증도분류 시행**
 - 분류도구 개발(소방청·보건복지부 공동연구용역) → 교육 및 시범 운영 → 보완 → 교육 및 확대 운영
 - 구급단말기 탑재 앱(App) 개발 및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 추진일정

- 구급 다중출동체계 운영 및 분석 '18년 7월, 12월
- 대형구급차 표준규격서 제정 '18년 3월
- 펌블런스시스템 운영 및 분석 '18년 7월, 12월
- 중증도 분류시스템 시범 운영계획 수립 '18년 11월

정책
목표

세밀한 의료지도 및 구급대원의 기존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처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를 확대하여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및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 시범사업 개요

- '15년부터 소방청(인력·장비지원)·보건복지부(예산^{10억원}, 사업수행) 협업
- 4개 시·도(인천, 광주, 경기, 충남) 29개 소방서 199개 구급대

< 사업성과 >

평가항목	2014년	2015~2016년	비 고
병원전 자발순환회복률	8.5%	23.0%	2.7배 ↑
병원 도착시 생존률	5.9%	14.2%	2.4배 ↑
생존 퇴원률	6.8%	9.6%	1.4배 ↑
신경학적 회복률	4.0%	6.3%	1.6배 ↑

□ 확대운영 계획

- 소방청으로 사업주관 이관 및 확대
- 참여 시·도(소방관서) 공모 및 평가·지정
 - 보건복지부, 참여 병원 의사, 중앙구급교육협의회·지도의사협의회 등의 평가 참여 및 자문
- 119구급대원 대상 사전 교육 실시
 - 사업 내용, 운영 매뉴얼, 확대 처치범위에 대한 전문술기 등
- 참여 지역별 수시 평가 실시
 - 전국 통합 평가는 년 1회 실시

□ 소요예산 : 841백만원(응급의료기금)

□ 추진일정

- 사업지역 확대 및 사업 이관 협의(복지부) '18. 2. ~ 6월
- 사업 참여 희망 지역(소방서) 및 병원 파악 '18. 2월

9

구급강사에 의한 구급대원 IT 활성화

정책 목표

신설된 구급강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구급강사에 의한 직장 구급교육의 전문화 달성

□ 구급강사 개요

- ▣ 자격대상 : 구급대원 중 병원임상수련 또는 전문술기 이수자
- ▣ 양성과정 : (1단계) 구급강사양성 초급과정 → (2단계) 구급강사양성 중급과정 → (3단계) 모니터링과정 ⇒ 1~3단계 합격자를 강사로 최종 선정
- ▣ 강사관리 : 지도의사*에 의한 구급강사** 대상 능력검증 및 전문교육 실시
 - * 강사 풀(pool) : 101명('16년 51명 양성, '17년 50명 양성), '18년까지 150명 양성
 - ** 301명, 2019년까지 639명(213개 소방관서별 3명) 양성 추진

□ 주요내용

- 구급강사 양성 및 역할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구급강사 운영규정」 제정 및 「구급교육훈련규정」 개정
- 개발·보급된 구급강사용 전문 교재 적극 활용
 - 실무중심 교육 및 성과 제고로 강사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변화되는 응급의료 기준 및 구급환경을 반영한 교재·교안 개선
- 직장 구급교육 담당인력 기준* 마련
 -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정」 및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 개정 추진
- 구급강사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예 표시장 제작 부여
 - * 구급대장 제도와 함께 많은 경험의 구급대원에게 적합한 보직으로 정착
- 구급강사 협의회 구성·운영
 - 구급정책 수립·시행단계별 자문역 겸임

□ 소요예산 : 160백만원(응급의료기금)

□ 추진일정

- 중앙구급강사 협의체 구성·운영 '18. 4 ~ 12월
- 구급강사 활용 구급교육 실태 점검 '18. 6 ~ 7월

정책
목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대응역량 강화

□ 추진배경

-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신속 설치 및 적절한 응급 환자분류 및 이송 역량 강화
- 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훈련과 병행에 따른 구급 훈련 미흡

□ 주요내용

- 구급대(장) 설치 확대
 - 현장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과 함께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휘관 역할 수행
- 다수 중증외상환자 발생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유형을 포함하여 “중증외상환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구급대 주도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연계 훈련 추진
 -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대형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재난 지원팀
- 재난대응 긴급구조 통제단훈련과 분리한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실시 및 평가

< 2018년 구급대응훈련 계획 >

- ▣ (횟수/기간) 소방서별 연 1회 / 2018. 3월 ~ 10월 중 별도 실시
- ▣ (가상상황) 사상자 30명(응급 15, 준응급 5, 기타 7) 이상 발생

□ 소요예산 : 20백만원 (응급의료기금)

□ 추진일정

- 재난현장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8. 1 ~ 11월
- 구급대응훈련 계획수립 '18. 2월
- 구급대응훈련 실시 및 평가 '18. 4 ~ 11월

11 현장활동 구급대원 안전 확보

정책 목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및 감염 예방으로 대원 및 응급환자의 안전 확보 및 대원 사기 진작

□ 주요내용

○ 폭력행위 방지 장치 마련

- 주취자 등 유형별 대응매뉴얼 정비 및 대응요령 교육* 확대
- 폭행억제·증거확보를 위한 CCTV 및 웨어러블캠 설치·지급

* 모든 구급차(1,357대)에 CCTV 설치, 웨어러블캠 지급 확대(2017년 84%)

○ 폭력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원

-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직접 수사 및 검찰 송치
- 병원 진단비 지원, 공무상 요양처리, PTSD 심리상담치료

○ PTSD 예방 및 해부학 지식 함양을 위한 커데버 실습 과정 운영

* 부산소방학교에서 신임소방사·2급응급구조사과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8년 2회 운영 후 2019년부터 전국 소방학교로 확대

○ 구급차량 교통사고 방지

-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 등) 위탁 운전능력향상 교육 확대
- 긴급제동·주행보조시스템 등 안전장비의 구급차 규격화

○ 감염관리실 운영 등 감염방지 수칙 준수

- 감염방지활동 실태 점검

□ 추진일정

- 폭력행위 자동경고·신고장치 시범 운영 '18. 6~12월
- 감염방지활동 실태 점검 '18. 7월

119생활안전과

Contents

1.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추진 /-----	147
2. 자살위기현장 소방 대응능력 향상 /-----	148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시책 추진 / (국정과제) -----	149
4. 국민 생활안전 출동체계 구축 /-----	150
5. 여름철 물놀이 장소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151
6. 대국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체험시설 확충 / (정부평가) -----	152
7.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콘텐츠 확충·운영 /-----	153
8. 생명존중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	154
9. 소방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	155
10. 한국119소년단 육성 및 청소년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	156
11.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친화형 홍보 활성화 /-----	157
12.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	158
13.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모바일 홍보 강화 /-----	159
14. 취약계층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시책 확대 /-----	160

1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추진

정책 목표

소방유물·역사 보존과 재난극복 소방안전문화 확립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추진

□ 주요내용

- **(기본계획수립)** 최적입지 선정, 총사업비 산출, 건축 기본계획, 전시물 확보 및 전시방안, 박물관 운영 조직 및 전략 등 수립
 -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기획연구 용역('18.1월~5월)
- **(사업개요)** 소방유물을 관람하고, 안전을 체험하며, 재난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 사업기간 : '18 ~ '21년(4년간)
 - 건립지역 : 지자체 수요조사 후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지 선정
 - 예정규모 : 건축면적 9,000m², 지상 4층/지하 1층 ※ 실외공간 별도
 - 소요예산 : 500억 미만
- **(공간구성)** 소방박물관 전시·관람, 안전체험 및 소방정보 제공 기능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구성

구분	전시·관람 Zone	안전체험 Zone	소방정보 Zone
주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역사전시관 ▶ 차량·장비전시관 ▶ 조직·복제전시관 ▶ 디지털영상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안전체험 ▶ 지진·풍수해체험 ▶ 산악·수난구조체험 ▶ 응급처치(CPR)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산업 육성관 ▶ 소방공무원 채용정보관 ▶ 소방학술디지털자료관

□ 추진일정

- 소방 유물역사자료 전수 조사 완료 '18. 1월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기획연구 용역 실시 '18. 1월~5월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18.6월

2 자살위기현장 소방 대응능력 향상

정책 목표

자살시도자에 대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소방 대응능력 향상

□ 추진배경

- 자살예방관련 VIP 지시('17.9.11)에 따라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복지부에서 총괄, 우리청은 “자살위기현장 소방 대응능력 향상” 추진

□ 주요내용

- (119상황실) 자살시도자를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수시이용자로 「등록관리」
 - * 수시이용자 등록 → 119신고시 접수자와 출동대원 자살시도 경력 사전인지 후 대응
 - 교량 등 자살시도자 구조 시 지역정신보건센터 상담전문가 현장지원 요청
- (119상황실) 자살시도자 정보를 지역정신보건센터 통보 → 「사후관리」
 - 지역정신보건센터 정보도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록방안 추진
- (119생활안전과) 알기 쉬운 자살시도자 「대응매뉴얼 마련」
 - ※ 기존 자살예방 매뉴얼을 소방에 맞도록 쉽게 재구성(신고접수·현장출동·사후관리)
 - ※ 매뉴얼 작성 T/F팀 구성('18.3월) → 전문가, 일선대원 의견수렴 후 매뉴얼 배포('18.6월)
- (소방학교 및 소방서) 119신고접수자와 현장출동대원 「자살시도자 대응교육」
 - 전국 소방서별 연 1회 이상*, 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 반영('18년 교육 반영)
 - * 한국자살예방협회, 지역정신보건센터 연계 전문인력 및 교육자료 지원

□ 추진일정

- 자살시도자 등록관리시스템 마련(119종합상황실·소방장비항공과 협조) … '18. 3월
- 119와 자살상담기관간 정보공유(119구급과 협조) …… '18. 6월
- 119자살시도자 대응매뉴얼 마련 …… '18. 6월
- 자살시도자 대응교육 추진(소방학교 및 소방서 협조) …… '18. 연중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시책 추진

정책 목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 제도개선, 시책추진, 집중홍보 → '18년 목표 : 50%(±5%)

□ 추진배경

- 최근 5년('12~'16년) 평균 전체화재 대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인 반면, 화재사망자 51.03%(절반)가 주택에서 발생
 ※ (근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국가·지자체의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

□ 주요내용

- (제도개선) 사군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 조례」 제정 유도독려
 ※ 전국 226개 중 118개(제정완료84, 심사중4, 발의예정30, 협의중108) 추진 중
- (시책추진) 취약계층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 (집중홍보) 기관·단체 협업, 국민 참여형 이벤트·캠페인 활용홍보
 ※ 소방청 전부서 및 전국소방관서 시상품 제작·사용시 소화기 + 감지기 활용
- 취약계층 「개인정보제공(지자체→소방관서)」 근거* 마련
 * 취약계층 개인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제공 받아 무상보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심의신청(10.13.) → 소위통과(11.28.) → 전체회의('18.1월초 예정)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성과평가지표 변경 및 점수상향」
 ※ (기존 10점) 무상보급 실적 → (변경 50점) 설치율 40% 달성 기준 차등 점수부여
- 전문조사기관 위탁을 통한 설치율 신뢰성 확보(예산 1.5억)

□ 추진일정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수립 '18. 2월초
- 취약가구 무상보급 및 홍보·시책 추진 '18.연중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조사 및 분석 '18. 10 ~ 12월

4 국민 생활안전 출동체계 구축

정책 목표

별집제거, 위해동물 포획 등 국민 생활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출동체계 구축

□ 주요현황

- 별집제거, 동물포획 등 생활안전출동 증가에 따른 효율적 운영체계 필요
 - ※ '16년 생활안전출동은 약 37만건(별집제거 47%, 위해동물포획 27%, 문개방 15%, 기타 11%)으로 연도별 증가 추세

□ 주요내용

- 사고와 위험정도에 따라 출동단계 구분
 - (비긴급) 안전센터에서 출동 (긴급·위급) 구조대에서 출동
 - ※ 8개 시도 생활안전대 편성·운영(604개대 2,069명) → 그 외 시도 센터 및 구조대에서 출동
- 「생활안전출동 효과적 대응체계」 추진
 - 단순 문개방·동물포획 등 비긴급·비위험 상황 민원콜(110,120)로 이관
 - 동물포획 관련 부처·지자체·동물구호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 협업활동 강구
 - 단순 별집제거 출동에 의용소방대 활용 확대(7월~9월/선택·집중)
 - 특·광역시와 도 단위별 특성에 맞춰 생활안전 의용소방대 점진적 확대
 - 별집제거 장비 지급 및 안전사고 방지교육 철저
- 생활안전출동정보 별도관리를 위해 119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개편
- 생활안전활동 교육신설(신입전문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 학교별 여건에 맞춰실시)

□ 추진일정

- 생활안전출동 효과적 대응체계 추진 '18. 연중
- 별집제거 출동 효율화 방안 추진 '18. 6 ~ 9월
- 생활안전출동정보 별도관리 추진 '18. 연중
- 생활안전활동 전문성 향상 '18. 연중

5

여름철 물놀이 장소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정책 목표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6~9월)
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3항

□ 주요내용

- 해수욕장 안전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 '17년실적 : 295개소(해수욕장·해변115, 계곡 등 180) / 9,950명(소방 2,449명, 민간 7,501명) 배치
 - 주요 해수욕장 소방·해경·지자체와 협업강화(기관별 역할정립)
 - 긴급통신수단을 구축하여 신속한 통신으로 물놀이사고 대응능력 강화
- 지역별로 수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 기관별 동원 인원·장비 확인 및 수난구조, 수변안전요원 임무별 교육
-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 구급차 전진배치(119응급의료센터 운영)
- 단순 순찰위주 배치 지양, 사망자 발생 위험지역 집중근무 확대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

구분	배치장소 (개소)	배치인원 (명)	배치장소 사망자(명)	활동실적	
				인명구조(명)	안전조치(건)
'15년	486	12,850	4	1,815	78,696
'16년	324	10,844	2	839	73,552
'17년	295	9,950	6	950	69,657

※ 해수욕장법 제정·시행('14.12월)에 따라 해수욕장 현장 안전관리 업무가 소방·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배치장소 및 배치인원이 점차적으로 감소추세

□ 추진일정

- 국고보조금 교부(3.05억) '18. 3월
-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18. 5월
-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태점검(합동훈련) '18. 6~ 9월
-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적 분석, 유공자 표창 '18. 10~12월

6

대국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체험시설 확충

정책 목표

안전체험관 건립계획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 실현

□ 주요현황

- 화재 등 재난안전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 운영

시설명	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	안전체험교실	비고
개수	6 (서울2, 부산, 대구, 충남, 전북)	36 (시도별 평균 2대)	60 (전용교육장)	

□ 주요내용

※ 경주·포항 지진 등 계기 지진체험교육 수요급증

-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119안전체험관' 건립 지속 추진
 - 4개 시·도(서울·인천·광주·충북) 안전체험관 1차년도 사업(설계) 실시
 - ※ '17년부터 건립 중인 4개 체험관(울산·경기·경남·제주) 2차년도 공사 진행
 - 체험관 미설치 시·도 대상 수요 및 예산 분석을 통한 건립 지원
 - ※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활용, 건립비 50% 분할지원(지방비 매칭)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5개년 계획)
 - ※ 유·초등학생 학령인구수 고려, '18년부터 '22년까지 117대 보강(연평균 23대)
- 주민밀착형 안전교육을 위한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설치 확대
 - 국민안전상식 소·소·심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한 교육장 설치·운영
 - * 화재, 생활안전, 119신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 이상의 전용교육장

□ 추진일정

- 안전체험관 신규 건립(서울, 인천, 광주, 충북) '18. 연중
-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5개년 계획) '18. 연중
- 신설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설치 '18. 연중

7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콘텐츠 확충·운영

정책 목표

연령별,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안전역량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활용 ‘안전교재 개발’* 추진(3.6억)
 - 스티커북(10개 유형), 강사교재(유형별 PPT), 영상물(5분 분량 10편) 1세트
 - * 연차별 추진 : 유아('15), 초등저학년('16), 초등고학년('17), 장애인('18), 노인('19)
- 연령별 안전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행동요령’ 콘텐츠 마련·배부
 - 생활주변의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리플릿 제작(유아~노인)
 - * (유아) 놀이시설, (청소년) 학교시설, (성인) 교통·화재안전, (노인) 낙상·질병
- ‘학교관리자 소방안전연수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 안전사고 저감 추진
 - ※ ‘17년 48회 2,570명의 교장·교감 연수 / ‘18년 2,600명 연수계획 추진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생활안전문화 조성
 - 대형마트 등의 안전관리자 대상 화재, 지진 등 생활안전교육 실시
-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 공감형 안전체험활동 확대
 -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탐색활동 등 활용, 소방관 직업체험 운영
- 5월·11월 등 주요시기, 지역축제 활용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 가족 등 국민이 체험하고 즐기면서 배우는 안전체험행사 운영

□ 추진일정

- 장애인교육용 안전교재 발간사업 ‘18. 2월~9월
- ‘안전사고 행동요령’ 콘텐츠 마련·배부 ‘18. 5월
-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학교관리자 등) ‘18. 연중
- 소방관 체험 및 주요시기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18. 연중

8

생명존중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정책 목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운영·홍보 활동 등을 통해 대국민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응급처치 전문교육 강사 양성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 응급처치강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한 전문가 배출(연 1,000명 목표)

* 응급구조사 양성, 의용소방대 CPR강사 양성, 소방안전강사 CPR교육 수료 등

- 전 소방기관 응급처치교육장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장비* 구비·활용

* '전용 응급처치교육장' 미설치 소방기관도 "응급처치 교육장비(5종19점)"필수 확보

○ 심폐소생술 바로알기 등 소·소·심 체험교육 운영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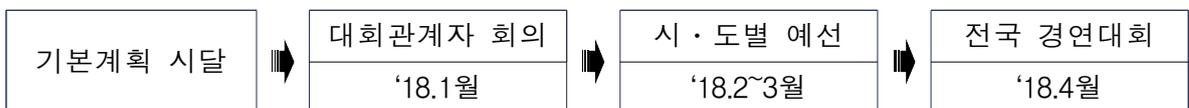
-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생활응급처치 교육교범' 발간·보급

-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수요자 맞춤형 생활 응급처치교육 운영

○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제고

- 방송매체 및 SNS 등 활용 집중홍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를 통한 응급처치문화 확산(3.8백만원)



※ 시상내역 :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 2점, 소방청장 3점, 질병관리본부장 3점, 대한적십자사회장 9점

□ 추진일정

○ 생활안전교육(소·소·심 체험교육 등) 운영 '18. 연중

○ 응급처치강사 양성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18. 연중

○ 제7회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18. 4월

정책
목표

안전교육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 전문교육과정 및 워크숍 등 운영으로 소방안전교육인력 역량 강화
 - 소방학교 교육과정(2주), 전문기관 위탁교육(5개 과정)* 등 운영
 - * (과정별 2기수 운영) 교수학습, 소방기술, 기상재해, 응급처치, 항공안전
 -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워크숍 및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실시('18.2월)
 - 제4회 청소년 소방안전교육포럼 개최('18.4월, 대구EXCO)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교육역량 수준 향상 유도
 - ※ 소방안전강사 선발, '국민안전교육 실무(소방안전교육사시험 과목)' 이해정도 평가
- 선진국 소방안전교육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과정 개발·운영
 - (배경) 소방청 위탁교육(무료) 20명 요청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 (개요) 재난안전교육 수행체계 등 견학 및 실습(10일간, '18.9월)
 - (예산) 시·도별 자체예산(1인당 약 450만원), 통역을 통한 교육진행
- 소방안전교육사 확대 양성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행횟수 조정 협의(2년 1회 → 1년 1회)
 - 중앙·지방소방학교 소방안전교육사 양성과정 개설·운영(2주 과정)

□ 추진일정

- 제4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개최 '18. 2월
- 제4회 청소년 소방안전교육포럼 개최 '18. 4월
- 국외연수 추진 및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18. 연중

정책
목표

한국119소년단 설치 및 운영 근거법령 마련, 연령별·경력별 체계적인
활동프로그램 매뉴얼 제시 등을 통한 미래 안전리더 육성

□ 주요내용

- 한국119소년단의 설치 및 역할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소방기본법 개정 등)
 - ※ 현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만 명시
- 청소년단체 가입·등록을 통한 한국119소년단 활동 공인 추진
 - 119소년단 활동 생활기록부 등재 및 지도교사 활동경력 확보
- 개인 및 지역사회 가입 유도를 위한 ‘지역단위 119소년단’ 운영 정착
 - ※ 시범사업(‘18년 완료) 시행 후 ‘19년부터 소방서별 지역소년단 1개대 이상 운영
- 미래 안전리더 육성을 위해 의용소방대 멘토링 등 협력시스템 구축
 - 성장주기(청소년→성인)를 통하여 소방 자원으로 활동토록 유도
 - ※ 시·도별 1개 대 선정, 시범 운영(‘18) → 제도보완(‘19) → 확대운영(‘20)
- 전국 우수 119소년단 교류 및 안전문화행사를 위한 ‘안전캠프’ 개최
 - 초등부 : 여름방학 캠프(8월 2박 3일), 중등부 : 안전문화탐방(11월 1박 2일)
- 119소년단 지도교사 직무연수 운영 및 사기진작방안 확대
 - 지도교사 ‘소방안전연수과정’ 운영으로 전문 지도역량 강화(8월)
 - 지도교사협의회 개최 정례화(연2회), 대회 등 자문·심사위원 위촉

□ 추진일정

- 한국119소년단 설치·지원 근거조문 마련 ‘18. 연중
- 청소년단체 가입 및 생활기록부 등재단체 등록 ‘18. 상반기
- 지역소년단 운영 및 의용소방대 멘토링 시범사업 ‘18. 연중
- 한국119소년단 전국 안전캠프(년2회) ‘18. 8, 12월
- 지도교사 연수과정 운영 및 표창 ‘18. 연중

11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친화형 홍보 활성화

정책 목표

국민 공감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방정책과 안전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공감할 수 있는 홍보 추진

□ 주요내용

- 소방정책 홍보과제*에 대해 유형별·시기별 선택 홍보
 - 소방정책 표준 홍보물 제작, 매스미디어 활용(9,000만원)

< 소방정책 홍보과제 >

- [화재안전] 유형별 화재 예방 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소소심 바로 알기 피난시설 장애요인 제거 등
- [현장대응]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차 출동로 확보, 다매체 119신고요령, 허위·장난신고 방지, 소방활동중 폭행피해 방지 등

- 소방관련 방송프로그램(TV, 라디오 등) 제작지원 등을 통한 홍보
 - 소방활동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소재 활용 지원
 - ※ 예능 ‘잡스(JTBC)’, 교양 ‘아침마당(KBS)’, ‘안전 캠페인(EBS)’ 등
 - 공익광고 영상물(한국방송광고진흥사), 국정만화(문체부) 등 제작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재미있고 내실있는 소방안전문화 행사 개최
 - 국민 참여 공모전, 초·중·고 학급단위 경연대회 등
 - ※ 국민안전 생활수기 공모전(총상금 500만원), 소방안전 포스터 공모전(총상금 1,510만원), 119소방 동요대회(총상금 3,300만원), 119안전뉴스 경진대회(총상금 630만원) 등

□ 추진일정

- 전국 소방관서 홍보담당자 워크숍 개최 ‘18. 3월
- 국민안전 생활수기 공모전 ‘18. 4월
- 소방안전 포스터 공모전 ‘18. 9월
- 소방 동요대회 ‘18.10월
-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18.11월

12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정책 목표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에 앞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확산
 - 겨울철 불조심 현수막, 포스터 등 게시를 통한 분위기 조성
 - 포스터(공모전 수상작), 홍보 영상물, 캠페인송 등 활용 홍보
 - 대중 매체(TV, 인터넷 등)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다각적 홍보
- 국민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확대
 - 유아부터 노인까지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 ※ (유아) 동요활용 안전교육, (초·중·고) 긴급대피, 소소심 및 직업체험 (직장인) 직장 내 소방시설 바로 알기, (노인) 화재인지, 피난교육 등
 -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소방안전교육 실시
 - ※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 국민 참여형 화재예방 119이벤트 제공
 - 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119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 소방안전 UCC 공모 및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 전 국민(가정 및 차량) 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 추진일정

-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소방안전교육 실시 '18. 연중
- 소방안전 표어, 포스터, 사진 공모전 '18. 9월
-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18. 11월

13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모바일 홍보 강화

정책
목표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 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 주요내용

- 국민들과 친근하게 소통·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개발·활용
 - 홍보용 포스터, UCC 영상물, 픽토그램(그림 문자), 소방캐릭터 등



※ 소방캐릭터 ‘영웅이’ 업무표장 등록(‘17.11.8)

→ 소방청 심벌마크, 119마크 등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 추진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방정책홍보

- 시·도 소방 현장활동 미담사례, 우수 소방정책 등(주 1회 이상)
- 분기별 시·도 우수사례(청장 표창) 분석 정보 공유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토리, 네이버밴드, 블로그 등 활용 적극 홍보

- 한국소방방송(119fbn.fire.go.kr) 활용 홍보콘텐츠 공유

- 시·도 소방본부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진 및 영상자료 공유

※ 소방활동 수행 중 이슈 발생시 촬영 동영상 업로드를 통한 자료 확보

□ 추진일정

- 소방청 업무표장 등록 ‘18. 1월
- 소방홍보 콘텐츠 개발 ‘18. 연중
- SNS 활용 소방정책 홍보 ‘18. 연중

14 취약계층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시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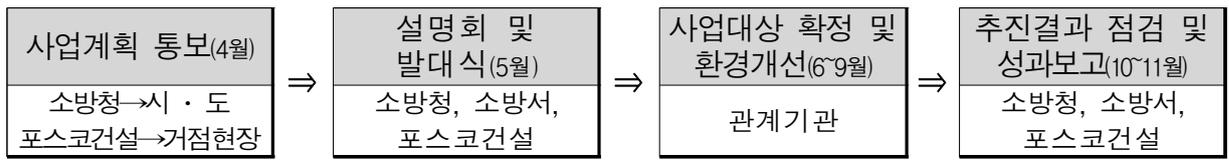
**정책
목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소방안전복지사업을 연계하여 화재취약계층에 대해 소방안전망 확충 지원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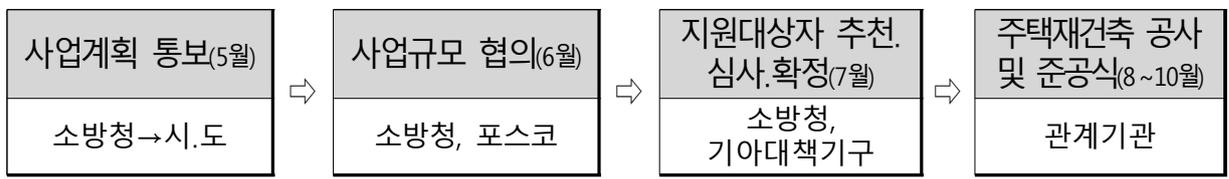
○ 취약계층 화재예방환경 조성사업 추진

- 참여기관 : 포스코건설, 한국해비타트, 포스코 1%모금회
- 주요내용 : 포스코건설 사업현장 인근의 취약가구에 화재예방환경 (전기·가스설비 수리, 도배·장판 교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조성
- ※ 연 30 ~ 50개 시설·가구 지원(사업비 1.2억), '13년부터 12개 시설, 241가구 지원('17년)



○ 화재피해 주민 새 보금자리 마련 지원사업 추진

- 참여기관 : 포스코, 기아대책기구, 한국철강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주요내용 : 영세한 화재피해 주민에 스틸하우스(33~45㎡) 제공
- ※ 연 2~3채 지원(사업비 1~2억), '09년부터 '17년 까지 21채 지원



□ 추진일정

- 취약계층 화재예방환경 조성사업 계획 수립 '18. 4월
- 화재피해 주민 새보금자리 지원사업 계획수립 '18. 4월
- 소방안전복지사업 성과보고회 '18. 12월

소방장비항공과

Contents

1.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기반 조성 /-----	163
2. 소방헬기 국가 통합관리 체계 기반 구축 / (국정과제) -----	164
3. 차세대 국가소방정보시스템 구축 /-----	165
4.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	166
5. 소방장비 표준규격 선진화 및 안전성 제고 /-----	167
6. 소방장비 현대화 및 관리 시스템 체계화 / (정부평가) -----	168
7. 현장 중심의 개인보호장비 개발 및 보급 /-----	169
8. 소방 항공대원 교육훈련 운영체계 구축 /-----	170
9. 소방헬기 및 소방차 보험 통합 추진 /-----	171
10. 재난현장 항공지휘·통신지원 기반 구축 /-----	172
11. 119소방현장 모바일 앱 통합시스템 구축 /-----	173
12. 민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재난정보 공유체계 강화 /-----	174
13. 대형재난 대비 비상위성통신망 운영체계 효율화 /-----	175

1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기반 조성

정책 목표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및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 마련

□ 주요내용

- 소방장비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 수립·시행
- 소방장비의 품질 혁신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소방청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
 - * 조직, 업무절차, 발전방안 및 장기로드맵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소방장비 구매 시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고, 구매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도 요청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장비 선정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를 객관적 평가절차*를 거쳐 연장사용
 - * 장비상태, 사용실적, 고장빈도, 수리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체시기 산출
- 소방헬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 소방청장과 시·도지사 간 협력체제 구축
-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의 체계적·전문적·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

□ 추진일정

- 소방장비관리법 공포 '17. 12월
- 소방장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연중
 - * 입안(3~4월) → 입법예고(5~6월) → 규제·법제심사(7~9월) → 차관·국무회의(10~11월)
- 표준규격 발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추진 '18.상반기

2

소방헬기 국가 통합관리 체계 기반 구축

정책 목표

소방항공대의 국가통합운영체계 구축으로 소방헬기 상시 출동체계 강화와 대국민 항공구조구급서비스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소방헬기 국가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전조사(자료수집 및 법령 검토)
 - 14개 시·도 소방항공대 운영인력, 예산, 시설, 장비 등 항공자산 실사(평가)
 - 시·도 항공자산(헬기, 장비, 시설 등) 국가 양여 관련 법령 검토(타당성)
 - 국가 통합관리 추진 방향 검토(문제점 등), 통합관리·운영 소요예산 산출
- 시·도 소방헬기 국가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 소방항공 지휘체계 일원화에 따른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소방헬기 통합 운영 방안(권역별 출동체계, 수리부속 공동구매 및 통합정비 등)
 - 소방항공 통합 중앙지원체계 구축(인력채용, 헬기 및 부품구매, 교육훈련 등)
 - 노후 헬기 교체 시 기종 단일화로 운용예산 절감 및 헬기 가동율 제고
 - ※ 5개 제작사 10개 기종 : 에어버스 10, 가와사키 7, 레오나르도 5, 쿠레르타우 4, 벨 3
- 시·도 자치단체(14개 시·도) 소방헬기 국가 통합관리 사전협의
 - 시·도 관계자 사전 토의 등을 통해 통합관리 필요성 및 타당성 확산
- 소방헬기 국가 통합관리 협약 체결(소방청 ↔ 14개 시·도 자치단체)
 - 시·도 소방항공대 인력, 장비, 시설 등 항공자산 국가 양여(이체)
 - ※ 동의하는 시·도 우선 시행 후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 추진일정

- 국가 통합관리 추진방침 등 기본계획 수립 '18. 1월 ~ 2월
- 기초자료 수집 및 시·도 항공자산 현지조사 '18. 2월 ~ 3월
- 시·도 관계자 토론 및 자치단체 사전협의 '18. 3월 ~ 9월
- 소방헬기 국가 통합관리 협약 체결 '18. 9월 ~ 12월
 -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진행 추이에 따라 추진시기 탄력적 판단

3

차세대 국가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정책 목표

국가차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일원화 된 소방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육상재난 대비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BPR/ISP 추진
 - (사업예산) 3.2억 / (기간) '18.1 ~ 5월 / (대상) 노후 시스템 3종* 등
 - * 소방민원정보시스템('06년), 인사행정정보시스템('08년),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09년)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시스템 프로그램 재설계 방안
 - 시·도에 분산된 서버, DB 등 정보자원 클라우드 기반 재구축
- 차세대 국가소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소방청 ↔ 19개 시·도 상황실 통합 긴급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 * (기간/예산/내용) '06~'14년 / 541억원 / 119신고접수, 출동명령, 출동대편성, GIS 등
 - 신고접수, 출동명령 및 출동대관리 등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고도화
 - 전국 단위 지휘·대응을 위한 공간정보 통합 GIS표준시스템 구축
 -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현장대원용 모바일 정보시스템 확대
 - 시·도 서버 이중화 및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소방정보센터 구축
- 현장 활동정보 등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 플랫폼 구축
 - 현장 활동정보 등 융·복합 분석으로 피해예측 및 정책수립 활용

국가소방 정보시스템 (국가소방정보센터 운영)	긴급대응시스템	신고접수, 출동명령, GIS	소방청, 시·도(18) 및 소방서(215)
	모바일시스템	현장대원	재난현장(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행정정보시스템	구조·구급, 인사, 민원 등	
	빅데이터·AI	소방정책	민·관 재난정보공유

□ 추진일정

-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BPR/ISP 예산 확보) …… '17.12월 ~ '18. 8월
- 차세대 국가소방정보시스템 사업(중·장기) 추진 …… '19년 ~ '22년

4

공기흡기 충전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정책 목표

호흡보호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지원 및 제반환경 구축

□ 주요내용

- 공기충전기 통합 관리·운영 및 노후 충전기 교체
 - 집중 관리로 공기품질 확보,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공기충전기를 소방서 단위로 통합관리* (537개소 606대)
 - * 시·도 여건에 따라 통합관리가 비효율적인 경우 안전센터 등에서 운영
 - 통합 과정에서 노후 공기충전기는 전량 교체('18년 상반기내 완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충전시설 구축 및 신고
 - 공기충전기 통합관리 소방기관(소방서, 안전센터 등)에 안전충전함 등을 설치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18년 내 완료 목표)
 - * '18년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반영(신고율=신고기관수÷통합관리 기관수)
-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 내실화 및 공기충전실 확대 구축
 - 정비실 보유장비 기준 및 충전실 세부 설치기준 법제화*
 -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일부개정
 - 신설 또는 리모델링 소방관서에 표준 공기충전실 시범 구축 등

□ 추진일정

- 시·도별 공기충전기 통합관리 및 충전시설 신고 이행 연중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 '18.상반기
- 표준 공기충전실 시범 구축 추진 '18.하반기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를 위한 시·도 점검 '18.하반기

5

소방장비 표준규격 선진화 및 안전성 제고

정책 목표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합한 소방장비 보급 및 소방차 사고 예방

□ 주요내용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인증기준 개발

구분	기동장비 분야(9종)	보호장비 분야(4종)
개발대상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사다리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조연차, 지휘차, 생활안전차	공기호흡기, 방화복 유지보수, 화학보호복, 안전화

-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표준규격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품질 모니터링단*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시·도 직원이 중심이 되어 품질개선사항, 하자정보 공유 및 제조업체의 사후관리 평가 등 정기적으로 현장의견 수집·발굴(소방장비관리시스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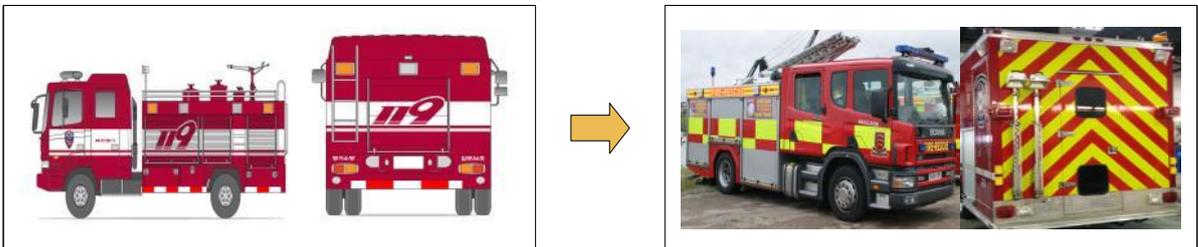
○ 소방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한 新 도색기준 적용

-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하여 119 정체성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저감을 통한 안전성 확보

* 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운 성질

- 표준규격에 도색기준을 반영하여 '18년 신규 소방차부터 적용*

* 기존 소방차는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반영 또는 시·도 자체예산으로 단계적 적용



□ 추진일정

- 소방자동차 도색기준 개정 '18. 2월
- '18년 표준규격 및 인증기준 개발 '18. 하반기

6

소방장비 현대화 및 관리 시스템 체계화

정책 목표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을 통한 안전한 소방활동 지원 및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활용성 제고

□ 주요내용

- 소방안전교부세 투자를 통한 노후·부족 소방장비 **Zero**화 유지

< 소방장비 5개년('18~'22) 교체·보강 예상소요 >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력소방차*	1,673대 (5,056억원)	452대 (1,329억원)	241대 (746억원)	428대 (1,374억원)	293대 (840억원)	259대 (767억원)
개인보호장비**	1,476,529점 (3,126억원)	275,049점 (625억원)	287,398점 (633억원)	298,066점 (606억원)	312,036점 (649억원)	303,980점 (613억원)

*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화생방대응차, 조배연차, 무인방수차, 사다리차, 구조차, 지휘차, 화재조사차

** 공기호흡기(등지계·용가면체·보조마스크), 방화복, 헬멧(진압·안전), 안전화, 장갑(진압·안전), 방화두건

- 내용연수가 경과되어도 확일적으로 노후장비로 분류하지 않고, 장비상태, 사용실적, 수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체*

* 교체평가 시기, 절차, 기준 등에 대한 평가매뉴얼 및 객관화된 산식 개발

- 소방공무원 보직 구분(진압, 행정 등)에 따라 개인장비 차등지급

- 소방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 시·도 소방장비관리운영계획 및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사항 평가*

* 계획대비 시스템 입력률, 입력자료 일치성·충실성 등 교차평가(국민행복소방정책)

- 시·도 평가를 통하여 확정된 통계(내용연수 경과장비, 부족장비 등)를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매년 9.30까지 행안부 제출*)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 추진일정

- 시·도 소방장비관리운영계획 수립·취합 '18. 1월
- 소방장비 개선실적 점검 '18. 분기별
- 소방장비 교체평가 매뉴얼 제정 '18. 상반기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관리실태 점검·평가 연중

7

현장 중심의 개인보호장비 개발 및 보급

정책 목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개인보호장비 보급·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개인보호장비 표준규격 개발 및 인증

-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 실시 및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품질 모니터링제 운영
 - NFPA, EN 등 국제 선진기준 및 기술·제품개발 동향 분석
- ⇒ 표준규격 개선 및 보완, 국가 성능인증

○ 사용자 중심의 개인보호장비 보급

- 소방청 주관 일선 시·도 소방공무원 참여 정기 품평회* 개최
- * 품평회는 전년도 말에 개최하되, 필요시 시·도 실정에 따라 권역별 수시 개최
- 품평회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장비를 해당 연도 구매대상 장비로 선정*
- * 정부조달구매(3자단가계약, MAS)를 위하여 선정된 장비는 조달등록 협의(조달청)

○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개인보호장비 정비실」로 기능 확장 검토

- 공기호흡기, 충전기 이외에 방화복, 헬멧, 장갑 등 기타 개인보호 장비 일체에 대한 수선, 세탁, 정비 등 업무 수행

□ 추진일정

- 개인보호장비 실태조사 '18. 상반기
- 개인보호장비 정기 품평회 '18. 12월
- '18년 표준규격 및 인증기준 개발 '18. 하반기

정책
목표

조종·정비사 전문교육 의무화 법령 신설에 맞추어 기관별 교육·훈련 역할 정립 및 조정과 항공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추진

□ 주요내용

- 항공대원 교육·훈련 운영(지원) 기관별 역할 정립·조정
 - 소방장비항공과(총괄지원), 중앙소방학교(직무교육), 중앙119구조본부(전문훈련)
- 소방항공 운항관리담당자 교육·훈련 규정 추가 및 운영과정 신설*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중앙소방학교
- 과정신설*에 따른 운영방식, 커리큘럼 등 통합적인 기준 마련(19년 시행)
 - 신규과정 개설 곤란 교육·훈련**에 한하여 외부 위탁교육
 - * 계기비행훈련, 비상절차훈련, 항공기상상황관리과정 등 / ** 제작사 비행·정비교육 등
- 소방 항공대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 항공대원 교육훈련 이력 및 자격(비행경력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헬기 보유 국가기관 항공시설 활용 및 전문요원 상호 지원 협력 강화
 - 항공요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관별 보유 항공시설 공동 활용
 - 항공전문인력 교관요원 지원 및 교육·훈련 자료, 정보공유 등

□ 추진일정

- 운항관리담당자 교육훈련 근거 마련 등 법령개정 …… ‘18.1 ~ 9월
- 신규과정 커리큘럼 설계 및 운영기준 마련 …………… ‘18.1 ~ 12월
- 교육훈련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 …………… ‘18.7 ~ 9월
- 헬기운용 국가기관 상호 지원 협력 강화 …………… ‘18.1 ~ 12월

9

소방헬기 및 소방차 보험 통합 추진

정책 목표

전국의 소방헬기(28대) 및 소방자동차(8,700여대) 보험을 통합으로
계약하여 균등한 보험혜택 제공 및 예산 절감

□ 주요내용

○ 소방청 주관, 전국 소방헬기 보험 통합 종합계약 추진

- 종합계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소방청 ↔ 시·도지사) 체결
- 손해보험사와 보험요율 조정 협상* ⇒ 보험료 인하(30% 정도/약 32억)
 - * 타 국가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요율을 인하 보험료 대폭 절감
- 보장내용 및 배상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표준화*

항목 범위	기체보험	제3자배상	승무원상해	승객/리프트 (통합) 상해	전쟁보험	기타(확대 및 추가)
배상범위	100% (도입가)	50억원	5억원	5억원	지역별	-휴향환급(범위확대) -정비사상해(3억) -화물운송(실가격)

* 기체 및 전쟁보험은 도입가 반영, 승무원·승객상해 및 제3자 배상보험은 타 기관 유사 수준 휴향환급금 범위 확대, 정비사 상해보험 및 화물운송보험은 신규항목으로 추가

○ 소방자동차 보험 통합관리 단계적 추진(1차: 소방본부, 2차: 소방청)

- 실태조사를 통하여 종합보험 보장내역 분석 및 가입 기본조건 마련
 - * 대인 및 대물보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가입연령, 법률비용지원 특약 등
- 보장내역 통일, 보험단가 절감 등을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서
종합보험 통합 가입('19년부터) 및 소방청 통합방안 검토
 - * 현재 18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소방본부에서 종합보험 통합가입

□ 추진일정

- 헬기보험 종합계약 추진 TF 운영 '18. 4~5월
- 헬기보험 가입 조달계약(조달청↔시·도) '18. 6~7월
- 소방차보험 가입 기본조건 마련 및 시·도 통보 '18. 상반기
- 소방차보험 소방본부 일괄가입 추진 '18. 하반기

정책
목표

재난현장 지휘관에게 동원헬기 정보와 원활한 통신수단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인명구조 및 체계적인 항공지휘·통제 체계 확립

□ 주요내용

- 재난현장 출동 헬기의 위치정보*를 현장 지휘관에게 제공하는
휴대폰(업무폰) 항공지휘·통제 앱 개발 추진(2.26억원)

* 기본정보 : 소속, 헬기종류, 호출부호 / 위치정보 : 헬기위치, 속도, 고도 등

- 임무비행 시 필요한 비행정보 및 상황정보를 모바일 장비와 연계
현장지휘관과 공유

- 재난현장 출동헬기 및 지휘부, 상황실과의 다자간 원활한 교신을
위한 항공무선통신망 설치 확대

※ 現 전국 8개 기지국 운영 / 소방헬기와 청 상황실간 항공통신망 운영 중(17.3)

- 소방헬기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소방항공 전용주파수(VHF) 확보 추진
- 통신 사각지대 분석, 추가 무선 기지국 선정 및 설치

□ 추진일정

- 항공망적합성 평가신청 및 주파수 선정 '18.1월 ~ 5월
- 통신 사각지대 분석 및 추가 기지국 선정 '18.1월 ~ 10월
- 모바일 항공지휘통제체계 앱 개발 '18.4월 ~ 10월
- 시·도 소방본부 운용교육 및 타 기관 홍보 '18.10~12월

정책
목표

소방활동 정보 공유를 위해 개별 구축된 모바일 현장활동 지원시스템 (앱 App)을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현장 지원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 주요내용

- 통합·일원화된 119소방현장 지원 모바일 앱(App) 표준시스템 설계
 - 개별 구축·도입된 시스템(현장지휘통제시스템, 119수색·구조시스템, 구급출동시스템)으로 인한 소방활동정보 연계의 한계 및 활용도 저감
 - ※ 현장지휘통제시스템('14년), 구급출동시스템('15년), 119수색·구조시스템('16년)
 - 소방·구급차량 출동경로 무선출동지령단말기(MDT) 앱(App) 기능 통합
 -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재난유형별 지원 모바일 앱(App) 통합

< 119소방현장 모바일 앱 통합시스템 >

출동(MDT) 출동경로 등	+	화재 소방대상물 등	+	구조 안내표지판 등	+	구급 병원정보 등	+	생활안전 동물정보 등
-------------------	---	---------------	---	---------------	---	--------------	---	----------------

- '18년 국고보조금 활용 소방청·시·도 종합계약 협정 체결
 - (4개 시·도) 부산·대전·전남·제주, (사업비) 12억(4개 시·도 ×3억)^{국비 1.2억, 지방비 1.8억}
 - 119소방현장 모바일 앱(App) 통합시스템 설계 반영 사업 추진
 - 시스템 표준화, 연계 강화 및 중복 방지를 위한 종합계약* 추진
 - * 국가계약법 제24조(종합계약) 및 지방계약법 제28조(종합계약 등)
- '19년도 시·도 확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 추진
 - 소방점검 및 단속 민원 모바일 앱(App) 통합시스템 설계 반영

□ 추진일정

- 119소방현장 모바일 앱 통합시스템 구축 시·도 협정 체결 '18. 2월
- '19년도 시·도 확산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 '18. 3월~8월
- 119소방현장 모바일 앱 통합시스템 구축 '18. 4월~10월

12 **민·관 협업을 통한 대국민 재난정보 공유체계 강화**

정 책 목 표

민·관 협업 및 정보 인프라의 적극적인 연계와 공동 활용을 통하여
119긴급출동 알림서비스 등 대국민 재난정보 공유체계 강화

□ 주요내용

-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 구축 (1단계 : '17. 12월 ~ '18. 6월)
 -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재난정보 공유체계* 구축으로 119출동정보 제공
 - * 고속도로 전광판, 터널내 라디오 방송 등 활용 정보 제공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
 - 민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연계*한 119출동 재난정보 제공
 -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원내비, T-맵 등) 길안내 서비스 연계 재난정보 제공
- 「신고자 119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 구축 (2단계 : '18. 6월 ~ '18. 12월)
 - 민간 SNS와 연계하여 119출동에 대한 대국민 재난정보* 공유 강화
 - * 불안감 해소, 신뢰 제고를 위해 “출동중”인 상황을 신고자 등에게 실시간 제공
 - 신고자(요구조자)에게 교통상황 등을 반영한 예상 도착정보* 등 제공
 - * 민간 내비게이션의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과 연계하여 자동계산된 도착시간 등
 - 구급출동부터 시범운영 후 화재·구조출동까지 단계적 서비스 확대

□ 추진일정

- 119 재난정보 공유체계 구축 '18. 1 ~ 6월
- 전국 고속도로 119긴급출동 알림서비스 확대 '18. 1 ~ 6월
- 신고자 119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 추진 '18. 7 ~ 12월

※ 행안부 지원사업 공모('17.11월), 타당성·전문가검토('17.12월), 과제확정('18.2월)

정책
목표

대형재난 발생 시 유·무선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소방 비상위성 통신망 일원화 및 주파수 활용 개선을 통한 운영체계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시스템 통합·일원화) 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위성통신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및 위성 주파수 비용 절감(연 3억)
 - * 이원화(소방청, 행안부 이관된 위성통신방식 운영으로 시스템간 호환, 경제성 저하)
 - 위성장비 교체 및 사용 주파수 대역 축소·통합(34MHz → 24MHz)
- (주요기능 조정·최적화) 위성통신차량의 주요기능 조정, 탑재장비 최적화*를 위한 기본규격 시행
 - * 기술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저감된 기능별 탑재장비 조정 등으로 기동성 제고
 - 영상회의, 영상전송(LTE 영상전송시스템 운영 중) 등 기능조정(축소)
 - 장비의 최적화와 차량 소형화로 경제성(8억→4억)과 기동성 확보
- (소방 비상통신 지원 강화) 소방무선통신 두절·장애발생에 대비한 무선중계 등 비상통신 기능 강화 및 공동 활용체계 마련
 - ※ (평 시) UHF ↔ 무선 송·수신 기지국 ↔ 상황실 (재난시) UHF ↔ 중계 기능(통신 두절시) 위성통신차량 ↔ 상황실
 - 위성통신차량에 소방무선통신 두절에 대비한 중계기능 추가(3억)

□ 추진일정

- 위성통신방식 통합 및 일원화 '18. 1 ~ 6월
- 추가 기능개선 예산 반영('19년도) '18. 5 ~ 8월
- 소방 비상통신 지원강화 '18. 6 ~ 12월

7. 중앙소방학교

Contents

1. 우수 교수요원 선발 양성 / -----	179
2. 중앙소방교육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 / (국정과제) -----	180
3. 신임교육 적체해소 및 천안부지 활용방안 마련 / ----	181
4. 소방연구소 설치를 통한 연구기능 활성화 / (국정과제) -----	182
5. 차질 없는 공주 교육연구단지 건립 추진 / (국정과제) -----	183
6.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제도 운영 / -----	184
7. 실전형 교육훈련장 건립 및 전술훈련 강화 / -----	185

1 우수 교수요원 선발 양성

정책
목표

우수교수요원 영입을 위한 교육·인사제도 개선 → 교육운영 책임성, 전문성 강화로 소방교육의 질 제고

□ 주요내용

- 교수 직위공모제*를 통한 최적임자 선발 * 교수직위 공개모집 심사
-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인사관리규칙」 제정, 교수요원 공모

< 교수요원 선발 방법 >



※ 現 기준은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검증 미흡으로 교수자격 세부기준 마련

- 교수요원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경력관계 도입('19년 정원확보)
- 교수요원 전문직위 지정으로 전문성 강화 및 보직고정(최소 3년)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소방청장(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 가능
- 전문경력관 도입을 통해 교수보직 연속성 확보 및 전문교육 권위자 육성
- 우수교수 영입을 위한 교육훈련 인사제도 개선(운영지원과 협조)
- 학교 자체 승진임용 직급 상향 조정 (소방위 → 소방경 까지)
- 교수 인센티브* 강화 및 선진 교육기관 연수기회 부여(연 2명)
 * 수당·승진 가점부여(월 0.05점, 최대 2점, 6개월 초과 적용) → 가점평정규정 개정
- 교수기법 향상 교수평가 강화(2회 연속 85점 미만자 2개월 강의 제외)
- 교수평가 미달자 강의스킬 향상 프로그램(외부전문가 코칭 1:1) 운영
 ※ 강의기법 향상(1개월) → 내부평가(과장 주제) → 예행강의(학교장 주제) → 강의 투입

□ 추진일정

- 교육·인사 관계법령 개정 '18. 상반기
- 우수 교수요원 확보 '19년 소요정원 요구 '18. 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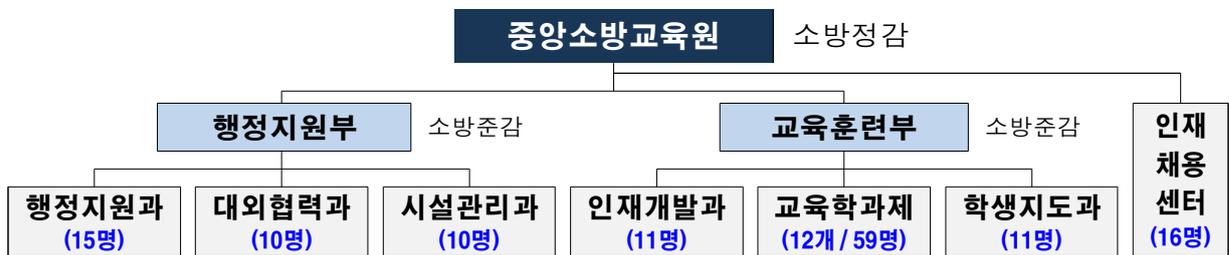
2 중앙소방교육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

정책
목표

중앙소방학교를 중앙소방교육원 확대 개편(필수정원 76명 순증)
→ 학과제 42, 학생지도 9, 청사관리 10, 대외협력 8, 전국시험 7

□ 주요내용

- 중앙소방학교를 교육훈련 중추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
 - 現 3과 1실 1팀 68명 → 2부 5과 1센터 12학과 132명 ※ 연구기능 독립



- (학생지도과^{신설}) 모든 생활지도 일원화(생활계, 지도 3계 × 3교대)
- (시설관리과^{개편}) 천안·공주 청사·용역관리, 2단계사업 설계·공사
- (대외협력과^{신설}) 국내·외 협업교육 및 학술대회, 대외협력 추진
- (인재개발과^{개편}) 인적자원관리, 교육개발·지원 등 중심역할 확대

- (교육기능 강화) 학과제 도입, 실전훈련 중심 교육 확대

- (교육개편) 12학과(지휘역량, 신입, 국제, 전문 9개) ※ 훈련은 3~6명
※ 학과제 : 과정설계, 강사섭외, 강의·훈련, 평가 등 전 교육과정 전담책임 운영

학과	현장지휘	소방정책	방호조사	예방안전	화재대응	인명구조	구급상황	장비관리	특수대응
훈련	가상훈련	보건안전	화재조사	소방시설	실물화재	산악수난	외상처치	차량장비	붕괴테러

- (지휘역량교육) 소방정(12주)·소방령(3주)·소방경(3주) → 리더십학과
- (신입교육) 간부후보생(1년), 소방사(16주), 의무소방(4주) → 신입소방학과(소방사 천안 운영)
- (국제교육)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2년), KOICA 국제위탁, 국제수탁 → 글로벌학과

※ 전문경력관(리더십·전문학과 10명) 도입, 부교수(소방직 공모·3년이상 보직고정)

□ 추진일정

- 교육훈련 개편준비 및 '19년 소요정원 확보 '18. 연중

3

신임교육 적체해소 및 천안교육시설 활용방안 마련

정책 목표

신임교육 단축 운영에 따른 현장중심 교육과정 편성, 표준화
→ 재난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우수인재 양성

□ 주요내용

○ 소방사 신임교육과정(16주) 개설 및 실무중심 교육훈련 운영

- (교육운영) 총 720여명(180명×4회×16주^{집합 12 + OJT 4}) * 시도별 파견 각 2명
- (과정설계) 현장에 바로 활용 가능한 커리큘럼 개발(전국공통 활용)

구분	계(12주)	공통역량	행정실무	화재대응	인명구조	기초구급	기타행정
시간	420	35	126	140	70	14	35
비율	100%	8.3%	30%	33.3%	16.6%	3.3%	8.3%

○ 현장 적응성 강화 실습교육 운영 및 신임교과목 표준화 추진

- 최일선 관서실습* 4주(화재 1, 구조 1, 구급 1, 행정·상황 1) 운영 배치
* 관서실습제도(OJT: On-the-Job-Training) : 현장배치 전 직무적응훈련
- 신임교육 공통교재를 핵심 표준교재로 업그레이드 개발 보급
※ 신임교육 표준교재(43개 과목) 개발 보급(연구용역 1억 10개월, '19년 결과반영)

○ 천안부지 신임교육 전담기관화 추진 *공주와 교육병행, 훈련장비 등 이중화

- 시·도 교수인력(19명) 확보, 수용여건 개선(생활실 500명, 강의실 836명)

- 인 력 : 교수 7명(7학과), 교관 12명(화재·구조·구급·장비 분야별 3명) *사감병행
- 강의실 : 10실 836명(40명×7실^{개조 1실}, 60명×1실, 112명×1실, 384명×1실)
- 생활실 : 82실 500명(본관 260, 교육대 240) *시설증축 없이 수용여건 개선
- 용 역 : 총 20명 예상(청소 8, 전기·기계·건축 9, 경비 3) ← 공주에서 통합관리

※ 이전 후, 천안부지 교육운영 국유재산(토지·건물) 관리전환 사전협의·승인(기재부)

□ 추진일정

- 신임교육과정 운영 '18. 연중
- 천안부지 사용승인 협의(기재부) '18. 연중

4

소방연구소 설치를 통한 연구기능 활성화

정책 목표

소방연구소 설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보강
→ 소방안전 정책·대응의 Think-Tank 역할 강화

□ 주요내용

○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연구소(청 소속기관)로 확대 개편

- (조직) 1실 12명 → 1팀 3실 46명 / 직제 개정 추진('18년 또는 '19년 초)



※ 증원 34명 중 '18년 10명(연구4, 소방6) 보강, 24명(연구6, 소방10, 경력2, 시설 등 6) 확보

- (부지) 現 연구실 인근부지(75,233㎡) 매입(5,047백만원)

- (건축) 토목·건축 설계비(454백만원) → '19년 예산 반영 추진

○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연구과제 개발 및 성과물 고도화

- 소방·범부처 재난대응 R&D 장비개발(드론, 로봇 등) 실용성 강화

※ 실용화 자문단 300명 운영 활성화 → 정례 워크숍 연 1회, 분임토론회 연 2회

- '제1회 국민안전 발명대전' 개최(소방·경찰·해경·특허청 합동 주최)

※ 공모('18. 3월) → 평가 → 시상·전시(서울국제발명대전 연계 '18. 10월) → 상용화

○ 화재조사·안전사고 분석 등 현장연구 지원체계 강화

- 현장사고 예방프로그램 운영 → 사고저감 권역별 세미나 개최(연 2회)

- 대형화재 합동조사(감식·감정) 원인규명 지원 및 현장 검토회의

※ 즉시 현장조사반(3인 × 3조) 편성 운영, 청 119종합상황실과 출동체계 유지

○ 현장대응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연 2회)

- 선진국 재난대응장비 활용 사례 및 운영기술 방법 등 자료공유

□ 추진일정

○ '19년 소요정원·예산 확보, 직제 개정 '18. 연중

5 차질 없는 공주 교육연구단지 건립 추진

정책 목표

'17년 말 공정을 60% → '18년 10월 완공 → '18년 말 시운전·준공
→ '19년 6월까지 공주이전 교육 운영

□ 주요내용

- 공주 교육연구단지 이전시점까지 능동적인 공사개선 및 감독관리
 - 공주이전 준비단 구성·운영(16명) 및 건립추진단 파견 지원(3명)
 - 이전 후 교육운영이 가능토록 청사전반 시설장비 사전 시험가동
 - ※ 종합방재센터(건축·전기·기계·가스·CCTV), 실물화재시스템, 가상현실시뮬레이션 등
 - 인근 산림청 및 국토정보교육원과 경계펜스 설치
- 교육연구단지 외 진입도로 확장 협의(충남도·공주시)
 - 공주 마곡사 IC에서 교육연구단지까지 협소한 농어촌도로 조기 확장
 - ※ 중앙소방학교·행안부 건립추진단·감리단(CM) 협업 추진
- 사무공간 조성, 청사 용역관리, 이사비 등 '19년 이전비용 확보
 - 공주·천안 투트랙 교육운영 예산확보(청사용역, 공공요금, 수용비 등)
 - ※ "이전설계 및 원가계산 산출" 용역 결과를 토대로 '19년 이전비 등 예산 반영
- 2단계사업(11개소) 기본·실시설계 예산 확보(국유재산관리기금)
 - '09년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재난환경에 맞는 특수훈련시설 설계
 - (사업) 기간 '19~21년(3년), 사업비 715억 예상, 부지 총 3만㎡(연구부지 약 1만㎡)
 - (시설) 학술정보관, 복합기반·대규모대응 등 훈련장 7개소, 대응기술 등 연구동 3개소

□ 추진일정

- 이전비 등 '19년 예산확보 '18. 연중
- 공주 교육연구단지 공사관리·감독 '18. 연중

6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제도 운영

정책 목표

국가직화 대비 전국단위 신규 소방시험 일원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우수인재 채용

□ 주요내용

- '소방시험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고도화로 자동화·전산화 추진
 - * ('16년) 채점 프로그램 개발, ('17년)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18년) 원서접수시스템 고도화
- 필기시험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표준화(사전교육 시·도 파견관 운영)
 - ※ ─ (현행) 채용시험 이원화(중앙 경채 ↔ 지방 공채 시도 의뢰 중앙에서 통합문제 출제만 시행)
 - └ (개선) 채용시험 일원화(필기시험 문제출제 → 답안회수 → 채점)
 -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시·도 문제출제 의뢰 → 출제와 채점 의뢰)
- 국가 소방시험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험통합 운영 관리

< 전국단위 소방시험 운영체계 >

인재채용센터(중앙)	권역시험본부(지방)	총괄시험본부(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교육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소방시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원서접수 ~ 합격자 전산자동화 · 시험단계별 위원회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시험장 구성 운영 - 운영 매뉴얼에 따른 표준화 · 운영요원·감독관 사전교육 - 방송시험, 보안, 반출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별 파견관 운영 지원 · 시험운영 핫라인 구축 · 문제수송, 답안회수 등 총괄 · 출제오류 등 시험전반 결정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기·체력·신체·면접 등 시험 매뉴얼 화 → 전국공통운영

- 전국단위 시험업무 총괄 수행 전담인력 확충(8명 → 16명, 課 상향)
 - ※ ─ (현행) 1팀 8명 인력부족으로 시험운영 통합관리(파견 3명)
 - └ (개선) 시험단계별 책임관리(시험기획팀 6, 시험운영팀 6, 기술지원팀 4)
 - (개정) 직제 규칙 팀장 소방정 또는 소방령 → 과장 소방정(학교 직속기관)

□ 추진일정

- 소방시험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고도화 '18. 연중
- '19년 소요정원 확보 및 제도개선 '18. 연중

7

실전형 교육훈련장 건립 및 전술훈련 강화

정책 목표

첨단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 보강, 교육기법 도입을 통해 교육훈련
신진화 → 현장에 강한 핵심인재 양성

□ 주요내용

- 「공주 교육연구단지」 교육훈련시설 구축과 연계한 기법 숙달
 - 실물화재훈련장 시공사(하젠社)와 시공단계부터 훈련기법 연구
 - ※ 공사단계부터 국제 훈련시설 설치기준 준용(선진훈련시스템 벤치마킹 결과 반영)
 - 신기술이 적용된 가상훈련 시뮬레이션 6종* 구축 및 운용능력 배양
 - * 소방지휘훈련, 통합지휘훈련, 특수소방차량 조법, 상황관리, 소방시설, 응급구조
- 교육수요 확대 및 환경 변화에 차질 없는 교육운영 준비
 - 부족 인력은 파견인력*으로 충원, 장기복무(1년 단위) 유도로 노하우 축적
 - * 의무소방·소방사 등 교육훈련에 적합한 시·도(34명) 파견인력 충원(우수인력 전입)
 - 실물화재·특수상황·체험 등 시설별 작전·전술교범 체계화
 - ※ 강의중심에서 실물화재 체험 등 재난현장 실습중심으로 교육운영 절차 마련
- 교육훈련장에 적합한 장비 보강 및 운용기술 습득
 - '18년 사업비 : 2,159백만원(차량 6종 1,905백만원, 장비 254백만원)
 - ※ 교육연구단지 이전과 연계 노후 차량 및 장비 전면 교체토록 '19년 소요예산 요구

□ 추진일정

- 교육훈련장 훈련교범 마련 '18. 연중
- 전문 현장대응기법 개발 및 적용(자격인증제 병행 추진) ... '18. 연중
- 교육훈련장 장비 보강 '18. 연중

8. 중앙119구조본부

Contents

1. 신속한 현장대응 역량강화 /	189
2. 효율적인 대응기반 조성 /	190
3. 고강도 교육훈련으로 최강의 구조대원 육성 /	191
4. 합동방재센터 운영 활성화 /	192
5. 특수구조대 및 신규 화학구조센터 건립 /(국정과제)	193
6. 특수구조대 · 화학센터 등 현장인력 보강 /	194

1 신속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

정책
목표

클든타임내 특수구조대를 집중 투입하여 재난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총력대응 출동시스템 구축 및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 주요내용

○ (대응역량 강화) 국가적 총력대응 출동시스템 확립

- 대형재난 신속·효과적 대응을 위한 소방력 조기 집중 투입*

* 재난발생 초기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육상 및 항공(신속대응팀) 출동대 동시 출동

육 상	(대응1단계) 1특구대 1화학센터 (대응2단계 ↑) 2특구대 1화학센터 이상
항 공	(대응1단계) 헬기 1대 (대응2단계 ↑) 헬기 2대 * 헬기 대당 신속대응팀 5명 이상

- 재난규모에 따른 출동소방력 단계별 강화* 및 현장지휘본부 운영
- * 1단계(당번 근무자) → 2단계(당번+훈련 근무자) → 3단계(당번+훈련+비번 근무자)
-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 공조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능력 배가

○ (출동체계 개선) 신속출동체계 구축 및 상황관제시스템 보강

- 선출동 후보고 체계 명확화* 및 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 (목표) 헬기 이륙부터 110km이내 현장상공 30분 도착 / 차고탈출 주간2분, 야간3분

- ** 시·도 상황실 출동지령시스템 연계망 구축, 상황실 수보대·작전실 보강('18년)
- 재난유형별 출동대 사전편성 및 헬기 신속출동시스템 가동

사전대비단계	⇒	신고접수 ~ 이륙단계	⇒	현장도착
· 장비 유형별 표식화 및 재난 유형별 모듈화(27종 98점)		· 예비방송 도입, 조종사 역할 분담, 계류장 전진배치		· 레펠, 패스트로프, 호이스트, 화물망이용 신속 투입

- 중구본 전년대비 출동건수 26.5% 증가*

* (최근 3년간 출동건수) '17년 978건, '16년 773건, '15년 615건

○ (국제위상 제고) 해외재난 대비 국제구조대 운영 활성화

- 신속한 해외재난 출동태세 확립 및 소방력 보강*

* 신속출동(파견결정 24시간내 출국), 인력풀(202명), 보유장비(169종 8,904점)

- UN INSARAG Heavy등급에 걸맞는 위상 제고*

* 수준유지훈련(반기별), 국제회의(3회), 교양함양(외국어) ⇒ KOICA 공조체계 강화

※ 국제 출동 ⇨ 14개국 15회(구조 1명, 수습 793명) * '95. 12월 발대 이후

□ 추진일정

- 총력대응 출동시스템 운영 '18. 1월
- 출동·상황관제시스템 보강 연 중

2 효율적인 대응기반 조성

정책 목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장비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장비구매·관리, 특화된 인명구조견 양성·보급 확대

□ 주요내용

○ 현장대응 인력·장비 인프라 확충

- 특수구조대 및 화학구조센터 등 인력 확보('18년 43명)
- 헬기 미배치 호남 및 충청강원대 대형헬기(2대) 보강 추진*
* ('17.9.29) 계약체결, ('18년) 1차 중간검사, ('19년) 2차 중간검사, 최종검사 및 인도
- 특수차량 및 구조장비 지속적 교체·보강*
* (신규) 차량 4종 8대/장비 109종 1,608점 / (노후 교체) 차량 5종 5대, 장비 47종 513점
※ 차량 보유율(96%), 노후율(7%) / 구조장비 보유율(특구대 71%, 센터 75%) / 개인장비(100%)

○ 소방헬기 및 특수구조장비 구매·관리시스템 개선

- 소방장비 규격심의회* 및 실명제를 통한 공정성·투명성·전문성 제고
* 분야별(4개) 규격작성·심의 인력풀 156명 구성(외부 89명, 내부 67명)
- 장비별 검수·검사전담반* 운영을 통한 납품검사체계 개선
* 전문검사반 : 60명(차량 10, 소방장비 26, 화생방장비 12, 항공장비 12)
- 예산이월 방지를 위해 장기간 제작 예상 장비 2개년 사업으로 편성*
* '17. 10월부터 '18년 사업 기초조사 및 '18. 1월 발주 목표로 추진

○ 재난유형별 특화된 인명구조견 양성시스템 구축

- 유형별 훈련시설* 활용으로 특화된 인명구조견 양성
* 재난훈련장(실내탐색·건물붕괴·풍수대응·기초탐색), 종합전술훈련장(장애물, 복종)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견 확대·보급*
* (기존) 9개 기관 29두 / 중구본,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확대) 10개 기관 35두 / 신규(충북3), 노령견 교체 등 추가(경기1, 제주2)
- 인명구조견 전문교육훈련 운영* 및 경진대회 개최**
* 교육훈련 : 입문교육(기초반, 전문반), 특별교육(복종, 장애물, 수준유지교육)
** 경진대회 : 국내경진대회 개최('18.5월), 세계경진대회 참가('18.9월)

□ 추진일정

- 인명구조견 경진대회 개최 '18. 5월
- 대형헬기, 특수차량 및 구조장비 교체·보강 연 중

3

고강도 교육훈련으로 최강의 구조대원 육성

정책 목표

재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선진 구조기법 습득 및
전문교육훈련 과정 운영으로 최정에 전문구조대원 양성

□ 주요내용

- 기본에 충실한 상시 교육·훈련체계 확립
 - 일과표에 의한 교대점검 및 일상 교육훈련 ⇒ 청 표준안 준용
 - 개인·팀훈련 구분 실시로 효과 증대 : 장비조작(오전), 구조전술(오후)
- 전문구조대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구조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 구조훈련 과정 확대 운영(연중)

전문교육훈련	13개 과정 14회 249명 (17년도 : 10개 과정 15회 241명)
현지적응훈련	재난유형별(산악·수난·붕괴·화생방 등) 실제 현지훈련 강화

 - ※ 핵심역량 강화 분야 심화과정 별도 운영(로프, 수난, 화생방, 도시탐색)
 - 신 구조기법 습득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3개 과정 10명)
 - 구조기술 점검을 위한 특수구조전술훈련 평가 실시(분기별 1회)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선진 구조기법* 도입
 - 국제위험물대응 등 5개 과정 (미국 등 5개국, 소요예산 : 119백만원)
 - * 급류구조, 항공구조, 위험물, 심해잠수, 로프구조 ※ '18년 5회 26명 예정
- 헬기 운용능력 강화 및 사고방지대책 적극 추진
 - 헬기 시뮬레이터교육센터 운영 '18.10월, 비상대응매뉴얼 제작 '18.1월, 유관기관MOU
 - 비행교범 연찬 안전교육(매일), 전문가 초빙교육(분기), 동승무원자원관리훈련(JCRM, 분기)
-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률 제고
 - (목 표) '17년 자격 보유율 40%*(95명) → '18년 60%(142명) → '19년 80%(189명)
 - * 40% : 현장 구조대원 236명 중 1급 6명, 2급 89명(보유율 : 특구대 53%, 화학센터 26%)
 - ※ 사유 : '16년~'17년 신입·전입자 중 유자격자 소수(16/88명), 자격취득여건 미흡 등
 - (여건개선) 훈련장·훈련장비 확보, 부서별 유자격자 가이드라인 설정
 - (교육강화) 위탁교육(년 2회), 자체 양성교육(2회→3회), 현장적응교육(시험장)
- 현장지휘본부 가동훈련(분기1회), 특수구조 전술경연대회 개최(매년)

□ 추진일정

- 특수구조 전술훈련 경연 대회 '18. 9월
- 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설치운영 '18. 10월

4 합동방재센터 운영 활성화

정책
목표

화학사고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합동방재센터 훈련기반 마련 등
인프라 구축으로 초동대응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주요내용

- 화학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 강화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점검·현지훈련 주기적 시행(월 1회)
 - 수준별 전문교육훈련(기본·심화과정) 및 위탁교육(화학물질안전원 등)
 - 합동방재센터 부처별 공조 강화(실무협의회 주1회, 운영위원회 분기1회)
- 화생방사고 훈련기반 마련을 위한 제독훈련장 설치
 - 화생방제독차 살포훈련장 및 인원·장비 제독실습장 조성
 - 훈련지원시설(강의동·행정동) 및 부대시설(폐수처리장) 구비

'18년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	'19년도 설계 및 착공	⇒	'20년도 준공 및 운영
------------------------	---	------------------	---	------------------

- 화학구조센터 출동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 지역별 출동현황을 분석하여 배치소방력 차등 운용(울산 24%, 서산 11%)
 - 재난유형별 출동현황 반영하여 대응장비 적정 배치(누출>화재>폭발사고 순)

구분	계(%)	시흥	익산	구미	서산	여수	울산
누계	804(100)	159(19.8)	104(12.9)	120(14.9)	88(10.9)	141(17.5)	192(23.9)
2016	316	73	35	57	35	38	78
2015	246	47	45	30	29	46	49
2014	242	39	24	33	24	57	65

구분	계(%)	누출	화재	폭발	구조	기타
최근3년 ('14~'16)	804 (100)	329 (41.0)	322 (40.0)	41 (5.1)	29 (3.6)	83 (10.3)

※ '17년 말 기준 출동건수 351건(전년 대비 11% 증가)

□ 추진일정

- 출동현황분석 및 소방력 재배치 '18.1분기
- 합동점검 및 현지훈련 연 중

5

특수구조대 및 신규 화학구조센터 건립

정책 목표

육상재난 초등대응 기반구축 및 화학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호남,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청사 신축 및 충주화학구조센터 신설

□ 주요내용

○ 호남 및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청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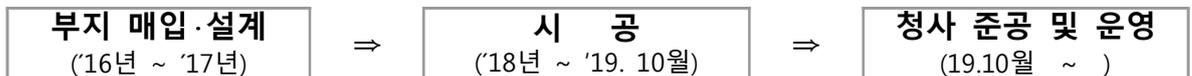
구 분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위 치	전남 화순군 이양면 330-1번지 일원	충주시 주덕읍 1107, 1108번지
면 적	(부지) 107,130㎡, (연면적) 5,968㎡	(부지) 112,575㎡, (연면적) 5,736㎡
예 산	282억원(부지 31, 설계 9, 건설 242)	378억원(부지 144, 설계 10, 건설 224)
사업기간	'16.6월 ~ '19.10월	'16.6월 ~ '19.10월

- 수용인원, 배치장비 등을 고려한 최적의 시설* 조성

* 주요시설 : 본관동, 종합훈련타워, 인명구조센터, 항공대

- 관련업체(시공, 감리, 조달청 등) 협의 통한 세부 공사계획 수립 및 추진

- 청사건립 T/F 운영을 통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신설

- (시 설) 임시청사* 운영 → '19년 이후 신청사 건립

*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예정(충주시 무상제공)

- (인 력) '18년도 14명 확보(2교대) → '19년도 8명 추가(3교대)

- (장 비) 초기대응 필수차량 등 장비* 우선 구매 배치

* '18년 예산확보 : 1,186백만원(차량 : 556백만원, 장비 : 630백만원)

□ 추진일정

- 충주화학센터 관련 부처협의 '18. 1분기
- 충주화학센터 운영 '18. 3분기
- 호남 및 충청·강원대 신축공사 연 중

6 특수구조대 · 화학센터 등 현장인력 보강

정책 목표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특수구조대 및 화학센터 등 현장인력 확보로 육상재난 중추대응기관으로의 역할 수행

□ 주요내용

○ 정원/현원('17년말)

구분	계	본부	특수구조대				화학구조센터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강원	시흥	구미	울산	익산	여수	서산
정원	378	57	76	46	46	21	22	22	22	22	22	22
현원	348	62	69	56	24	19	20	20	20	20	19	19

○ '18년 증원 : 43명

- 충청·강원대 구조대원 25명 (대장 1명, 팀원 8명×3교대)
- 충주화학센터 구조대원 14명 (센터장1, 일근1, 팀원6명×2교대)
- 인명구조견센터 훈련사 4명 (현 4명 → 8명)

○ 연차적 증원계획 추진 ⇒ 현장 부족인력 100% 보장

- '21년까지 부족인력 271명 보장(정원 '17년 378명 → '21년 649명)
- '19년도 특수구조대, '20년도 화학센터 부족인력 집중 보장

연도	정원	순증	본부	특수구조대(4)					화학센터(7)			비고
				소계	수도권	영남	호남	충강	소계	기존(6)	충주	
'17	378	31	57	189	76	67 (46)	46	0 (21)	132	132	0	충강대(21명) 영남대 인력 활용
'18	421	43	4	25				25	14		14	충강대 25, 충주센터 14, 구조견훈련사 4
'19	523	102	6	88	7	16	22	43	8		8	4개대 부족인력 88, 충주8, 지휘정보3, 청사시삽3
'20	609	86	2	0					84	72	12	7센터 부족인력 84, 구조견훈련사 2
'21	649	40	10	30			15	15	0			항공팀 30 (헬기2대 도입) 헬기정비창 10
정원누계	649	271	79	332	83	83	83	83	238	204	34	

※ 기준인력 : 특수구조대 83명 [(신속대응팀 17명×3팀) + 항공팀(10명×3팀)]+대장+항공팀장
화학구조센터 34명 [7명(차량7대)+구조인력 4명]×3팀+센터장

□ 추진일정

- 증기인력운용계획 반영 '18. 1분기
- '19년 소요인력 반영 '18. 3분기

